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제315회 정례회 : 2022. 11. 1.(화) ~ 12. 22.(목) <52일간>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회 행정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주요 감사대상 업무

- 2021. 11월 ~ 2022.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3 감사 착안 사항

감사대상 선정 기관 : 198개 기관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구 분	계	운 영	행 사 정 치	기 경 회 제	환 경 수 자 원	문 화·체 육 관 광	보 건 지	도 시·인 전 건 설	주 공 택 간	도 시·계 획 균 형	교 통	교 육
계	198	3	12	16	28	12	68	44	5	6	4	42
위원회 의 결	117	3	9	7	28	6	7	44	4	5	4	42
본회의 의 결	81	-	3	9	-	6	61	-	1	1	-	-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 선정기관(117),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81)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17)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81)
운영위원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기획관 ○ 민생사법경찰단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인재개발원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제위원회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 경제정책실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여가국(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도시여가국 - 공원여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 중부, 서부, 북부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 상수도사업본부(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수도사업소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17)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수도사업소 • 동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강서수도사업소 • 남부수도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 강동수도사업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수도자재관리센터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p>문화체육관광 위원회 (1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 ○ 홍보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p>보건복지 위원회 (6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정책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영보자애원 ○ 복지정책실 소관(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17)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81)
		<p>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시장애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p> <p>○ 시민건강국 소관(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17)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81)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업소(6개소) 포함 ○ 소방재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학교 - 서울종합방재센터 - 특수구조단 - 소방서(25개소) ○ 물순환안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재생센터(2개소) 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소 포함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 택 공 간 위 원 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실 ○ 미래공간기획관 ○ 디지털정책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디지털재단
도시계획균형 위 원 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국 ○ 균형발전본부 ○ 디자인정책관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미래청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디자인재단
교 통 위 원 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교 육 위 원 회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위원회명	위원회 의결 선정기관(117)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4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17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11개소)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4

감사위원회 편성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1	운영위원회 (1 3)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김규남, 박춘선,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박수빈, 정진술, 한신	이병수, 오범주, 박태현, 안정현, 박순중, 김우영, 박수형, 피한나, 임재빈, 최정윤, 김윤미
2	행정자치위원회 (9)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김태한, 김석기, 김정덕, 류홍섭, 최석훈, 정찬일, 이태기, 최문숙, 손정욱, 박소현, 김경선, 강태영, 이슬기, 윤희량, 윤주이, 정주현, 이정수
3	기획경제위원회 (1 2)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강상원, 김성만, 정진영, 이시우, 최범준, 김용우, 박은샘, 노혜미, 이성찬, 안나현, 오현희, 정희숙, 노가빈, 이지혜, 신현두, 양성욱, 서인석
4	환경자원위원회 (9)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피재황, 이재남, 박귀수, 배성진, 조창훈, 유시범, 방우리, 김경미, 박완규, 조혜주, 김경혜, 이지희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주우철, 우명섭, 임창균, 이은성, 이지영, 박지혜, 심형준, 김경민, 홍민지, 이순복, 박은비, 홍수희, 김동규, 이원재, 정재운
6	보건복지위원회 (9)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박지향, 황동연, 이일우, 이병운, 심선영, 이준혁, 손은영, 이정화, 이윤진, 우현재, 도미화, 김종훈, 신현태, 박서영, 김지혜, 김동규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 직원
7	도시안전설 위 원 회 (1 1)	송도호	김용호 박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 신	이상근, 고은미, 진현우, 박남권, 심현보, 권혁일, 정민선, 김성연, 유은아, 김시환, 최수정, 공혜정, 임태정, 윤주이, 박희석, 박진수, 박진희
8	주택공간 위 원 회 (1 3)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 석,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신동원,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오정균, 문주택, 김성연, 주승원, 안현숙, 윤상엽, 박영신, 임경숙, 한승윤, 최지현, 송명희, 김태훈, 김다운, 박주선, 김영광, 유새롬
9	도시계획 위 원 회 (1 3)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 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조성준, 김상원, 하미경, 최정희, 노태학, 김고은, 한홍재, 김금란, 김연희, 이지인, 장미영, 박정열, 김영대, 고은솔, 강주연, 박성원, 홍수동
10	교통 위 원 회 (1 3)	박중화	이병윤 이상훈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임규호	장 훈, 민향식, 박준영, 배효인, 온순현, 이성엽, 안진주, 김유라, 두미정, 박은영, 이동남, 김광수, 김주완
11	교육 위 원 회 (1 3)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김창범, 박광선, 이준석, 채일룡, 정진국, 이가영, 김한수, 최원종, 김지수, 김성우, 채학기, 백경하, 이현주, 서호정, 조지훈, 양옥수, 고은하, 이진석, 최웅재, 박세경

5

감사일정 및 장소

1.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운영위원회	11.15.(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실	

2.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행정자치위원회	11. 2.(수)	10:00	○ 재무국	행정자치위원회실	
	11. 3.(목)	10:00	○ 자료정리		
	11. 4.(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 7.(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기획관 ○ 자치경찰위원회 		
	11. 8.(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인재개발원 		
	11. 9.(수)	10:00	○ 행정국		
	11. 10.(목)	10:00	○ 자료정리		
	11. 11.(금)	10:00	○ 평생교육국		
	11. 14.(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사법경찰단 ○ 감사위원회 		
	11. 15.(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감사미 실시 ※ 운영위원회 감사 		

3. 기획경제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기획경제위원회	11. 2.(수)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연수실	
	11. 3.(목)	10:00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11. 4.(금)	10:00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대회의실	
	11. 7.(월)	10:00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 8.(화)	10:00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 9.(수)	10:00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10.(목)	10:0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11.(금)	10:00	○ 경제정책실 ○ 서울시립과학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14.(월)	10:00	○ 기획조정실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4.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환경수자원위원회	11. 2.(수) 11. 3.(목)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 4.(금)	10:00	○ 서울에너지공사		
	11. 7.(월)	10:00	○ 푸른도시여가국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11. 8.(화)		- 푸른도시여가국 - 공원여가센터(4개소)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11. 9.(수)	10:00	○ 자료정리 및 보충감사		
	11.10.(목) 11.11.(금)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11.14.(월) 11.15.(화)	10:00	○ 한강사업본부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 2.(수)	10:00	○ 120다산콜재단 ○ 세종문화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1. 3.(목)	10:00	○ 미디어재단티브이에스 ○ 홍보기획관		
	11. 4.(금)	10:00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11. 8.(화)	10:00	○ 대변인 ○ 서울시립교향악단		
	11. 10.(목)	10:00	○ 서울관광재단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11.11.(금)	10:00	○ 서울문화재단 ○ 문화본부		

6.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보건복지위원회	11. 2.(수) ~ 11.4.(금)		○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 7.(월)	10:00	○ 복지정책실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1. 8.(화)	10:00	○ 복지 관련 기관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시장장애인인권센터)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11. 9.(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11. 10. (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 동부여성발전센터 - 서부여성발전센터 - 남부여성발전센터 - 중부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 서부아동복지센터 (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영보장애인 		
	11.11.(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행정사무감사 - 고양정신병원 - 보라매병원 		
	11.14.(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11.15.(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 ○ 직영 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위탁 병원 -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건강 관련 기관 -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1. 2.(수)		○ 자료검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 3.(목)		○ 자료검토		
	11. 4.(금)		○ 자료검토		
	11. 7.(월)	10:00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11. 8.(화)	10:00	○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1. 9.(수)	09:30	○ 현장확인감사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11.10.(목)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11.11.(금)	10:00	○ 소방재난본부		
	11.14.(월)		○ 자료정리		
	11.15.(화)	10:00	○ 안전총괄실		

8. 주택공간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주택공간위원회	11. 2.(수)	10:00	○ 주택정책실		
	11. 3.(목)	10:00	○ 주택정책실		
	11. 4.(금)		○ 현장확인감사	서울데이터센터	
	11. 7.(월)	10:00	○ 미래공간기획관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11. 8.(화)	10:00	○ 디지털정책관 ○ 서울디지털재단		
	11. 9.(수)		○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11. 10.(목)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1. 11.(금)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1. 14.(월)	10:00	○ 디지털정책관 ○ 서울디지털재단		
	11. 15.(화)	10:00	○ 주택정책실 ○ 미래공간기획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도시계획 균형 위원회	11. 2.(수)	10:00	○ 균형발전본부	도시계획균형 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확인	
	11. 3.(목)	10:00	○ 균형발전본부		
	11. 7.(월)	10:00	○ 도시계획국		
	11.10.(목)	10:00	○ 미래청년기획단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1.11.(금)	10:00	○ 디자인정책관		
	11.14.(월)	10:00	○ 서울디자인재단 ○ 도시계획국		

10. 교통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교통위원회	11. 2.(수)	10:00	○ 도시교통실	교통위원회실	
	11. 3.(목)	10:00	○ 도시교통실		
	11. 4.(금)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11. 7.(월)	10:00	○ 서울교통공사 - 9호선운영부문 - 서울메트로환경(주)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 서해철도(주) <포함>		
	11. 8.(화)	10:00			
	11.10.(목)	10:00	○ 서울시설공단		
	11.14.(월)	10:00	○ 도시교통실		
	11.15.(화)	10:00	○ 감사결과 정리		

11. 교육위원회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교육위원회	11. 2.(수)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감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무]	교육위원회실	
	11. 3.(목)	10:00			
	11. 4.(금)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일	시간			
	11. 7.(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감비서실, 부교육감,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		
	11. 8.(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감비서실, 부교육감,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평생진로교육국, 학 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11. 9.(수)	10:00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교육감비서실, 부교육감,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 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4), 도서관(17) 소관 사무]		
	11.10.(목)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		
	11.11.(금)				
	11.14.(월)	10:00	○ 교육지원청(11개 기관) (교육감비서실,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 ○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 및 총평 (교육감, 부교육감 및 소관 실국, 직속기관 등)		

6

감사결과 총괄표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610	1,585	951	1,074
운 영 위 원 회	96	46	23	27
행 정 자 치 위 원 회	389	153	141	9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439	230	95	114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371	146	115	110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341	155	101	8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328	118	107	103
도 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280	178	32	70
주 택 공 간 위 원 회	315	106	105	104
도 시 계 획 균 형 위 원 회	178	65	42	71
교 통 위 원 회	411	201	66	144
교 육 위 원 회	462	187	124	151

시정·처리요구 사항 ----- 1,585건

1. 운영위원회 ----- 46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7건

1. 전국장애인연합회 시위에 대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과의 소통 및 대응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3.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자치구로 내려가고 있는데, 시정 가치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장 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서 관리 및 점검이 제대로 되어야 하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교육,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교육청과 협치하며 서울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원하기 바람.
4. 중구 회현 시범아파트의 경우, 철골이 휘고, 냉난방이 안되는 등 환경이 열악함과 관련 올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부재함.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람.
5. 투자출연기관 성비위 대응매뉴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투출기관에 대해 서울시가 철저히 대응하기 바람.
6. 투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목표가 미비했는데, 관리가 필요. 투자출연기관 평가시, 정성·정량평가에 집중된 배점이 보임. 경영평가표 배점에 대해 점검 요함.
7. 지난 7월 시장이 쪽방촌 방문시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발언은 실언임. 시장을 모시는 사람들이 시장의 발언에 신경쓰도록 해야 함.

□ 시의회사무처 : 39건

1. 행자위 회의 중 방송,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방송장비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시의회 회의 영상과 음향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영상:언론홍보실,의사담당관 / 음향:의정담당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영상 송출에 반복적인 문제 발생.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조례안 등 본회의 상정 안전에 대해 별도의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안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배부하기 바람.
4.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무처에서 책임지고 수합하는 업무 담당을 지정해 대응 바람.
5. 전직 시의원, 퇴직 공무원 등 비용추계 등 의회운영 관련 시스템(아카이브, 의정플러스 등) 사용자 권한 삭제 등 관리 점검하기 바람.
6. 시의회 출입관리시스템에 시의회 퇴직자의 출입 권한 삭제 조치 등 관리 철저.
7. 청사 출입 관련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국회나 정부청사, 타 시도의회 기준을 살펴서 적절한 규정 마련. 경기도와 정부청사 기준에 비해 서울시의회 출입 규정 관리가 잘 안되어 있으니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보고 바람.
8. 의원연구실 출입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 징구 검토.
9. 의원연구실 보안 강화를 위해 의원 퇴근 시 연구실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10. 부서를 책임져야 할 전문위원실, 담당관실 관리자급(4,5급) 직원들이 매 학기 2개 학교에 출강하는 등 사무처 직원들의 출강 횟수가 과다하여 명백한 업무태만이 발생하고 있음. 본업인 의원 보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 필요.
11. 서울시립대 등 피감기관에 사무처 직원들의 출강이 이해충돌에 저촉되는지 확인 필요.
12. 코로나 엄중 시국에 지방에서 골프치고, 방역 수칙과 복무지침을 위반한 직원을 개방형 임기제에 임용하는 등 사무처 복무관리 인사시스템 문제가 심각함. 따라서 직원의 비위 사실 및 복무 관리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는 사무처 내 감사 담당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 바람.

13. 사무처 직원 근태 관련, 근태 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으며, 지각 적발자도 거의 없어 관리가 소홀함. 근태를 승진이나 다면평가 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 기존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재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따른 표준화된 징계 수위를 마련하도록 할 것.
14.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가 관대한 편으로, 사무처만의 엄정한 징계기준 마련.
15. 시의회는 직원수 450명에 불과하여 서울시와 규모가 달라 다면평가 모수가 적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부족함. 규모가 다른 서울시와 같은 기준으로 승진, 인사 시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모수가 7명 정도로 적은 상태에서 다면평가를 했을 때 누가 나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다 알면서 서로 불편해서 어떻게 일을 할지, 즉 사무처 내부의 화합과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란만 야기하는 인적운영이 아닌지 우려스러움. 다면평가는 법령상 강제가 아닌 참고사항인데 사무처에 필요한 적절한 인사평가 방침에 대한 용역을 해서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면평가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6. 시의회30년사 발간 사업 관련, 기 발간된 의회백서를 베껴(심지어 블로그) 쓰는 등 심각한 내용 표절, 정치편향성 및 담당하던 전 수석전문위원의 친분 관계로 구성된 집필진, 부실한 내용임에도 고가의 원고료 지급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또한 의회사무처는 예산 4억원의 시의회30년사 발간 사업에 대한 착수 및 중간보고, 내용 검수, 예산의 사용 등에 대한 사업의 관리 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시의회30년사 집필료 등 비용 반환을 검토하고, 시의회30년사 발간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를 요청함.
아울러, 시의회30년사를 역사편찬원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했는데 시행령상 재배정계획서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재배정을 받았는지. 재배정계획서는 받았는지 등 감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17. 공무국외활동 심사 시 상임위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 결재를 받고 심사위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심사과정에서 계획서가 수정될 경우 비용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절차 개선 방안이 필요함.
18.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정책지원관이나 의원 연구실이 아닌 언론홍보실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9. 시의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청, 경기도의회 유튜브에 비해 콘텐츠의 질, 구독자수 및 좋아요수 부족하여 비교가 됨.
20.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안에 대한 제안 요지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보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작성 필요.
21. 케이블TV 방송송출 업무협약 재검토. 케이블TV 홍보보다는 의원활동에 대한 권역별 촬영 용역시행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하여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22.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케이블TV 가입자수 감소로 영향력이 낮는데, 케이블 방송보다 의원 개인 유튜브 제작 지원 등 의원 홍보를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 바람.
23. 의원 명함 제작단가 합리적 개선 필요. 언론홍보실에서 제작한 명함의 단가가 턱없이 비싸고, 의원별로 명함 단가도 다름.
24. 메타버스 관련 사업예산 10억이 올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25. 총 75개 지역신문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떨어져 홍보의 효과성에 의문이 들며, 자치구별, 언론매체별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광고비 집행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26. 10대 때 지역신문 광고 편중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공평한 배분 필요.
27. 의회 홍보예산이 올해까지 2달 남았는데 집행률은 57%에 불과함. 지방선거는 4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사무처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11대 개원 준비에 미흡했던 것에 대한 개선 필요.
(의원 수첩의 늦은 배부 및 의회사무처 조직 진단 용역이 상반기 끝났어야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는 등 앞으로 시정 바람)
28.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사무처의 전반적인 사업 부진 해소 바람.
29. 정책지원관 관리 및 운영체계 재검토.
30.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상임위 안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 지시는 사무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받고 있어 업무 전달이나 공유가 잘 안되고, 근태 관리 또한 안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 정책지원관 개인별 능력차가 큰데 이에 대해 교육계획이나 업무매뉴얼 필요. 의회 맞춤형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할 것.
32. 초선, 재선 의원 대상 맞춤형 교육과 의원 임기 4년에 맞춰 중장기 교육 로드맵 등 내실있는 교육을 운영하기 바람.
33. 전년 대비 낮은 성과 목표 설정으로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보수적인 성과 목표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해주기 바람.
34. 의원연구실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기기와 연동이 안 되어 있으니, 기기를 전수조사하여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35. 여성 화장실 안심벨이 설치되는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니, 이에 대한 여성 화장실 안전 문제 해결방안 필요.
36. 방향제, 음악송출 등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 환경개선 필요.
37. 의회 시설물 관리 개선 필요
(중요 귀빈 방문 기념품 준비, 연구실 방음장치 설치, 의원 부재시 출입제한, 체력단련실 소모품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철저)
38.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으로, 사무처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정보 공유 바람.
39. 의원연구실은 의원 업무공간으로 자료 전달 등의 이유로 집행기관 직원이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원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실 앞 사물함 설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행정자치위원회

----- 153건

비상기획관 : 9건

1. 세 가지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민방위 교육을 개선하여야 함.
 - 전시 민방위 대원이 소속, 임무,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민방위 대피소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과정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게끔 하는 방식 등을 교육내용에 도입할 것.

- 민방위대원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흥미를 높이고, 주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전쟁, 시가전 등 달라진 현재전양상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
-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업무보고에는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않고, 민방위교육도 기존교육을 답습하고만 있음. 전·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목표 실현에 맞고, 달라진 시대상황·전쟁양상·현실을 반영하여 민방위 업무·시스템·교육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함.
- 3. 민방위 교육 시 연령층에 맞는 세대별 맞춤 교육이 필요.
- 4. 행정감사자료에서 비상기획관 비상대피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확인하면 해마다 총평이 거의 대동소이하여 매년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현장 중심의 직접적이고 내실있는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5.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이때에, 안보정책자문회의 위원들의 참석률은 저조함. 안보정책자문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 6. 민방위대피시설에 전시 급수시설이 중요하니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유사시 사용 가능한 점검 및 조치 요구.
- 7. 안보의식함양 사업 주체 및 지원 다양화 - 안보의식함양 사업으로 재향군인회 1곳에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등록된 25개 비영리단체에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여, 매년 반복되는 동일 사업이 아닌 공모를 통한 질 좋은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주길 바람.
- 8. 민방위 대피시설을 시민에게 알리는 기존 홍보 방식(앱, 지하철 광고 등)은 효과가 크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방안 강구할 것(학교통신문 발송, 전입신고 시 대피소 안내, 통반장·경로당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용 등의 방법).
- 9. 기존 민방위 마크 3색은 경계경보(황색), 공습경보(청색), 해제경보(녹색)

를 의미함. 새로운 민방위복의 마크는 건·곤·이·감을 새겨 넣었으나 그 의미를 알 수 없음. 민방위 대피소의 안내표지판은 민방위 마크와 동일하고, 유사시에 시민들은 표지판을 확인하고 이동함. 급작스러운 민방위복과 마크의 교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 민방위복과 마크의 교체가 꼭 필요한 일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불가피할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 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10건

1. 시민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사경에서 직원 출장비 과다 지급 문제를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음. 민사경 내부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므로 향후 출장 수당 부정 수령 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길 바람.
2. 범죄양상이 정교해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수사인력의 숫자와 질 모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디지털 포렌식 수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
3. 감사위원회로부터 출장수당 과다지급, 유연근무제 출결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지적받았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수사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그 이유로 코로나의 확산, 자치구 파견 직원 부족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함.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의 개선도 중요함. 실제 수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내년에 예산을 쓸 때는 월별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6. 민생사법경찰단 내부직원의 재직기간이 짧는데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해 보임. 재직기간을 늘려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줄 것.
7.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민사경이 5등급을 받음.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대로 모색해 주길 바람. 이후 청렴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해 의회에 보고 바람.

8. 민사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강의 내용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관련 사안에 대해 파악할 수가 없음. 행감 자료 제출 시 직무와 관련된 소송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
9. 대리입금이라는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상공개, 폭행 등의 2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음. 사무 해당 여부에 따라 사안을 보거나 칸막이를 만들지 말고, 수사와 예방은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10. 동물보호와 같은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홍보를 강화해야 함. 온라인 홍보가 주이긴 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이 효과는 더욱 뛰어나므로 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길 바람.

□ 행정국 : 23건

1. 서울혁신파크 사업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로부터 20개가 넘는 지적 사항이 발생했음. 이에 관한 시정사항 보고하길 바람.
2. 서울혁신파크 재개발까지 2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재개발 터를 방치하지 말고 해당 공간을 은평구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세울 것.
3. 지원받는 비영리단체를 선정할 때 촘촘히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처음 선정 목적에 맞지 않게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게 페널티를 부여해 원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할 것.
4. 일련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임시장 업적지우기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의심이 듦. 합리적·논리적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바라보고 검토하길 바람.
5.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는 권고에 불과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관련 행안부 지침(사고, 사망자로 쓸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참사의 책임자로서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 부적절한 분향소 명칭 사용·변경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함.

6.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 변경 관련, 유족이 울분을 토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나서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변경했다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므로 정정할 것.
7. 힐링센터 상담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지 않음. 공무원들을 위한 마음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
8. 힐링센터 상담신청 시 개인신상정보는 최소한만 기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신청지를 수정할 것.
9. 청사 매점에 대해 내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점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0. 용역을 발주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세워 비슷한 내용으로 용역이 발주되는 확률을 줄이도록 하고, 되도록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진행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11. 대외직명제 규정이 시행된 지 10여년에 이르는데도 변동이 없고,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부서에서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직명제에 대한 허술한 운영과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업무분야 표시 없이 사용하는 대외직명도 허다해 시민들이 담당직무를 파악할 수 없는 불편이 일고 있기에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외직명 방침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함. 대외직명의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함.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이 미흡함. 다양한 사업이 개설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13. 주민자치회 사업의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함.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사업 예산을 늘려야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자치사업이 가능함.
14.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를 시정할 것.
15. 청원경찰 및 공무원의 낙후된 복리후생에 대해 개선할 것. 또한 이들의 고충을 전담해서 해결해주는 부서를 신설해야 함.
16. 시청, 구청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수신 대기 중에도 통화요금이 부과된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음. 이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

17. 민간영역이나 공적영역이나 개인간의 관계나 약속·신뢰가 매우 중요. 일방적인 사업종료·예산지원 중단은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시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각종 위탁 사업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평가를 추진한 뒤 사업종료 관련 입장을 정립하는 등 일방적인 지원중단 및 위탁종료 행태 시정할 것.
18. 일방적인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용종료 재검토하기 바람. 적어도 조계사와 협의해서 조례상 허용하고 있는 90일의 범위에서라도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하고 논의방향을 새로 설정할 것을 요구함.
19.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으로 이용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직계 가족 외 방계친척, 지방에 사는 일가친척까지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과도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행했을 때 사용 가능하고, 가족의 범위도 직계가족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연수원 이용 시 공무원의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가족관계증명서, 통화 등)가 매우 허술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1. 서울시는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종료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계사와 1년 2개월 간 민간위탁 계약을 진행했고, 사업 종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조계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함. 이로 인해 현재 다수의 근무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놓였음. 법적인 공방 이전에 서울시 또한 현재의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대안을 강구하길 바람.
22. 마을관리소 사업은 중단 예정임. 중단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 사업의 시작도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이 없어야 하지만 사업의 종료 또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마을관리소 사업은 시작도 끝도 석연치 않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선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3. 주민자치 사업을 이어간다고는 하나 예산과 인력의 지원은 중단함. 사람도 돈도 없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일몰 사업과 다르지 않음. 주민자치사업이 자치구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부합

할 수 있으나, 광역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구조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자치구의 자치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재무국 : 13건

1. 재무국 간부 중 특정 학교 출신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 시정하기를 바람.
2.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 자료를 수정한 사항이 너무 많음. 향후에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기초적인 오기는 줄일 것.
3. 국세와 시세 세금추징 실적이 65배 가량 차이나고, 2020년 부과 취소되는 비율이 약 35%에 이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수대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보다는 인원 부족, 승진 등의 동기부여 부족, 송사부담(세무조사팀 자체 수행) 등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큼. 세무조사활동에 대한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구현할 것.
4.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기본과제 목표는 15건이었으나 제출자료 기준으로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4건이었음. 반면, 외부 위탁 연구과제는 2021년 11건에서 올해 3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즉,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 수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위상에 맞는 자체적인 기본과제 연구 수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5.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실적이 저조함.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6.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신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보임. 시민들이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에 대해 널리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7.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재무국에서는 빠르게 공유재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바람직하지 않기에 재무국은 원칙을 잘 지켜

주기를 바람. 이 외에 공유재산 매입 취소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건이 발견됨.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기를 바람.

8. 의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이 취소·보류·변경되었을 때는 계획안을 제출해 의회에 보고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무국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취소·보류·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의회에서 재무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짐. 의회에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이를 시정하기를 바람.
9.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난 행감 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주길 바람.
10. 팀장들에 대하여 초과근무 총량제 상한 권고 시간 이후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는 등 무리한 야근을 지양해주시기 바람.
11.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자문회의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자의적인 운영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12. 시세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사업 관련 포상금 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근거 확인 및 작성을 명확히 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3. 지방세연구원의 서울시 연구과제 수행 실적 저조(2021년 서울시 6건, 행안부 26건) 과도한 출연금의 산출방식 개선 및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할 것.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단기적 7:3)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세후 확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평생교육국 : 24건

1. 공유재산에 영구시설인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 시설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음. 영구시설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유권 해석 또는 입법적 근거를 찾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길 바람.
2. 현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사업을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가 아님.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게끔 할 것.
3. 활동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동아리에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동하고 있음. 환경 개선, 역사 교육 등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으니, 그런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4.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폭 투자와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2년동안 중장년일자리 사업에 전문성을 키워온 50플러스재단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임, 그러나 반대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폐합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함.
5.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무게감은 더욱 커질 것. 중장년일자리 종합지원 대책을 실천해온 50플러스재단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임. 통폐합이 아닌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기준이 되어야 함.
6. 서울런과 경계선지능인 사업의 대상인원과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듦. 서울시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평생교육국의 본분과 역할에 적합하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제고하여야 함.
7.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차원에서의 관리 실태는 부족해 보임. 업체관리를 자치구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치구와

함께 관리감독할 방안을 마련할 것.

8.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과 관련해, 참여하는 기관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급식 문제로 인한 환불금이 증가하는 등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음.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관리가 부실해 보이니 개선할 것. 특히 산지 및 위탁업체 선정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식자재 품질 등 관련한 지도·감독 방법을 마련할 것.
9. 청소년 센터 운영 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할 것.
10.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은 힘들어서 오는 것이므로 찾게 된 연유에 따라 각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도움을 받고 충분히 치유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11. 서울런(교육플랫폼 사업)은 교육부의 K-에듀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서울 시민의 안전, 행복 등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평생교육법상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교육 콘텐츠를 서울런에 탑재하는 것은 부적절함. 시정 필요함.
12. 온라인 도박, 성매매 등 인터넷 유해 환경이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화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음. 온라인 차원에서의 유해 환경 정화에도 신경 쓰길 바람.
13. 공교육강화로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당국의 일관된 정책방향이었고, 서울시민이 교육감 선출로 그 뜻을 이미 표출했음. 그러나 서울런은 그동안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고, 시민의 뜻과는 반대의 정책철학으로 만들어진 정책임. 서울런의 정책적 관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함.
14. 서울런을 평생교육으로 개념으로 본 가장 중요한 헌재 사건번호(2010헌마144)를 다른 사건번호(2010헌마114)로 제출함. 판례를 언급하면서 사건번호를 틀리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므로 정정조치할 것.

15. 헌법재판소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는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후로 봐야함. 그런데 평생교육국은 이를 시간 기준인 '방과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및 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다시 법률 검토를 받을 것.
16. 서울런은 정규교육과정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은 교육환경 조성이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17. 서울런멘토링 관련 성범죄 예방 및 학생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거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 등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멘토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방안을 검토할 것.
18. 서울런 사업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부 등의 사업과 유사, 중복'되며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의 투입은 신중'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므로 지금은 사업의 확대보다는 중복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한 절차와 수순을 밟는 것이 필요함.
19. 평생교육은 정규의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라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런 사업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청이 배제된 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20. 서울런을 수강하기 위해 교재를 구입했으나 해당 인터넷강의 업체가 2022년 서울런 사업에 재참여하지 않아 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음. 이는 예산의 반영과 업체와의 계약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 기간에 기인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될 소지가 있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1. 서울런의 멘토링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서울동행 사업과 목적, 현장에서 운영하는 형태 등이 매우 유사함. 오히려 10여년의 경험이 누적된 서울동행이

서울런에 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인원 등 규모 면에서도 월등함. 그러므로 유사 중복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서울동행과 통합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평생교육국의 지난 1년 보도자료 35건 중 20건이 서울런과 관련 있음. 이는 평생교육국 사업이 대부분 서울런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서울런에 매몰되지 말고 평생교육국 본연의 업무를 회복하기 바람.
23. 교육부 K-에듀 사업과 서울런 사업의 중복성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완료된 것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과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협의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임. 행안부의 경우 콘텐츠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임. 그러므로 보도자료 및 답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된 내용과 행안부의 조건부 협의 및 시정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혼재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24.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서울런의 경우 165억원이 투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음. 단순 콘텐츠 제공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음.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인재개발원 : 10건

1. e러닝 프로그램마다 참여율의 격차가 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필요한 e러닝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됨. e-러닝 교육과정의 꼼꼼한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개선하기 바람.
2.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충실히 역할을 해왔으나,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 중심에서 이제는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함. 선배공무원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토론식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방식을 도입하여야 함.
3. 비대면 교육 중 운전하면서 강의를 수강하는 장면이 캡처되어 제보됨. 비대면 교육 출결 관리와 수업 진행하면서의 수강자 교육 참여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할 것.

4. 교육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람.
5. 대상 교육생의 필요한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세대별·대상별로 알맞은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3년 내내 추진 중인 사항이 있음. 개선 요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는 안되며 2022년도 행정감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그에 따른 결과를 계속 위원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7. 인생 이모작 교육을 진행할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기술적인 부분의 교육을 원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람.
8.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와 입소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9. 지난 상임위(제314회 임시회) 회의에서 리더십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 답변은 교육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았으며 동문서답의 답변을 함. 평가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다음 업무보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0. 본래 강북 수유영어마을로 인재개발원을 이전하기로 했었으나, 서울연구원 이전 이후 해당 건물을 활용해 서초에 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당초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이 추진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재개발원 강북 이전을 추진해 주기 바람.

감사위원회 : 14건

1.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 가능 여부 검토 및 감사에 나서 위원회의 책무를 다해야 함.

2. 4기 인권위 발족까지 7개월이 소요되었고, 조례상 정해진 연 4회의 정례회도 열지 못하게 되었음. 인권위를 조속히 정상 운영하여 이러한 상황을 시정할 것.
3. 서울시청 직원 인권교육 이수율은 37%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이수율을 제고할 것.
4. 행정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의 예산집행을 수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 제출된 자료들의 수치에 오차가 발생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앞으로는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
5.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2등급을 받음. 그러나 2021년도 4등급으로 점수가 하향됨. 신뢰받는 서울시가 되기 위해 청렴도 등급 유지에 힘써줄 것.
6. 용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 감사할 것.
7. 인권은 다수집단이나 소수집단이나 누구에게나 중요하니 인권교육시 계층을 나누지 말고 보편 타당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
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시의회 의원들의 임기 전 의원 자리가 공석인 채 위원회가 개최됨. 시의회 임기는 정해져 있으므로 의원 위원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회의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9. 공무원 안전순찰의 경우 성동구 감사담당관 288건, 강동수도사업소 114건 등 자치구 간 신고 건수의 차이가 있음. 신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신고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줄 것을 당부함.
10. 스마트밴드, 서울런 사업에 법령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가 예비점검에 나서야 함.
11. 조사담당관의 업무로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점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오세훈 시장 주요 시책사업 파악 현황, 점검한 내용,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경우 잘못된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등 제대로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반대로 시정을 견제하고 쓴소리를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는 오세훈 시정을 앞장서서 비호하는 조직이라는 평가가 있으므로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함.

13. 감사위원회의 목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별시를 구현하는 것. 공정과 신뢰는 정의로운 과정과 공평한 결과가 전제되어야 함. 이는 시장이 누구든 시장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피감기관이 어디든 결과가 객관적이며 납득, 타당해야 함을 의미함. 하지만 최근에 진행된 감사들의 경우 시장의 의도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퍼즐을 맞추는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감사위원장이 감사원에서 파견되었던 과거와 달리 시장이 임명권자인 순환보직의 행정공무원인 현 체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음. 이러한 지적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는 가일층 정의롭고 공평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4.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중)에 대한 특정감사는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마중에 대한 감사는 '건의사항'으로 서울런 사업은 여러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를 적시함. 행정사무감사의 강력한 지적사항인 시정요구사항은 도외시 하고, 건의사항만 받아들여 감사의 근거로 명시한 것은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서마중의 감사가 애초에 형평을 잃은 표적 감사임을 보여주는 단면임. 감사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한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0건

1. 위원회 감사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부서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신뢰 있는 결과 도출이 필요함.
2.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표준국어대사전 표기법에도 맞지 않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시민이 직관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명칭을 변경(예-고충처

리위원회, 민원도우미위원회 등)하는 것이 필요함.

3. 모서리 광고, 사례집 배포는 모바일 시대에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아님. 획기적인 아이디어 없이 관행적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됨. 읍부즈만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SNS 광고 등 더 많이 노력해주기를 바람.
4. 예산편성 시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편성을 지양해주기를 바람.
5. 시민참여읍부즈만 수당이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인원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보길 바람. 그래서 정말로 예산 증액 필요한지 확인하길 바람.
6. 위원공석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 중점감시 활동 업무목표를 상향하고 위원 채용 1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위원회 역량 강화할 것.
7. 국민권익위 경우 이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기관이나 부서로 이송·이첩되었다가 다시 재이송, 재이첩받는 소위 '핑퐁민원'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등 개선할 것.
8.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점 감시 사업 목표를 상향하고, 상반기 집행을 제고할 것.
9.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민원배심원제도 역시 2년 연속 1건씩에 머물러 있음. 홍보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효과가 없다면 홍보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면 내부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
10.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실적은 2021년 1건, 2022년에도 1건임. 이에 더하여 2023년에는 주민감사 온라인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임.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외형적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결과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음. 적극적으로 시스템 운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치경찰위원회 : 14건

1. 자치경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자치경

찰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관련 보고를 받았음. 따라서 서울시, 각 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2. 행사주최가 없다는 것이 면피의 이유가 될 수 없음. 주최자 여부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시민이 운집하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당연 경찰에 있기 때문임. 이를 반성하고 시정할 것.
3. 정부·지자체(서울시, 용산구청) 차원의 재난컨트롤타워가 모두 부재했고, 이태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관리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사의 원인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4. 참사 이후 여러 책임자들이 면피성 발언을 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한정해 관리한다는 면피성 발언을 했음.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
5. 자치경찰 대상 저조한 교육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6.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만들어주기 바람.
7.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낮은 점수가 나왔음. 수직적 조직문화, 부정확한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부당성 등을 개선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주길 바람.
8.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지구대, 파출소, 교통정보센터 등 시설의 심각한 노후도 등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길 바람.
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언론인터뷰를 한 바가 있음. 주최자, 다중운집행사 정의 등 운운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태도이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
10. 주최 존재 유무와 관계없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중운집행사'를 주최가 있는 경우로만 과소 해석하여 업무를 추진했음. 다중운집행사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라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며 해명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함. 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할 것.

11.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서비스 등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각 사업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현장에서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통합, 조정안을 마련하고 마을의 치안, 방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
12. 이태원 참사의 공식적인 참사 발발 시간은 10월 29일, 22시 15분임. 자치경찰위원회는 23시 30분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통보받고 참사를 처음 인지함. 서울시와 경찰청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하고 거꾸로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청 내 위상이 보잘 것 없으며 역할은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것.
13.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시점은 참사 발생 다음 날 오후 3시임.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를 경시하고 있는 결과임.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체계의 정비 및 개선 필요.
14.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1. 지구대, 파출소 등의 현장 업무가 자치경찰 소관으로 이전 2. 안정적 자원 확보와 자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 3. 인사권의 독립과 실질적 임용권의 수행 등이 절실함.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행안위에 건의 1건 보낸 것이 전부임. 위원장은 2022년 출장 26회 중 반려견 순찰대 관련 업무가 5건임. 반려견 순찰대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 위원회의 상황에서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때임. 현장 업무의 이전, 안정적 자원의 확보와 인사권의 독립 등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전략의 수립을 요함.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11건

1. 자원봉사센터에서 15개 영역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중 꼭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삭제하고, 범죄예방, 교통, 기초질서 유지 등의 필수분야가 추가되었으면 함.

2. 센터의 법인성이 정리되지 않아 법적기준·근거에 따른 행정이 아닌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센터의 재단 법인화 등 법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 필요.
3. 봉사 홍보물 제작 시 성별 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해 홍보물에 반영할 것. 사전 협의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향후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것.
4. 봉사자들을 유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령층 등 다양한 연령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연령대에 적합한 자원봉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 특히 고령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5. 업무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과도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길 바람.
6.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이수, 봉사활동 과정 관리 등의 소극적 방안에 그치지 말고, 자발적으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 할 것.
7. 등록 자원봉사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실제 봉사에 참여한 실인원은 크게 줄고 있음. 결국 부족한 인력을 관변 조직(통장 등)으로 채우거나, 소수 봉사자의 중복적·반복적 전방위 활동에 의존함으로써 현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 열정페이와 유사한 감성적 강요에 의한 자원봉사 방식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 대안을 강구 할 것.
8.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 폐지로 10대 자원봉사자 수가 현격하게 줄었음. 강요에 의한 봉사는 바람하지 않으나, 어려서부터 봉사에 참여하여 함께 돕고 나누는 습성을 고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젊은 층의 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
9. 서울동행과 서울런 멘토링 서비스, 지역맞춤형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 목적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운영

되는 형태는 매우 유사함. 설계자의 의도와 달리 중복, 반복된 사업은 현장 활동가들의 부담과 피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타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해야 할 것.

10. 서울시는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많은 기관과 사업을 종료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 7월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와 별개로 바로봉사단을 발족함. 하지만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이고 신속한 긴급대응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바로봉사단이 정작 그 이름과 취지에 걸맞지 않게 이태원 참사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 및 재조정할 것.
11.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주력사업인 서울동행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서울장학재단 : 10건

1. 행정적 관점에서 주어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안주했던 그동안의 장학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를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장학사업을 추진·개선하여 서울장학재단이 서울시민의 희망이 되도록 할 것.
2.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의 동점차 처리기준이 단순히 '전문가 협의'로만 되어 있어 기준이 애매모호함.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3. 장학생 선정기준을 보면 장학금의 대부분이 정성적 기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장학재단의 모든 장학금 선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각 장학금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4. 장학금 지급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단기 장학금 및 장기 장학금으로 나눠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5. 사업의 수 확대가 아닌,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의 재편이 필요. 서울장학 재단에서 성적과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여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효과적으로 수여해야 함.
6. 장학금 지급 시기가 재단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필요한 학생들이 적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7. 장학사업이 대학생, 고등학생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초등학생, 중학생 등 어린 학생, 대안학교 학생 등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출하도록 시정할 것.
8. 서로 유사한 성격의 장학금의 경우 검토를 통해 통합할 것.
9. 장학사업의 방향과 대상을 정하는 것도 시대가치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함. 국가의 경제력이 부족했던 시절엔 엘리트를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음. 이제는 부적응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사업의 전환이 궁극엔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임.
10. 장학재단의 16개 사업 중 대학생 대상이 16개, 고등학교 대상이 5개 사업임. 장학사업 대상의 연령층 확대뿐 아니라 부진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기 바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5건

1. '혁신' 프로그램 표현 관련 - 시민이 기획자인지 그 여부 등에 따라 '혁신'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람, 제대로 된 다양성과 접근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체 인건비의 34%가 아직 불용인 것은 계획 없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 인건비 등 예산 12월 내 목표대비 소진 여부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함.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까지도 교육받을 수 있게 체계성을 강화할 것.
4.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 센터에서도 여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가 많음. 그런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자치구에서 또 만들어 운영하면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하길 바람.
5. 동네배움터가 다른 사업과 구별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가 아닌 별도 공간에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일반적인 강사풀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제공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3. 기획경제위원회

----- 230건

기획조정실 : 28건

1.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함.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2.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활용률이 낮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미반영 연구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연구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최근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통공사와 주택공사 등 2023년 공사채 발행 예정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재정압박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별빛 신사리 르네상스 사업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지침은 법률상 소급 불가능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지침의 법적 위배 가능성 검토 및 불합리한 예산 지원 중단 재고 필요함.

5. 비효율적이거나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해 보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보하여 위원회 기능 및 운영의 효율적·지속적 정비가 필요함.
6. 위원회 출석률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과반수를 겨우 넘긴 위원회가 대다수임. 위촉된 위원들의 책임감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석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대림역 일대는 G밸리, 여의도 금융 중심 등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도심물류 창고 등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8. 신당역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등의 채용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9. 마을변호사 중에 불친절하면 해촉을 하고, 상담 만족도가 높으면 인센티브를 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해 보임.
10. 납세자 보호관을 법무담당관이 겸직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닌지 검토바람.
11. 납세자 보호와 관련된 세무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함.
12.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대북 관계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13.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민간위탁(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사업 개선이 필요해 보임.
14. 투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부적정임에도 무분별하게 설립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15. 서울로 7017에 사단법인 마을이 개입되어 있음.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포함되어 검토할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16. 장애인 콜택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일부 시간대는 이용이 어려움. 확대가 필요해 보임.
17.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사업평가 과정을 운영하며 위탁사업 선정에 엄중을 가했는데, 지금 와서 유독 특정 분야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18. 공무원 직접 학술용역은 최소한의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구결과의 활용률도 낮음. 최소한의 연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연구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19. 예산 절감 성과급 지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0. 서울시 지속가능한 2030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 수 등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 일부가 하향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21. 서울시가 직면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서울시는 인구변화대응팀을 신설하였으나, 추진계획(시장방침)에 따른 실적이 부진함. 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는 운영되는 8개월 동안 5차례 회의 개최에 그쳤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되지 않고 있음. 인구영향평가 도입 등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효과적인 행정력 투입이 필요함.
22. 시민참여 예산과 관련하여 공모가 7월에 끝났음. 평소에는 3월 이내에 끝났던 것이 많이 늦어졌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했음.
23.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최초 과업지시서에 없던 기관 통폐합 내용이 4월 중간보고 이후 갑자기 확장되었음. 기관 통폐합까지 과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정식 지침 변경 또는 신규

발주가 필요함.

24. 경제성 분석 결과 1 미만이지만 투자심사 통과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담당부서의 정무적 판단이 사업추진에 우선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이 필요함.
25. 디지털재단 이사장 해임 소송 관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임명절차의 문제와 관련부서의 대응과 패소원인으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후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바람.
26.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에 참석률이 낮음. 실장님의 참석률을 높여주시기 바람.
27. 과거 유사·중복 위원회가 지적이 되어 통폐합 추진중에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람.
28.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서 인사 가산점 부여 등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임.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포함) : 27건

1. 트라이에브리썩 관련, 상임위 미보고하고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
 - 행사 관련 이른바 “예산 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재발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2.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예산집행과 관리감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간형 보다는 공공형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형 비율을 늘리고 예산집행 등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기 바람.
3.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이 선심성 사업이 아닌, 청년들의 취업

과 고용유지율 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 후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4. DDP 3층 공간 전환 사용 과정에서 기존 입점 상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음.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5.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위원회에서 신규 기업 선정시 면접(정성평가) 점수가 저조한 기업도 최종선정되었음. 선정 기준에 면접점수 하한선을 추가하고, 향후 기업 선정에서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

6. 도시형 소공인 관련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7. 기술교육원 자판기 등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보

- 기술교육원 세외수입 거의 없는데, 남부기술교육원 유휴공간 활용한 수익사업 긍정적으로 봄. 확대하는 방안 챙겨주기 바람.

8.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관련

- 기술교육원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정한 평가 지표가 일부 누락되어 있음. 또한, 훈련시설 등 직업 용역을 한 업체가 평가 모델까지 만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9. 서울형 강소기업 정규직 채용 감소, 고용노동지청 신고 건수 증가, 해지기업 증가하고 있음. 원인 파악하시기 바람.

10.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유지 및 인증 취소 기준 보완 바람.

11. 스마트앵커 사업 4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추진 강행한 이유 무엇인지 해명 바람.

12. 슬루션앵커 관련 방만한 사업확대에 대하여 지적함. 실적 점검 바람.

13. Try Everything 투자심사 관련

-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 행사성 사업 예산이 다른 예산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투자심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4. 서울패션허브 관련

- 서울패션허브 임대료 지출 줄이는 방법 찾아야 함.
-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함.

15. 경제정책실 행사성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심사 여부 전수조사가 필요함.

16. 스마트앵커사업은 설계부터 잘못되어 현실성이 부족하고 세금을 축내고 있음

17. Try Everything 행사 관련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전달이 안되었음. 의회에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함.

18. 공유재산법 손해보험 가입 주체가 서울시가 되어야 하는데, 수탁 및 대행 기관에서 가입하고 있고 1억 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현재 1건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19. 기술교육원에서 조례 개정 전에 명칭이 변경된 직인 사용과 간판 설치 등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허위 문서와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해당하므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함.

20. 서울무역전시장 공제보험료를 수탁사인 SBA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납부해야 하는게 아닌지 확인 바람.

21. 청년인턴직무캠프 인턴십 선발에 있어 취약계층 목표치를 10%로 설정했는데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함. 취약계층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2. 청년인턴직무캠프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는데 정규직 전환 비율과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청년인턴직무캠프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취업된 인력의 연령이 20대 대졸자 위주임. 고졸자 및 30대 인력의 취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4. 기술교육원 우선선발 비율 미충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 기술교육원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 우선선발 비율 30%를 지키지 못하고 10% 이내 정도만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콘텐츠 개발, 취업 연계 등을 추진해야 함.
25. 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 계약서 퇴거 조항 관련
 - 콘텐츠 기업 입주 계약서 중 중도 퇴거 관련 특약조항에 대해 시 법률 자문 상 '특약법' 위반 소지 지적이 있었음.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
26. 파트너스하우스 안전도 위험을 이유로 무리한 전환 사용 추진함. 향후 이러한 단기적 결정에 따른 무리한 용도 전환 있어서는 안 될 것임.
27. 기술교육원 훈련생에 대한 식비 지원액이 3,500원에 불과하여 국비 과정, 폴리텍 대학(강서캠퍼스) 보다 적은 것은 훈련생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식비 인상이 필요함.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35건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함)

1.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행안부 주관사업이긴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모두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2.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사업의 경우, 1회성 이벤트 사업의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검증된 사업효과가 없어 지속 추진의 근거가 부족

하므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기 바람.

3. 중소기업물류센터의 적자는 경영능력과 판매능력이 없는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므로 해당 단체의 계약해지를 고려하기 바람.
4.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최근 3년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데, 사유가 무엇인지? 조례상 5% 정도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있는데 실적이 5%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5.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 대비 너무 저조하며 자치구별 편차도 너무 큼. 밀집도가 큰 서울이 필요성이 더 크므로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 필요함. 어떤 식으로 독려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업종별 가입률을 분석해서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 등 위험요인이 큰 업종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전기 사용량도 서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업종별, 시장별 원인 분석을 하여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2월 전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7. 중기부 상권활성화사업 관련 업무처리 지침상 소급 적용 사례는 관악구가 유일함. 이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남.
8.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영향이 크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이 매우 저조함. 위원회 운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물대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공공요금에 한정되어있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주는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 상황임에도 물대위는 개최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뒤늦게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개최됨.

- 참석위원 출석률 제고, 위원회 운영 취지 및 기능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임.
9.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과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매출, 고용창출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회적경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함.
 10.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련 채용절차 미흡, 위탁기관의 사무공간 과다 점유 등 서울시에서 위탁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임. 21년 동안 관행처럼 민주노총에 위탁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민주노총 지원사업이 아닌지 의심됨. 서울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내용 보고하시기 바람.
 11.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국비:시비 매칭 인증 제도 성과분석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액, 근로자 고용, 영업이익 감소와 당기순이익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화된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함.
 12. 주로 국비:시비 75:25 비율인데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 한다면 선심성 사업일 뿐임. 25% 소중한 예산이기에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도록 챙겨주시기 바람.
 13.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안)이 동의안 금액 대비 과소 편성되는 것은 시의회 예산 심사권을 저해할 수 있으니, 신보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의안에 맞춰 출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함.
 14. 2020~21년 마을기업에 선정된 곳이 14곳인데 폐업이 8곳(60%)임. 마을기업 취지는 좋지만 몇 해를 지켜봤을 때 순조롭지 않다면 사업을 접는 건 어떤지 검토해보기 바람.
 15.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지원비율이 40%로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 정부 미편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 차원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임.

16. 곤충산업이 걸음마 단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17. 치유농업은 복지·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큼. 그러나 걸음마 단계로 경도인지장애자 등 노인층의 치유 프로그램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음. 각 지역별로 유희공간에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쉽도록 예산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치유농업을 통해 건강증진이 되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18.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관련 상담인력 대비 상담실적 편차가 큼. 분야별 상담건수 대비 상담인력 비율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기 바람.
19. 유선상담이 많은데 상담 배정방식과 그에 대한 실적관리와, 상담 퀄리티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상담 결과치를 받아보는지 등에 대해 점검 바람
20. 복지관이 사실상 노조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절차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노동자복지관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21. 전태일기념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이며 사업비의 대부분도 단순1회성 이벤트 위주임. 이벤트 실적 또한 저조하고 사업의 효과 또한 의문스러움. 궁극적으로 전태일기념관 운영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22. 노동자복지관 외에도 위탁 맡기고 있는 사업들이 17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람.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람.
23. 제로배달 유니온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비자, 가맹점주, 배달라이더에게 혼선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 경기도 배달 특급, 군산 배달의 명수와 같이 타 지자체에서 배달앱서비스를

한다고 같이 공공에서 배달앱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창의적인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4.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지적했던 청과동 사무실 및 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특정이념성향이 짙은 단체의 실태를 파악해주시기 바람.
25. 서울시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곳이 있는지. 혼란만 주고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함. 설명해 주기 바람.
26. 최근 3년간 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임. 심도 있게 조사해야함.
27. 전통시장 상인회의 사유화와 정부지원액이 4조원 대비 매출액 증가 효과가 미미함.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28. 서울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만 발행되므로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에 큰 제약이 있으므로 지류 상품권 발행 등 운영방식 개선 바람.
29.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사업 성과 및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성과분석하기 바람.
30. 신개발 원예기술보급 사업 중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포장재 사업’은 사업명칭과 그 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예산명료성의 원칙에 의거 사업명을 수정할 것.
31. 조례상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동 조례 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 현황 조사와 행위자 명단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지켜지지 않음.
32. 두 개의 온라인 플랫폼(함께누리몰과 캐빈닷넷) 운영 중인데 두 군데 다 운영 기간에 비해 나름의 운영성과가 있었음. 올해 초

특정감사 결과, 용역 형태로 위탁사무를 받았는데 재위탁을 했다는 사유로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음. 캐빈닷컴은 경고 이후 용역비용을 낮췄지만 함께누리몰은 용역비중이 여전히 높은 이유와, 용역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33. 캐빈닷컴 발전방향에 대해서 사경센터와 협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만들어보기 바람. 민간위탁으로 민간의 사고의 유연성 등의 관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함.
34. 제로페이의 설계 및 운영에 관여한 웹캐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용역 수의계약을 수행하거나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입과정에서의 유착과정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3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법인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문제가 있었던 특정단체가 계속해서 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 서울시립대학교 : 31건

1. 교수 사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직 원인을 분석하기 바람. 여러 단계를 거쳐 채용한 우수한 교수인력이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학교와 학생 입장에서 큰 손실이므로 관련 대책 마련 바람.
2. 교수의 장기휴직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기 바람.
3. 사립대에 비해서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임. 추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금에 힘써 열악한 환경 개선에 힘 써주기 바람.
4. '제2캠퍼스(은평캠퍼스) 건립을 통해 본캠퍼스(동대문)의 공간부족 문제와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동대문 캠퍼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인지 검토바람.

5. 강남북 균형발전을 목표로 은평캠퍼스를 설립해야한다 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6. 교양캠퍼스 건립에 관해 교양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부정적임. 지역균형 발전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7. 도서관 평가에서 시설과 도서자료 보유에 대해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운영(시설, 직원수 등)부문에서는 실적이 저조하였음.
8. 반값등록금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금은 늘어나는 반면 자체수입금은 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보임.
9. 시직원 결원 3명을 서울시 측에 강하게 요구하여 자체수입금 보전에 힘쓰기 바람.
10. 사회공헌활동 참여 학생은 늘어났으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활동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11. 직장어린이집 현원이 부족함. 투입 예산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각종 민원에 귀기울여 주기 바람.
12. 시립대가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주시기 바람(자작마루 웨딩홀로 활용하고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할인혜택 등)
- 13..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는지?
14.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부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체수입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교육부, 기재부, 국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15. 공사 등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시정이 필요함.
16. 대부분 여행 경비가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출되고 있는데 기타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17. 학기중 해외 출장이 많아졌는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되는 것이 우려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기중 해외 출장을 지양하여주

기 바람.

18. 시립대 교원의 비위양상이 다양한데, 중범죄 건 및 전체 건수도 많아 보임. 교직원의 윤리성 확보 및 추후 관리가 필요해 보임.
19. 코로나 이후 온라인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수업 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 개선계획을 세우기 바람.
20.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논쟁이 많으므로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기 바람.
21. 학생의 중도자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자퇴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 바람.
22. 광고홍보비 지출이 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수단(지면광고)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 MZ세대 코드에 맞는 영상매체 등 다양한 정보전달 방식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3.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위원회가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특성화 운영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24. 반값 등록금 효과성 연구용역을 내부적으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음. 우리 미래와 생존의 문제라는 말에 동감하며 계획서 제출 바람. 또한 연구 용역 시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만큼 대체 용어 고민 바람, 시립대 출신 졸업생이 서울시민으로 생활하는 비율이나 사회적 영향력의 발휘 정도도 포함 바람.
25. 반값 등록금 문제는 가치 판단의 문제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며 정부가 낼 돈을 시가 내고 있다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함. 다만 수도 서울의 지원금을 받는 대학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것으로 생각함. 그만큼 비가시적 성과(취업 유지율 등)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 거뒀다고 판단함.

26. 해외 대학 평가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 평가는 컨설팅 수익이라는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수치 하나하나에 연연하지는 말되, 평가 시 연구 성과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 만큼 개선·보완 바람.
27. 발전기금 조성 수준이 타 국공립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노력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함. 발전기금 홍보예산도 적고 홍보사업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음. 이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하기 바람.
28. 코로나 이후 온라인 원격수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수업 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 개선계획을 세우기 바람.
29. 전체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 교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특정학과에서 임용 쿼터제 위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채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0. 성과관리 주요지표 중 연구분야의 달성값과 목표값 설정을 적절하게 해야 하며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설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1.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舊건물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할지라도 스프링클러, 살수설비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주기 바람.

서울농수산물공사 : 20건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1. 경매가가 급등락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직원 비위에 대한 세부 내용 기재가 미흡하며, 대부분 견책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차별화해서 재발 방지 필요
3. 가락시장의 거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환

경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가락시장도 이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 필요

4.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계류되어 있는 농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5. 강서시장 무료주차 시간에 대한 주차료 부과는 불합리한 것 같으므로, 주차료 운영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도매법인이 별다른 노력 없이 위탁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출하자·중도매인을 외면하는 상태로 간다면 도매시장 몰락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7.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연구용역 후 어떠한 개선안이 있었는지 보고 바람.
8. 농수산 유통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9. 가락시장e몰 사업과 관련 비용만 투입하고, 실적은 없이 사용종료 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10. 청년 밀키트 사업의 일환으로 2개 제품이 출시 되었는데 앞으로 도 더욱 확대 바람
11. 유통인 단체 중심의 면담을 소그룹화 및 세분화하여 소통이 필요함
12. 서울먹거리클러스터에 목적이 불분명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13. 수출센터 운영실적이 매년 하향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14. 가락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유통인·소비자를 위해서라도 특정도매 시장 법인에 대한 품목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음. 관련된 용역도 완료되었으므로 신중히 검토 바람.
15. 신입사원 필기시험 오류 관련 재발방지, 법적절차, 검수 강화 조치 등 필요.
16. 현대화사업 이후 증가하게 될 에너지 등 막대한 유지 관리 비용

에 대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필요

17.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함.
18. 신입사원 필기시험 오류와 관련하여 채용대행업체에 대해 향후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19. 서한냉동 철거 후 수산동 건립 시까지 중도매인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 필요
20. 농수산물공사 청과동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전국여성농민단체’는 단순한 농민단체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성향이 짙은 단체로 보이는데, 문제있는 것 아닌지? 가락먹거리 융합클러스터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중이 맞는지? 농수산물센터 인테리어(통유리) 공사비용 주체는?

서울연구원 : 23건

1. 심각해지는 저출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구관련 연구 및 TF 등을 통해 노력해주기를 바람.
2. 장애인 고용률이 서울시 기준인 5%는 물론 법정기준인 3%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기 바람.
3. ‘작은연구 좋은서울’ 사업의 경우 순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데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민간투자사업평가위원 관련 업무매뉴얼 및 시스템 개선 필요
5.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 특히,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확대하여 연구수행을 요청함.
6. 석사급 연구원 68명 중 1인당 수행 과제 수 차이가 큼(최소 7개, 최대 58개). 연구원들 개인별 과제수행 건수와 편차가 크게 나타나

고 있으니, 정확한 실태와 원인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및 행사 준비에 과도한 인력 투입된 것 지적. 서울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인력 투입되거나 업무 편중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람.
8. 연구결과 활용도조사 지표 개선 필요 : '정책판단 근거자료' 같은 추상적인 지표가 아닌 구체적으로 기여한 내역 반영 필요
9. 연구보고서의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늦게 되는 사유는? 보고서의 발행일과 등록일의 차이가 많음. 개선이 필요함.
10. 연구직 박사들의 겸직이 많음. 담당업무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11. 서울연구원 수탁사업의 경우 단순 실적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당장 활용되지 않더라도 중장기 연구과제도 발굴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12.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연구수행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13. 연구원 혼자만의 연구가 아닌 협업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는 감소하고 있음. 향후 상향하는 방안 마련 필요
14. 지방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추진 현황은?
15. 현재 연구원의 홍보관련 콘텐츠는 외주용역 대비해 내부 자체개발 콘텐츠도 훌륭해 보임. 자체 콘텐츠(정알박 등) 제작 확대 바람.
16. 유사·중복 연구수행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연구중복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안을 신속히 추진 바람
17. 연구조직이 구성되어있는 서울시 출연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연구 체계 마련 바람.
18.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해 개선하기 바람.
19. 인구변화 대응 필요성(저출산, 복지정책 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수도권(경기, 인천) 산하 연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필요.

20.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발효됨. 통합 통한 조직 비대화 우려. 보다 세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오히려 조직 세분화 필요
21. 매년 경영평가에서 지적되는 하반기 예산 몰아쓰기를 개선하고 재정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 적절한 예산집행이 필요함.
22.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중 '부적정' 의견을 낸 사업들의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건수가 늘어나고 분석결과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23. 공공투자센터의 경제성분석 결과 미제시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분야의 경제성분석 검토기준을 마련하기 노력하기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 30건

1. 해외거점 매장에 입주한 상품에 대한 특정 업종 쏠림현상 검토 필요.
2. 해외진출 시 해외공관 활용 증대방안 검토 바람.
3. 고유사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수탁사업을 줄이고 고유 사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서울투자청 원스톱통합플랫폼, 챗봇 운영 실적이 저조함.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 수립을 요청함.
5. G밸리 창업큐브 공간 입주기업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원활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6. 위원회 운영 관련 정관변경 검토 바람.
7. 이사회 명단의 성별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8. 창업허브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거시점과 입주시점을 잘 조율해주기 바람.

9. 창업허브 초기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이후 스케일업 단계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디딤플라자에 국제유통센터 일부 기능이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 콘텐츠를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바람.
11. 징계양정 기준에 대해서 보완 필요.
12. SETEC 홈페이지 내 주차공간(학여울역, 수서역) 추가 안내조치 필요.
13. SPP, Try-Everything 투자심사 받지 않은 건에 대해 향후 시정바람.
14.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남기는 부분 규정 정비 바람.
15. 크립토서울 건 관련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기 바람.
16. 서울창업허브 입주 연장평가 시 긍정적인 부분 반영 비율 늘리는 방안 고민 바람.
17. 서울창업허브 개관 당시 발표했던 목표 성과 대비 유니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실적 저조함. 초기 계획 잘못 설정하고 목표 실적 부풀려 발표한 것에 대해 지적함.
18. 연구용역에서 수의계약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19. 홍보채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20. 신규채용 인원의 10%는 고졸채용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고졸 채용자들이 일괄적으로 시설관리직 위주 편성됨. 고용취약계층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도록 기회 마련을 위한 채용과정 검토 필요함.
21. 신규채용 고졸채용자들 대부분이 시설관리직 위주 편성되었고 연령 또한 50~60대 위주로 채용되고 있음. 특정 직무와 연령 편중 보완 바람.
22. 소기업특화용품 사업 관련 실적이 부진한 만큼 조속히 종료 필요.
23. 서울기업 규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상에서 명칭을 통일 필요.

24. 서울기업 규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 포함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도록 리뉴얼 조치바람.
25. 잦은 정관변경을 지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에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6. 서울메이드 홈페이지 내 매거진 관련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능에 대해 조치가 필요함.
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바람.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위법에 맞게 위원 구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정바람.
29. 노동조합 근로자위원에 조합원이 아닌 인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30. 안전보건관리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노동조합과 활발한 소통으로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바람.

서울신용보증재단 : 12건

1. 임직원 비위 발생 시 적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체계를 점검하기 바람.
2. 새출발기금 시행으로 인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
3. 골목창업학교 대행 업무 시, 보다 다양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기 바람.
4. 구상권회수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직원교육 등을 통한 구상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성과가 저조함. 사업 종료 이후 소외계층을 위한 보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6. 수의계약 기준 등 계약분야 청렴 및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승진심사 시 성별 유불리 없이 공정한 승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람.
8.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조치하기 바람.
9. 불법대출로 인한 고객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증브로커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하기 바람.
10.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보안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안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1. 고객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12. 구상권 완제 업체 전산 미처리건에 대해, 중앙회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 24건

1. 기술교육원 행정감사(11.9) 당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장이 직인 날인 관련 위증을 한 사안에 대한 경제정책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2. 기술교육원의 과목, 장비, 시스템 등이 낙후된 상태로, 서울시와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장비와 식당 환경 등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주기 바람.
3. 현재 지인 소개로 들어온 교육생이 다수인 상황으로, 보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바람.
4. 동부와 북부에 비해 중부와 남부가 교육생 만족도가 유독 낮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조치하기 바람.
5.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라 실습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입학을 희망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입학을 허용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관습대로만 하지 말고 재량을 발휘해주시기 바람.

6. 교직원 채용계획 공고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등 통합운영 채용 지침상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여 시행하기 바람.
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약자를 우선 사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절차 위반임.
 - 또한 민간위탁 지침에도 서울시에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은 소외 계층에게 고정 수입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세입 확충과 더불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8. 5년간 취약계층 취업률을 보니 상승 추세이지만 50%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낮은지? 업종별 분류를 보면 취업한 업종이 아예 없는 곳도 있으며,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의 노력이 필요함.
9. 서울시나 기술교육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없으며, 중·남부처럼 불특정 다수 홍보를 지양하고 타게팅 대상을 정해 홍보해야 함.
10. 교육생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이나 환경은 만족도가 높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식사로, 식사비 단가가 '18년 200원 인상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서울시 직장어린이집이나 시립대학교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개선 검토 필요.
11. 올해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법인 전입금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였는데 법인 전입금은 사학재단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수탁

기관이 수익사업을 추구할 우려가 있음.

- 법인 전입금이 학생들에게 사용 되지 않고, 전입금 세입처리가 안 되고 있고,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없어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2. 기술교육원 재입학 제한 규정 취지는 이해가 가나, 단기간 교육이고 연계된 과목을 들어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심도 깊은 논의 바람.
 13. 중·남부기술교육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마련은 됐는지? 8개월이나 지났는데 컨트롤타워에 대한 준비 없이 급하게 한 건 아닌지,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14. 신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술교육원이 제공하는 직업교육도 다양화가 필요함. 산업의 변화에 따른 교과목 및 커리큘럼을 개선할 것.
 15. 교육생 훈련만족도 조사 결과, 기술교육원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는데 개선하기 바람.
 16. 남부기술교육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지 않았음. 그러나 다른 기술교육원은 같은 상황임에도 꾸준히 실시했으므로 남부기술교육원도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바람.
 17. 기술교육원 정책적 방향 및 목표에 상응하는 운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30% 우선선발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입학자의 평균이 9%에 그침. 사회적 약자 대상 입학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함.
 18. 수료 대비 취업 실적이 좋지 않고, 자격증 취득 대비 취업률을 봐도 기술교육원의 교육을 통해 취업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훈련 교사 재교육 시스템 마련 등 개선 방안 확보를 요청함.

19. 중·남부기술교육원 통합 이후 중북학과 통폐합이 남부에서 중부
로만 통합된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20. 통폐합 후 유희시설을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업 통폐합보다는 전환이 맞지 않은지? 이에 대해 검토바람.
21. 1년 정규과정이 줄고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이 늘어났는데 1년 과
정을 축소하게 된 사유와,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1
년 과정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검토바람.
22. 중·남부기술교육원 간관 교체와 직인 사용과 관련하여 기 중부
기술교육 원장의 답변은 위증에 해당하며, 변경 직인 사용 이후
에 생산된 문서 488건은 모두 무효이므로 절차상 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함.
23. 부설주차장이 위수탁 협약서 상 재산 현황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4.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군포시가 공공개발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
련 하여 군포시가 본 부지를 양도받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군포시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바람.

4. 환경수자원위원회

----- 146건

기후환경본부 : 21건

1. 일회용품 사용규제(다회용기 사용 권장) 및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대응 및 관련 정책 홍보가 매우 부족한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자치구별 RFID 종량기 보급기준을 통일하고, 특히 유지관리 비용이 자치구

마다 다르므로 지침을 마련할 것.

3. 각종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종료된 경우, 관련 자문회의는 전 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을 신규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
4.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지원방식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금액 감액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재검토할 것.
6. 환경분쟁조정실의 실효성이 낮아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지하 주차장 전기차·충전기 화재 발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8. '21년 행감 건의사항 17번*의 추진상황이 추진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정할 것.

* 휘발유엔진 낙엽송풍기는 VOCs를 배출하므로 전기식 송풍기로 교체하길 바람

9. 수소차 판매 승인 관련 공고문 문구 명확화 및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에 대비하여 제도를 보완할 것.
10.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15개소에 대한 침출수 발생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11. 폐업업체들이 보급한 태양광에 대한 사후관리와 연 1회 점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12. 태양광 점검 기준상 10년까지는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
13. '22년과 '23년 쿨루프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것.
14. RFID 종량기 감량률이 51%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니, 감량효과 있는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을 확대할 것.
15. 다회용 컵 시범사업에 대해 일회용 컵보다 두꺼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뚜껑 및 컵홀더는 여전히 일회용을 사용

하고 있음. 반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6.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특정 단체의 연속 선정에 따른 다양한 단체 참여의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7. 에코마일리지사업의 참여자 수는 증가하지만 가입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임.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세분화하여 구간별 지급 차별화 및 지급 시기를 연 1회에서 다회로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감 유인책을 마련할 것. 또한 미사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18.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수탁기관이 공항소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보임. 직원 식비 및 근태관리, 수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연구용역의 추진 등 문제사항이 있는바, 오집행 부분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수탁기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9. 「N 서울타워 대기질 상징조명 표출 협약」 세부내용에 협약 종료일이 미명시 되어 있는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
(전체적인 MOU 협약서 검토할 것)
20. 다회용 컵 사업은 사업 방향을 전환할 것.
21.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텀블러 사용이 일반화된 공공기관에 다회용 컵 회수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재검토할 것.

푸른도시여가국 : 34건

1. 공원내 책심터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 인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것.
2. 공원여가프로그램 중 일부 온라인프로그램의 예산집행이 많음. 온라인프로그램 운영 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라며,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3. 상급기관 감사와 별개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훈련, 안전보건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흑한기 공원 작업자 관리 및 안전대책 매뉴얼을 수립할 것.
5. 서울식물원 내 외래종 고사율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6. 병해충 방제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적정량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7. 공원 내 응급 의료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공원 내 제세동기 설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8.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이후 시정조치가 늦은 사례가 다수 있음. 시정조치를 신속히 하고,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9. 위원회 소속 위원이 위원회 발주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
10. 서울로7017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주 부적정, 위수탁협약서 위반 등 기본적인 업무를 지적받았는바,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임기제공무원이 수탁업체 대표를 겸임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임기제공무원의 겸임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
12. 공공조경가 모집 기준 중 '의식 있는 젊은 전문가(45세 이하)'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호한 기준이므로 시정할 것.
13. 공공조경가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이 참여하도록 할 것.
14.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관련 사업을 추진한 이후 10년을 맞은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것.

15.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관련 홈페이지에 수정안된 정보들이 많으며, 골목길 가꾸기 등 종료된 사업이 그대로 있는바, 홈페이지를 현행화할 것.
16. 조경과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며, 집행률 0% 사업도 2건이 있는바, 사업 추진이 저조한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17. 서울시 공원 내 이동약자가 고려되지 않은 산책로, 시설 등이 다수 있음. 무장애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 효과가 미미함. '23년에도 BF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바, 몇 개 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요 공원에 대한 실제 조사와 계획을 통해 추진할 것.
18. 신규 공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기존 공원은 시설정비 시 약자와의 동행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9. 옥상녹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지원이 있으나 조성 5년 기한으로만 시행하고 있어, 유지관리 지원이 종료되면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성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행 등 옥상녹화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20. 명일근린공원 둘레길에 설치된 매트 훼손, 고정핀 노출 등으로 인해 시민 위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고, 전체 둘레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조치할 것.
21. 일부 자치구에서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모집,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달라 활동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관련 기준을 통일할 것.
22. 멧돼지 포획단은 총기를 다루어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 안전교육, 총기안전교육 이수증 확인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23. 멧돼지가 겨울철에 자주 출몰하는데 차단펜스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 자체도 부족한 실정임.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과 관련하여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적극 챙기도록 할 것.
24.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추진시 사유지인 경우 적극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허락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사방사업을 추진

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

25. 가로수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일부 자치구가 있음. 또한 폭이 좁은 보도에 위치한 가로수로 인해 통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은행나무 가로수종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DB를 구축하며, 서울시 전역의 가로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것.
26.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는 가로수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가로수관리기본계획상 '트리맵'이 작성되고 잘 작동되도록 할 것.
27. 일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법정 설치규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공원 종류에 따라 공원의 이용 목적, 배치시설 등이 결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공원 종류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실국과도 협의할 것.
28. 공원별 공원시설 기준에 따라 일부 공원의 경우 필요한 시설(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공원 종류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
29. 서울정원박람회 행사용역사의 단독 운영에 있어 그룹한과 푸른도시여가국과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추후 박람회 개최 시 관의 역할을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
30.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겸임한 사례, 조직위원회 임기연장 등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할 것.
31. 존치정원의 관리 감독에 있어 정원의 가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지출을 감안해 존치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
32. 푸른도시서울상, 조경상 콘테스트 등을 용역사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역할은 심사위원회 구성한 것밖에 없으므로, 이를 외주로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
33. 양재고개 녹지축 연결로 조성사업 관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경위와 집행 등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

제출에 대해 시정할 것.

34. 조경수 가격조사는 비교견적 등을 참고하면 될 사항이며, 이를 용역 발주 (1,700만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할 것.

□ 서울대공원 : 14건

1.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사용수익허가를 이전까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의 예정가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약 7억원이 낮아져 5년간 총 35억원의 차액이 발생함. 수익시설임에도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예정가를 산정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시정조치할 것.
2. 노점상 관리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 실적이 미비하여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단속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임. 용역비 산정에 대해 단가나 기준을 명확히 하기 바람.
3. 서울대공원 주차장 월 주차요금 및 정기권 관련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4. 장애인 주차비 감면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5. 동물 전염병 발생 관련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공지하고 대처할 것.
6. 동물 개체수 꾸준히 감소하는 현상 관련 동물 사육 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멸종위기종인 로렌드 고릴라를 들여올 수 있도록 유인원관에 대한 시설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것.
8. 사용수익 허가 업체 현황 관련 서울대공원과 계약 관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9. 서울대공원 홍보마케팅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을 처음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였으며, 사업을 확장하여 부족한 예산은 민간협력기금을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도 기부목적과 다름. 또한 같은 사업에 예산과 기금을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정조치할 것.

10. 지난 8월 집중호우 이후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도록 할 것.
11. 서울대공원 '다누리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함. 서울대공원 호수 전망대, 야외탁자, 산책로 등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누리복지서비스'에 걸맞는 공간을 조성할 것.
12. 서울대공원 전략마케팅부분, 전략기획실이 있음에도 연간 추진계획 자료가 없으며,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 방문자 수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미디어 활용 등 적극적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할 것.
13. 2021년 11월 종합안내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추진되지 않았음.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계획에서는 종합안내소 부분에 대한 철거계획이 있지만, 실제로는 철거계획은 폐기함. 외관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매표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동물 우결핵 발생 관련하여 시민 공개 없이 안락사 처리하고, 동물 투쟁 발생으로 인한 시베리아호랑이가 폐사하는 등 동물보호 부실 관리를 개선할 것.

□ 상수도사업본부 : 20건

1. 사업소별 CCTV 유지관리 방식이 용역, 자체 관리로 상이함. 자체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시행(개별발주, 통합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2. 노후밸브 정비와 관련하여 400mm 이상 대형관 밸브는 문제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비수선 1순위는 고장 및 누수밸브이고 400mm 이상 노후밸브는 5순위로 후순위이며, 정비실적도 저조하므로 노후밸브 정비 우선 순위에 대해 재검토할 것.
3. 녹이 슨 밸브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밸브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할 것.

4. 올해 3월부터 이사정산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원스톱이란 표현이 무색하게 절차가 복잡하니 서비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5. 물재생센터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음. 수돗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를 통해 마약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할 것.
6. 일부 지자체 행사 시 아리수 페트병 공급이 확인된 바, 조례상 행사 등에 아리수 페트병 공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7. 학교 음수대 수질관리,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8.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건은 총 9건이며, 5건이 동일업자, 유사용역으로 나타났는데, 용역시기가 다른 5건이 같은 날 심의를 받아 제재기간이 모두 중복되어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아닌 업체 봐주기식 조치로 판단되므로 시정할 것.
9. 야외 음수대 디자인 및 방지턱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 이용 불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모두가 아리수 음수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
10. 노후 옥내배수관 교체 관련 지원범위, 대상에 대해 적극 홍보·안내할 것.
11.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안전진단기준'에 급수급탕설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노후급수관 교체에 소극적임. 관련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아파트단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시 업체의 담합, 보조금 수령의 부정 문제 등이 제기된바, 제기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시민 제보- 상계주공14단지(북부수도사업소 관할)에 대한 조사 포함).
13. '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약품누출 및 사망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4.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업소간, 그리고 각 사업소간 성과목표가 다름. 사업소간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통된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아리수 품질,

노후관 관리 등 동일하게 관리할 공통 목표).

15. 아리수음수대 관리 4개 용역이 1개 업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바, 다양한 업체가 참여, 용역 수행 가능한 입찰방식 등을 검토하여 차기 공고 입찰 시 반영할 것.
16. 자치구에서 여름철 실시하는 무료 생수(민간판매용) 나눔 행사가 음수대 주변에서 잇따라 실시, 이러한 사실을 자치구에 전달, 조치할 것.
17.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배점표를 보면 경력점수 배점이 높아 신규 응시자에게 불리한 응시 조건으로 보임. 신규 응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배점표에 대해 재검토할 것.
18.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 사전교육비 집행에 대한 지출 근거 불명확.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예산 수립, 집행을 철저히 할 것.
19.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시효결손 업무처리 부적정', '정수처분예고 후 처분 미실시', '고액채납자에 대한 처분활동 미흡(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소홀 등)'에 대해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20. 상수도사업본부 소수력발전 도입 중단 이후,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해당사업 또한, 상수도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우려됨. 조속히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

한강사업본부 : 18건

1. 2022년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가 추경예산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심사와 상임위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추진되었음.
향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상임위와 소통할 것.
2. 한강 아라뱃길의 경우 스웨즈나 파나마 운하보다 뱃길 폭이 좁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물류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아라뱃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역과정과 진행사항 등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

3. '변상금' 부과가 한강공원 무단 점유 시설을 막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무단점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이 있으니, 변상금 외에 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한강공원 남자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할 것.
5. 한강공원 노후 화장실 교체/설치 시 적정 기준에 맞는 남녀 화장실 비율로 설치할 것.
6. 한강공원에 뱀과 같은 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므로 대비책 마련할 것.
7. 한강 연구조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동일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업체와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8. 한강공원 내 수영장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감시 인력 증대 및 전문기기 감시 위탁업체 선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9. 한강공원 진드기 점검과 관련하여 진드기 산란 시기에 맞게 점검 일정을 조정할 것.
10. 테니스장 이용요금 환불규정이 공원마다 다름.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게 시정할 것.
11. 한강 수상택시 이용자가 한달에 1~10명이 이용하고 현 운영자도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임.
특히, 택시정류장 등 시설물 역시 도시의 흉물이 되었으므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2. 이촌한강공원 내 시설물 관리 미흡한 사항과 침수피해 미복구 부분을 신속히 조치할 것.
13. 한강시민위원회 5기 임기 만료 후 8개월 지났음에도 6기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한강사업본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여론수렴,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므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화할 것.

14. 이촌한강공원의 산책로 접근이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우며, 바닥 포장 불량,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은 주변 동선도 안전에 문제가 많으므로 조속히 정비할 것.
15. 사용수익허가시설과 하천점용시설의 미수납금이 많으며, 장기체납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6.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발급에 비해 징수율이 높지 않음. 고지서 발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도록 할 것.
17. 광나루 자전거공원과 난지 자전거공원의 프로그램 및 예산 차이가 극명함. 각 자전거공원 별로 시설이나 운영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이 차별되지 않도록 적정 배분할 것.
18. 시민제보에도 있었지만, 서해벚길사업과 서울항 조성사업의 경제성과 환경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큼. 사업 진행을 위해 한강 준설과 선착장 확장 및 서울항 조성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한강 생태계 영향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39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미흡한 수감태도 및 자료 정확성을 개선할 것.
2. 미활용열 대체 목표치 감소 사유를 분석하여 향후 미활용열 활용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
3. 임직원의 경우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한 근무관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4. 코로나19 관련 근무태만으로 징계 등의 감사 조치사항이 미흡하며,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5. 서울시 출자기관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또 출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

6. 태양광 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연도별 수익을 철저히 관리하고 보고할 것.
7. 별내에너지 인허가를 통해 반드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진상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것.
8. 서남하수열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수열 실적을 증대하도록 할 것.
9. 서남물재생센터에 수열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사용 대금 지급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할 것.
10. 노원 연료전지 관련 포스코 조기 운영종료에 따라 열수급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산하고, 추가 열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11. 근접한 시기에 비슷한 성격의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연간 통합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것에 대해 시정할 것.
12. 목동 열원시설에 대한 수명연장공사 외에 대체열원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13. 마곡 열병합발전소 부지 위치변경에 대한 강서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가 미흡하고, 법적인 사항 외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
14.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 구성 경위와 절차 등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협의체 신속히 구성할 것.
15. DL이앤씨와의 계약이 2번이나 유찰되었으며, 그로 인해 1년이라는 시간을 손해 보았는데, 향후 입찰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할 것.
16. 건설사업 업체선정, 실시설계도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서 건설기술지원단을 채용 및 운영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개선할 것.
17. 서남 사업 진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사업 추진 대안을 마련할 것.
18. 공사 관계자의 특정 업체에 대한 마스크 및 자가키트 구매와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할 것.

19. 지역문화예술사업 관련 음악회 행사 추진 시 공사 관계자 지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할 것.
20.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1억원을 기부한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21.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사업검토를 강화할 것.
22.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체적으로 운영관리와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것이며, 향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
23.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사업 사업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계통연계 검토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를 보고할 것.
24. 서울교통공사 연료전지 사업의 추진경위가 불명확하고, 예산까지 투입하여 운영까지 추진한 신규사업에 대해 별도의 문서도 없이 중단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25. 공사 적자 폭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해외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것.
26. 홍보실의 주요 업무는 홍보 사업으로 광고 효과가 있는 지면광고를 추진할 것.
27. 홍보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의 표본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서남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28. 광고 집행 시 학연 등의 사유로 광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광고·홍보비 집행을 관리할 것.
29.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에 따라 회의비와 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
30. 회의비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것.
31. 직렬별, 직급별 순환보직을 철저히 하여 인사 이동에 정확한 근거와 기준

을 갖고 추진할 것.

32.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직렬에 대한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계발이 가능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할 것.
33. 공사의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예산·회계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4. 비수기 발전소 가동이 없으므로 교대근무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논의할 것.
35. 호디 마곡사옥에 4세대 지역난방실증사업 추진 후 절감효과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
36. 서소문 수소충전소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시민의 불편함이 야기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7.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
38. 대행사업 인건비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39. 기타 태양광 사업 중 유기 박막형태양광 사업의 실증은 부적절하며, 과다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없으므로 시정할 것.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55건

대변인 : 9건

1. 수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것과 관련증빙이 미비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회계 101페이지 보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자체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인쇄 소모품비 등 월별 소요 예상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지출이 아닌 통합 발주 방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바람.
3. 대변인은 서울시 의정에 대한 왜곡 보도 정정에 적극 임하기 바라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전담 법무사 및 대응 메뉴얼 구축을 통해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함.
4. 국제 홍보 전문 요원 등 특정 기술이 필요한 직책 채용 공고 시 해당 기술 자격 및 시험 증시 소지자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를 이행 바람.
5. 작년 행감 때 언론 인터뷰 실적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시장의 방송매체를 통한 인터뷰 추진실적이 저조함.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과 대변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함.
6. 올해 외신 보도가 9월 말 3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임. 외신기자를 활용한 해외 언론 소통 강화 및 서울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외신에 대한 빠른 대응과 전략을 모색하여 대책 보고서 제출할 것.
7. 서울시의회 시정에 관한 홍보가 미흡함. 자치구별 지역 신문을 활용한 홍보 방법을 모색해서 서울 시정 홍보 강화에 노력 바람.
8. 전문가 기고 관련 매체 편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9. 외신 보도 내용 모니터링 및 취재 시 대변실에 번역 업무 관련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용역 업체가 따로 지원하는 이유가 의문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개선하길 바람.

□ 홍보기획관 : 9건

1. 홍보기획관 소관 재단 이사회 참여가 저조한바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를 통해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
2. 홍보기획관 산하 재단 이사회 중 120다산콜재단 이사회에는 홍보기획관이 100% 출석을 한 반면, TBS 이사회에는 3회 불참한바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
3. 홍보기획관이 TBS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방문 지도가 약 5회 있었는데

실무자급 수준의 방문이었던 바 향후 홍보기획관이 직접 방문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것.

4.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차량 중 운영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불용처분 등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세금이 낭비된바 향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것.
5. 서울브랜드 사용 승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바 향후 세부지침 마련 등의 정확한 기준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
6. 현재 120다산콜재단 상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시간대별 인원 현황 및 배치를 재검토하여 상담사 배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보고하기 바람. 또한 성과별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보고할 것.
7. 미디어재단 TBS와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작성 시 TBS는 출연금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120다산콜재단의 경우 출연금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
8.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관련 모바일의 경우 전년대비 30.7점이 하락한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할 것.
9. 명예시장 위촉 분야가 축소된 것 같아 향후 명예시장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문화본부 : 22건

1. 문화본부의 청년자율예산 사업들이 문화재단 사업과 유사함에 사업상 중복이라 판단되는 사업들은 편성하지 않도록 요청.
2. 뉴미디어매체(SNS) 홍보를 산발적으로 하기보단 총괄을 지정하여 내실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길 요청. 또한 유튜브 홍보방안 보고할 것.
3. 공공도서관 예산이 감액되고 축제와 같은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업의 본질이 뒤바뀐 것임,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예산 복원 요청.
4.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사업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바 사업 실효성

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바람.

5. 서울미래유산 선정 이후 별도 관리가 없어 멸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바 신규 선정정보다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요청.
6. 2015년 이후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 이주, 정주대책이 공회전되고 있는 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청.
7. 모아주택사업 선정 지역인 풍납동 5권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률 규제 등을 완화하여 2, 3권역 주민들이 특별공급 등을 통해 이주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주택정책실 등과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
8.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 건축규제(3권역 지하2m 굴착, 지상21m 건축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한성백재박물관이 박물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10. 문화시설을 한곳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시설들이 연계되어있는 거대한 문화벨트로 육성해주시길 요청.
 - 푸른도시국이 아닌 문화본부가 주가 되어 문화비축기지 광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저조한 공간대여율 및 유튜브 조회수, 부실한 홈페이지 안내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인 노들섬을 문화본부는 제대로 관리·감독하도록 요청.
12. 서울시향 해외 순회공연이 업무보고와 달리 관객 동원이 저조했었음. 앞으로는 현지 홍보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람.
13. 미술관, 박물관 업무를 소관하는 박물관과는 법개정에 발맞춰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
14. 돈의문 박물관 부지의 경찰박물관이 2년째 공실로 재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도록 요청.
15. 왕궁수문장 사업의 예산집행이 연말 11,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에 예산낭비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요청 및 연도별 일정에 따라 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16. 채용, 민간위탁 절차가 문화본부 각 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바 문

화본부가 중심을 잡고 행정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요청.

17. 남산골한옥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가 서로 달라 엄숙한 전통혼례 중 시민을 위한 맛 축제가 진행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18. 입찰 자격요건이 사업마다 상이한데 문화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은 입찰 자격요건을 통일해주시길 바람.
19. 문화본부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운영상황이 다르기에, 위원회 운영이 없는 경우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감액, 통폐합, 조례를 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20. 풍납동 문화재 관련 부서가 문화재 보존 측면에만 치중되어있음, 법률상 정해져 있는 주민지원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여 풍납동의 관광 활성화, 이주대책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팀 인력 보강 및 관련 T/F팀 구성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요청.
21. 노들섬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람.
22. 운영규정이 없는 지방문화원에 지원금을 지원하는건 향후 부당집행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률검토를 통해 지원금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

관광체육국 : 22건

1. 체육시설 안전사고 대다수가 야구장 파울볼 관련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적극적 시민 안내와 안전 대책 마련 보고할 것.
2. 고척돔 광고판 수익이 잠실야구장에 비해 너무 소액.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의심되며, 고척돔 광고단가 관련 계약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구단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데, 철저한 감사과 함께 재계약 시 고려 바람. 또한 조치후 보고할 것.
3. [체육회] 서울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관련, 부정을 저지른 임원이 제대로 징계도 없이 상급자로 재직중임. 부패에 대한 자정작용이 불가하다 판단되며 보다 강력한 대응 필요함.
4. [체육회] 노원구 궁도협회 등록증 회수 건 관련, 노원구체육회에만 책임

을 미루지 말고 서울시체육회의 관리 책임이 필요함.

5. 자치구체육회에 대한 서울시 관심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은 체육회와의 소통 부재이며 자치구체육회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 바람.
6. [체육회] 체육회장 진료 일정을 사유로 행감 이석 요청을 한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가 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감사요청 원함
7. [체육회] 제23회 스포츠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구체육회 내부로부터 단체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데, 탄원에 대한 조사 착수가 아닌 민원인 회유를 시도한 것은 감사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며,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명백히 어겼으나 물증이 없어 딱히 조사 하지 않았다는 변명에 매우 유감임.
8. 관광특구 중 하나인 이태원에서 참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대중이 모여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관광상품이 된다는 기존 입장과 대조적으로, 대중문화에 무관심하였다 생각되며, 인파 집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람.
- 대규모 관중이 밀집하는 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쓰기 바람.
9.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저가 덤핑관광 등 불건전한 업계 문화 조성, 관광객의 간접적 피해와 서울시 이미지 훼손 관련 질적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10. 서울페스타 관련 업무보고서 성과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 개선 바람.
11.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기본계획 내용 중, 신빙성 낮은 인터넷 사이트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발견하였는데, 기본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으니 향후에는 철저한 검증 바람. 더불어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바람.
12. [체육회] 과거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 기간에 맞춰 고액의 기탁금 및 회장 회비 납부 규정이 수시로 바뀐 것은 특정 후보를 제외한 타 후보를 배제하고자 일부러 계획한 목적으로 보임. 공정성 위반에 대해 책임을 인지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재심의를 바라며, 재심의 진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해 확답 바람.

13. 해외 우호 도시와의 공동사업 등이 전무하고 고민이 부족함.
14. [체육회] 각종 선거 비리를 방관하고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였음. 정당한 권한 행사 및 규정 강화 등 방안 마련 보고할 것.
15. 목동운동장 풋살경기장 대관 관련 카드결제 불가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민원 관련,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건이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부정 행위 가능성도 있다고 봄.
16. 풋살사용료가 잘못 책정되어 지급된 부분 관련, 관련자가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니 유의 바람.
17. 재단의 해외 MICE 및 박람회 순방 비용에 대한 지원 예산이 없음. 외국 관광 기업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지원 바람.
18.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별도 운영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요청.
19. '22년 업무보고 내용인 '전공체육시설 표준 운영지침' 수립 시, 전문가 의견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횟수, 시간, 재등록 회원 독점문제 등에 시민의견도 적극 반영 필요.
2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지정 기준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데, 안전 상정을 회장이 하는 것은 종목단체에 대한 회장 권한이 없다는 말과 모순됨.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회장의 판단 없이도 심의하여야 함.
21.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 성급하게 수립되어 본래 조례 개정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표면적 사업이거나 중요 내용을 누락하였음.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 바람.
22. 풍납동과 같은 역사 지역은 관광지가 아니어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매장문화재로 인한 규제만 강화하고, 관광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이라고 봄. 문화본부와 협력하여 풍납동의 관광지화를 추진하여 향후 관광특구로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서울역사박물관 : 9건

1. 기관의 소중한 재산인 유물을 재난상황에서 지킬 수 있도록 소방·방재 대

책 마련 요청.

2. 서울역사박물관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중대재해에 관하여 지적을 받은바 있음, 올해 1월 중대재해 관련법이 시행됐기에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청.
3. 서울역사박물관의 SNS 홍보콘텐츠의 조회 수가 매우 저조함, 홍보 대상에 따른 컬러 콘텐츠를 제작해주시기 바람.
4. 전시관람객 수와 전시 만족도 참여자 수 차이가 높음, 전시관람객들의 만족도 응답률을 높이도록 수기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가 수행되도록 요청.
5. 서울역사박물관의 홍보를 일률적으로 하기보다 분관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6. 안전사고 관련 분관의 사전 안전점검 횟수가 본관에 비해 저조함, 또한 넘어짐, 부딪힘에 대한 시민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바,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요청
7. 소장유물의 활용도가 저조한바, 이를 높일 수 있는 대책 요청.
8. 본관과 분관마다 공용차량이 배치되어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관의 공용차량을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재배치하여 공용차량의 운영도를 높여주시길 요청.
9. 기관의 민원이 단순한 민원뿐만 아니라 불친절 등 서비스 관련 민원도 많기에 직원들의 대시민 서비스에 유의해 주시길 요청.

서울시립미술관 : 7건

1. 기관의 소중한 재산인 유물을 재난상황에서 지킬 수 있도록 소방·방재 대책 마련 요청.
2.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소통프로젝트를 통해 자치구 협력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협력 횟수를 확대하고,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에는 예산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3. 서울시립미술관의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외부활동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바 이를 잘 준수해주시길 요청.
4. 기관 보안에 있어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노후되고, 저성능의 CCTV는 조속히 교체해주시도록 요청.
5.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별 전시 보도실적 차이가 큼으로 미술관은 전시 홍보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주시길 요청.
6. 올해 종합감사를 통해 많은 부분이 지적받은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과 지침 준수 요청.
7. 서울시립미술관의 야외설치작품의 작품안내 QR코드가 다른 기관의 작품을 안내하고 있음.

□ 세종문화회관 : 17건

1. 임대사업 관련 행정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리빌딩이 끝나더라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철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집행부 규정에서 공유재산 임대 시 무조건적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명시하여, 업체 부담이 과도해지고,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기준이 개정되어야 함.
3.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공고를 서두른 것이 입찰 가격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이며, 보다 적절한 시점에서 입찰을 추진했어야 함.
4. 미래전략TF 업무 중 하나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간접적으로나마 논의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은 무성의한 자료 제출임.
5. 오케스트라,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오케스트라만으로 축소되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반영해야 한다고 봄.
6. 예술로 동행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하반기에 공연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인력 운용 등 경영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제 인식 바람.
7. 유스오케스트라 단장 자리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필요하게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기에 위험성이 매우 큼. 이번 비리 사건은 이에 대한 결과물이라 판단하므로, 유스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향과 협의하여 빠른 조직개편 바람.

8. 과거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과 업무 외 지시(갑질)로 감사대상이 된 임원이 존재했는데, 자신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달라는 해당 임원의 요청을 감사실이 수용하는 일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제대로 된 징계조치 받지 않았던 사례가 존재함. 감사조직이 굉장히 부패한 상황이라 볼 수 있기에,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접수되는 고발에 대해서 냉정한 대응 바람.
9. 위탁업체 직원의 업무 사항 숙지가 되지 않아 굉장한 혼란을 겪고 공연이 지연됐음. 향후 주의 바람.
10. 야외행사 진행 시 우천 취소로 막대한 매물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날씨가 좋기만을 바라기보다는 우천 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리빌딩 추진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계획했던 세종충무공이야기 조성공사, 지하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 등 각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온라인 대관 신청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고 접수도 불가능함. 확인 및 개선 바람.
13. 재택근무 관련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함. 향후 자료 제출에 유의 바람.
14. 예술단원의 근무시간은 공연발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함에도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였고, 같은 문제가 과거에도 지적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음. 근태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복무태만 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및 시스템 전면 개편 요청함.
15. 근태시간 관련 실질적 복무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자체감사 확인 바람.
16. 직원 전체를 위하는 것처럼 적혀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단체협약 조항은 직원 복지라는 노조의 본질에 위배되어 부적절함.
17. 단체협약 5조에는 노조 가입 불가능 임원 대상에 인사·감사 담당자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내부 감사의 객관성을 저해하므로 수정해야 함.

□ 서울시립교향악단 : 14건

1. 서울시향의 세계적인 콘서트 브랜딩 구축을 위해 세종문화회관 외 새로운 부지에 서울시향 단독 콘서트홀 건립 추진 필요.
2. 공연장 시설이 없는 서북권의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에 서울시향 단독 콘서트홀 유치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사업을 시행하길 바람.
3. 작년 지적 사안이었던 악기·악보 전문위원 업무분장에 관한 내규 규정이 현재까지 조치 예정임. 조속히 시정 바람.
4. 8년째 악장의 공석과 동일 인물의 부악장 체제는 조직 운영의 비합리적인 행태가 우려됨. 조속히 시정 바람.
5. 서울시향은 10년 동안 내부 단위 평가 미시행으로 불공정한 역량 평가를 이행해옴. 조속히 시기에 맞는 평가방식을 마련하여 서울시향 단위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6. 공무원 조직을 포함한 서울시향의 단위들도 일반 공무원과 공정한 정년 제도 시행이 필요함. 적극 검토 바람.
7. 일부 자치구에 편중된 서울시향 공연은 소외계층 및 문화 향유를 요구하는 시민의 수요 파악과 계획수립을 통해 적극적인 공연 개최를 당부함.
8. 영상 업체 계약 시 제작 및 공유 등 체결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업무 이행 바람.
9. 서울시향 대표이사의 공적 자산인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임. 서울시향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태도를 시정하길 바람.
10.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 확대 및 지역 방문 공연 대시민 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고할 것.
11. 채용 부정 의혹 방지를 위해 합격자 공고 시 응시자 및 합격자 수를 명확히 표기 바람.
12. 협찬 사업은 일반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실적 달성률이 매우 낮음. 현실적인 사업 진행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바람.

13. 전문가를 통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및 활성화하여 서울시향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길 바람. 또한 운영계획서 보고할 것.
14. 비합리적인 노동조합 단체협약서는 반드시 수정해야 함을 강조. 특히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인사원칙, 인사위원회 조항 관련 조속한 수정을 당부함.

□ 서울문화재단 : 9건

1.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당부 및 요청.
2. NFT사업은 가상화폐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NFT 발행이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 해당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 요청.
3. 예술청 공동운영단 인건비가 실제 활동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바, 계약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공동운영단 규정에 나와 있는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설치·개최하여 공동운영단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요청.
4. 예술이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다양한 융합예술들이 확대되고 있는바 재단이 민간과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람.
5. '서울 스테이지11' 사업 취지는 바람직하나 다만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예술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어 재단이 문화향휴 기회를 확대해주길 바람.
6. 개인 기부금 및 기업의 목적 기부금을 그 원하는 바대로 잘 집행하도록 요청.
7. 아동과 청소년 대상 전문예술교육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예술교육 확산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함.
8. 소수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거버넌스 운영 개선 요청.
9. 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문학 부문 등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

□ 서울관광재단 : 9건

1. 과거 빛초롱 축제는 캐릭터 조형물 전시 위주였는데, 저작권 문제 및 포

절 논란의 문제와 더불어 전통등 홍보의 본질에서 벗어남. 향후 사업 추진시 개선하여 광화문 광장을 전통등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집중 바람.

2. 관광플라자 입주 업체 성장 컨설팅 프로그램 횟수와 참여자 수가 올해 현격히 줄었는데, 1:1 멘토링은 한 명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봄.
3. 관광플라자 내 관광스타트업 입주공간 운영 사업 관련 입주 업체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퇴거 시점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관광플라자 입주사가 21년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함.
5.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석 인원이 너무 적는데, 여행사 등 관광업계 및 종사자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전반적인 개선 바람.
6. 예비비 사용이 2건(서울 도심등산 관광활성화, 비짓서울 SNS운영 활성화)있는데 예비비 사용보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예비비 사용보고는 분기별 보고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람.
7. 정관상에는 조직이 4본부인데 실제로는 2본부를 운영 중임. 정관을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맞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8.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요청 드림.
9. 역사적 가치가 높은 풍납토성이 서울관광지도에서 누락되어 보완 바람.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16건

1. 다수 프로그램의 청취율 및 시청률 향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
2. 허술한 재물조사 시스템으로 손망실된 TBS 자산 관리가 미흡한바 향후 전문적인 재물조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산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불공정 및 편향적 방송송출을 중단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
4. 특정 성향의 예능형 시사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로컬리즘 기반 지역 공영 방송 비율을 높이도록 할 것.
5.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는바 채용 시 규정에 부합하는 공

정한 기준으로 채용하기 바람.

6.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제재 및 행정조치의 미이행 사항들에 대해 이행하도록 할 것. 임원진의 불성실한 태도는 미디어재단티비에스의 내분 구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재단의 발전과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이므로 적극 시정할 것.
7. 계약서 작성 시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가 다수 발견된바 향후 계약 시에는 계약서 간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일자가 방송 일자와 동일하거나 아예 계약날짜가 누락된 경우도 존재하는 바, 계약서의 양식을 통일하여 예상치 못한 불미스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반을 기할 것.
9. 수당 지급 오류로 인한 환수조치가 존재하는 바, 향후 수당 지급 오류가 발생하여 환수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상세히 진행할 것.
10. 의원 요구자료 회신 시 축소 제출 또는 허위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바 향후 의원의 자료요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 후 보고할 것.
11. 시청자위원회 및 방송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 후 보고할 것.
12. 정치적 중립성을 통한 공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보고할 것.
13. 재난 방송에 대한 규정 강화 마련 및 특별재난방송 등의 빈도 증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보고할 것.
14. 공문의 문서번호 부여 누락 등 공문서 관리 실태가 미흡한바 향후 공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서기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5. TBS FM 상업광고는 위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광고를 지속적으로 송출하였음. 허가사항대로 상업광고를 중단하도록 할 것.
16. 자체 자원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

120다산콜재단 : 12건

1. 평가 기준에 상담 콜 수, 통화 시간 등의 정량적 평가뿐만이 아니라 상담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평가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2. 업무보고의 응대율은 상담자와 연결되지 못한 콜 수를 제외하여 과대 평가되었음. 제출 자료의 '평균대기시간'은 대기시간 3분 경과로 인한 자동 종료로 인해 과소평가된 수치임. 향후 응대율은 총 인입량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료 파악에 혼동이 없도록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길 바람.
3. 대기 가능 인원에 30명의 제한을 두는 것, 대기자 30명 안에 들지 못하면 30초 경과 시 강제 연결종료 시키는 것, 대기자가 되더라도 3분 경과 시 강제 연결종료 시키는 근거가 빈약함. 상담원이 대기자 수를 알수 있도록 하여 상담 속도를 조절하는 등 총체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4. 시설보수에 따른 서비스 장애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경우였음에도 하루 전에 공지를 올리며 사전 예고에 소홀했음.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람.
5. 외국어와 수어 상담률이 매우 저조한데,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지 않은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바람.
6.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가 미비함. 자격증 보유자에게 채용 가산점 제공, 인센티브 제공, 직급수당 대신 자격수당 신설,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길 바람.
7. 직원 전체가 아닌 조합원의 입장만 대변하는 협약 조항 등을 볼 때 노조의 정체성이 의심됨. 파업 전 사업자에 대한 통보도 불성실한 면이 있어 귀족 노조, 역갑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8. 2020년도 노트북 관련 수의계약이 수차례나 무계획적으로 운용됨. 또한 사업 진행 이후 계약서가 뒤늦게 체결된 내역이 있으므로 재발 방지에 힘써주기 바람.
9. 긴급성이 요하지 않음에도 동일사업 내 수의계약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계약건으로 통합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챗봇 상담은 1:1로 이뤄지지 않아 상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상담사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청사 사무환경 정비 사업 관련 잦은 사업계획 변동으로 집행 예상액 편차가 시점별로 지나치게 큼.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12. 특정 시간 응대율 저조에 대한 개선책 강구 및 인센티브 방안을 보고할 것.

6. 보건복지위원회

118건

□ 여성가족정책실 : 26건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법인 관련하여, 하나의 법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법인, 동일한 법인이 장기간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점 없는지 검토하고, 일부 자치구의 위탁 개소 수 제한하는 조례 등 사례를 참고하여 시 방침으로 시달할 수 없는지 개선 바람
2. 외국인 유아 보육료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 지원 방안 모색할 것 (안산시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유아 지원하고 있음)
3.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은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입양(국내입양→국외입양)→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의 순서로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양육시설로 보내고 있음. 또한, 양육시설에서는 후견인 지정신청 등 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장기간 계속보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아동복지센터에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는 통보 조치도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양육시설로 입소되지 않고 입양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4. 유사중복사업은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정리 필요함
 -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유사성,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심마을보안

관의 역할 구분 필요함

5.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명칭 변경 및 사업 조정 필요
6. 1인가구지원센터 공간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전달체계, 인력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 검토
7. 안심이앱 디자인, 기능을 업그레이드 바람, 영어로 사용 시 기능이 멈추는 등 개선 바람
8. 금천구 국공립 어린이집 등기누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해 담당자 및 금천구청에게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할 것.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등기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금천구 어린이집 아동 정원 미달에 대한 원인도 파악하여 보고할 것
9.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3년간 집행률이 낮음.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고민 필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늘릴 것
10. 여성가족정책실 세출 결산 집행 잔액이 2021년 790억, 2022년 980억에 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위원회들의 예산 집행률도 저조함.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1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 교육 및 행사, 자료 제작 등이 연말 4분기에 집중되어 있고, 컨설팅이 너무 많은 등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1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의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원화하여 역할을 구분하는 등 효율성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꿈나무카드로 편의점에서 빙과류 등 간식류도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 가능한 편의점 업체도 확대하도록 할 것
14. 202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 불용액이 많은데, 과다 예산이 편성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정할 것

15. 공동육아 부모 자조모임에 모임별 활동비 40만원, 특별활동비 15만원을 지원 하는 현금성 지원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 판단되므로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16.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구시대적이고, 교육 수료율, 최종 취업률도 낮음. 수료율과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교과과정도 4차 산업 혁명 시대 사회·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을 길러내는 교과과정으로 전면 재검토 할 것
17. 우먼업인턴십 3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70% 정도임.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 또 2기에서는 중도 포기율이 40% 로 높았는데, 개선 방안 고민 필요
18. 사용자 지위에 있는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부정수급임.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의 회계규칙 미준수 행위가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방침을 세우고,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기관들의 회계·재무 교육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할 것
19. 국공립 어린이집 12곳을 위탁 운영 중인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에 보육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인 정관의 목적 사업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법인의 사례들을 재점검할 것
20.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단체의 적정성 검토 바람
 - 올해 35개의 지원단체 중 3년 이내 통계로 10개 단체가 중복되고, 기금사업 참여자 중 8개 단체가 시 수탁기관임. 공모사업 공고문에 유사사업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공모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배하고 8개 단체가 중복선정됨.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평등기금의 사용 방향에 대한 연구와 시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금 사용 방향 설정할 것
21.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구직활동지원금 설계 재검토 바람
 - 여성들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효한 정보제공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필요

- 22. 새일인턴 관련 시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음, 개선 바람
- 2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및 재공인 컨설팅을 받고도 80% 탈락, 확실한 지원을 위한 컨설팅으로 필요한 선정방법 개선이 필요
 - 평가의 일관성을 위한 채점 표준화 필요
 - 어린이집 신규 공인평가지표, 정확하고 표준화된 지표 만들기 바람
- 24.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개선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공기질 인증을 위해 매트를 깔면 안전문제 발생하므로, 복지부·환경부·기후환경본부 등에 제안 바람
- 25. 아이돌봄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유급 의무교육
 - 보수교육에 따른 교육수당을 지원하도록 예산 마련, 대책 수립 바람
- 26. 성폭력제로 2.0 추진 관련,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데 활성화가 필요하며, 직원 성비 균형 배치 계획 점검 필요함

여성가족재단 : 4건

- 1.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 연구 지원 추진 건수가 많은데,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 2. 스페이스살림 건물의 하자가 너무 많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하자 보수와 안전 진단을 마친 후에 키즈카페를 개소하도록 할 것
- 3. 스페이스 살림 하자보수 관련
 - 스페이스 살림 하자에 대하여 감사 청구,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4.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 관련
 -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 선발 시 규정에 맞는 선발 및 지원 필요
 - 스페이스 살림 입주라는 혜택에 대한 예산 투여대비 효과 등 철저한 평가 필요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1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영보자애원)

<여성능력개발원>

1.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거나 오히려 결과가 악화되는 기관도 있음. 컨설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할 것
2.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18개 모든 기관에게 주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 목적에 어긋남. 인센티브 지급제도 개선 필요
3. 디지털여성인재양성 관련 시장변화에 맞추어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교육과정 개발과 고사양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비 등 인프라 점검 및 리뉴얼 필요
 -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요구사항 파악 필요
 - 내년 구직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를 보면 지원대상이 2,500명에서 출발하여 2단계에서 100명으로 좁혀지는데 중도탈락한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

<동부여성발전센터>

4. 10년 이상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도 3개월마다 재평가해서 재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강사 공개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임. 강사 채용 관련 규정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재정비할 것
5.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체결한 것들이 과다하게 많음. 다른 민간 기업 등과도 많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관장이 단시간 연차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
7.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타 기관에 비해 징계가 많은데 대책 마련 필요
8. 2022년 직업교육 사업목표가 180 강좌인데 106 강좌만 개설되었음. 부풀리

기식으로 예산만 책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서부여성발전센터>

9.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낮은 평가등급(2020년:C, 2021년:B, 2022년:C) 받음. 자체적 조직진단과 근본적 원인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남부여성발전센터>

10. 최근 3년 사업비 집행률이 60%에 머물며 예산 불용이 3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영보자애원>

11. 기관장이 직접 생활인들의 병원 방문이나 물품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이 잦음. 기관장은 기관 전체 운영 총괄을 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부족한 인원은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복지정책실 : 20건

1. 복지정책실 22년도 신규사업이 24개나 되는데, 부서별로 복지서비스를 계속 생산하다 보니 통합상담이 안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중복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점검이 필요함
2.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반복의 원인은 무엇인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 바람
3.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대해 형평성을 가지도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푸드뱅크·마켓 종사자가 동일직급으로 편성되어 있음. 향후 임금체계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어르신·장애인·노숙인 지원주택의 공실이 각각 18실, 9실, 28실이나 있음. 계속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공실률을 낮출 개선방안 마련 바람
5. 2020년, 2021년 복지정책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많음. 사유 파악해서 보고 할 것
6. 28개 장애인단체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단체는 1개뿐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 차량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7. 시립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것
8. 노노케어 이용률이 저조한 노인복지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통폐합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9.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매년 저조한 기관들이 있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안내·조치할 것
10. 소아마비협회 운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정립전자에 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재발 방지 조치 필요. 시설장 사퇴 여부도 확인해서 보고할 것
11. 2001년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서울시는 오랫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방치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복지부 지침에 따른 정관 개정을 제도할 업무 방침을 수립할 것
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많은 인력과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비전문적인 저인망식 보편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효과가 미미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할 것
13.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다수 존재하는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 내년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14.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에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등을 시민의 세금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 협회에 대한 지원 방식은 재고하기 바람

15. 서울시립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임금 체불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방침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6. 노인학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서울복지거버넌스 어르신분과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서울복지거버넌스는 노인복지나 노인학대예방 정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를 재정립하여 운영할 것
17. 하나의 법인이 10개 이상의 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장기간 시립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 위탁법인의 전문성과 목적사업이 불분명한 법인 등이 다수 있음.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내부 방침을 수립하기 바람
18. 사단법인 희망살림 문제 관련하여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 서울시가 허가한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9. 중계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많이 열렸고, 코로나 감염도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자도 2022년 한 해 동안 11명에 이르는 등 직원관리 및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종합적인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20.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중복되지 않게 시행하겠다 했는데, (강서구의 경우)받는 사람의 70%가 중복 수혜자인데 개선 필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25건

<서울시복지재단>

1. <지원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시 보고 요청
2. 몇 년간 지속적으로 했던 연구 사업들은 결과를 분석한 후 추후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3. 연구 자문단 구성 시 자문위원 역량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능 적합성을 재검토하라는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 재설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5.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관련
 - 공익 소송 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꼭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이라 볼 수 있는지. 공익법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소송사건 성격 및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단순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을 신청인으로 한다면 기존의 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및 법무부 산하의 공익소송기관들과의 예산투여 중복업무인지 검토필요)
 - 복지재단에서 각종 법률구조기관들과 별개로 공익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정체성 확립 필요
6.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정신장애인 야구교실 개최는 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7. 공익법센터 비롯 재단 임직원들의 외부강의 비율이 높아, 재단 자체 목적에 부합한 기능 집중 필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8.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제 이용인원이 현저히 적으며, 데이케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예산과 인력 투입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노조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의 권리와 고용안정에만 치중한 결과로 사료됨. 문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구조개편 필요함
9. 산하 어린이집 원장이나 기관장의 성비위 문제 발생 시, 구청장 권한 사한 검토하여 건의 개선 필요. 원스트라이크 제도 검토 필요
10. 노원센터 장애인활동사업 폐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개선 필요

11.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비 평균단가는 2,543원인데 비하여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급식비 평균단가는 4,026원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필요
12. 민간 요양보호사는 3시간 근무에 69만원, 4시간 근무에 80여만원 정도를 받는데,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 225만원 월급을 받는 인건비 구조 개선할 것
13. 타 기관에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 근무복을 1년에 3회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근무복 관련 계약 예산 쪼개기 문제도 파악해서 보고할 것
14. 장애인 고용비율이 2.2%로 의무고용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15.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감액한 후, 5번이나 예비비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임
16. 종합재가센터, 본부 임대료가 과다한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7.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장애아동수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적은 등 민간·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별화되고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어린이집 계속 운영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
18.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3월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1월 말에나 조직 개편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직개편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과 논의하여 진행할 것
19. 2021년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개선 필요. 반면 보건복지부 업무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는데 평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20. 교통비가 2020년 349명 3억 4800만 원, 2021년 297명 4억 9800만원 지급되었고, 급식비가 2020년 488명 3억 7600만원, 2021년 414명 5억 6400만원 지급되었음. 둘 다 2021년에는 지급 인원이 2020년에 비해 더 적었음에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할 것
21.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조사기관명도 공

개되어 있지 않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할 것

22. 지급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규정에 맞게 지출하도록 할 것
23. ‘좋은’ 돌봄, 급·간식 ‘차별화’와 같은 가치판단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공공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보임.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
24.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실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이 필요함
25. 2022년 9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인원은 5만 4천 명이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각 지역마다 3천~5천 명 가량의 대기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임. 학부모들이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 돌아보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개선할 것

복지 관련 시설 : 10건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장애인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전체>

1. 사회복지 실습비, 기관장 연봉이 기관마다 차이가 큼. 통일된 규정 마련 필요
2. 노인복지법에 따라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등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을 미이수한 종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 바람
3. 서울시 복지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해외 출국 시 신고 누락 등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 필요하며, 기관장들이 복무 관련하여 모범을 보일 것
4. 복지 기관 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 고충처리위원회를 잘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도 반드시 남길 것

<노인종합복지관 전체>

5. 노인복지관 차량 내구연한이 8~10년인데 보통 10년이상 사용하고 있고, 사무용 컴퓨터는 노후화되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있음. 관련 예산 등 검토하여 내구연한 지난 차량 등은 조속히 교체 필요
6.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특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대에 맞도록 패러다임 전환할 것
7. 채용 공고를 살펴보니 조리사 월급이 190만원인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8. 이직률이 다른 기관의 평균 이직률보다 높은 기관들이 있음.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9.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등 공개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에 따라 적절한 과정을 거쳐 운영되도록 평가목표를 제시하시고 운영위원회 출석 심의를 통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내용 제시 필요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10. 접수입 내역에 '단체해상공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단체상해공제'로 용어 수정 필요

시민건강국 : 1건

1. 서울 시내 의료기관들에서 '65세 이상 무료 진료'를 내걸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면서 환자를 유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챙기는 위법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 정해진 대로 무료 진료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시설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유해가스 배출관 노출, 가스 통 실험실 내 비치, 건강에 유해한 정도의 소음 환경 등), 종사자들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검사의 정확도가 곧, 신뢰도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화된 검사장비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험·검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등의 미흡 문제 개선 필요

공공의료재단 : 2건

1. 서북병원의 경우 빈 병상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 턱이 높아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등 시설 환경이 열악함. 시설에 대한 보완 계획을 세울 것. 서북병원 장례식장 직영 운영에 관하여도 철저히 검토할 것
2. 현재 운영 중인 시립 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20%에 머물고 있고, 의료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병원 건물을 새로 짓는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 생각되므로 시정 필요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6건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1. 평균 입원 대기 일수가 540일인데, 입원 대기 환자가 언제 입원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입원 대기 정보 고지 시스템을 만들기 바람

<서북병원>

2. 호스피스 병동 간호 보조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추가 총원이 어려워 환자를 더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임. 공동간병은 파견·용역도 불가능함. 취약계층 환자가 제한 없이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고양정신병원>

3.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낮은 항목 지속적 관리 및 조치 결과 보고
 - 면회실, 재활프로그램, 화장실 부문
4. 환자가 원하는 분야의 재활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 초빙 및 프로그램 다양화 개선 필요
5. 투약 오류가 있었는데, 안전한 약 투여를 위하여 약사 정원 등에 관한 근거 조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할 것
6. 병실 문이 투명한 곳이 있어 환자의 신체 부위 노출이 우려되므로 개선할 것
7. 보호사들이 정신질환치료보조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환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것
9. 지역사회 연계 강화 사업 달성률이 0%인데, 4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 환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환자들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1.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인권 교육 등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수행할 것.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12.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60~70%에 육박하고, 저년차 직원 이직률이 높은데 올해 고충처리 내용은 0건임. 고충처리위원회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보라매병원>

13.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의 영역별 결과를 참고하여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환경유지직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포함)을 마련할 것
14.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진료수당 및 시간 외 수당 부당 수급 관련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직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5. 입원 환자들에게 선거권 행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6.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 할 경우 환자가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음

◆ 건강 관련 기관 : 1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1. 광역치매센터 기억지킴이 앱 개발 용역 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2건으로 나누어 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 쪼개기가 의심됨. 용역계약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조치 결과 보고 할 것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78건

□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47건

1. 지정된 업체에 수의계약한 의혹이 있고 제대로된 품질검증 없이 안전성이 미흡한 마스크 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바 과거 마스크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안전총괄실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옥외 지진대피소인 학교운동장이 보안상의 이유로 문이 닫혀있는 바, 지진 발생 시를 대비하여 이를 시정할 것.
3. 올해 가양대교 투신시도는 12건으로 가양대교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살방지지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바, 가양대교에 자살방지지설을 설치할 것.
4. 안전난간 설치 및 관리는 안전총괄실이나 한강교량 CCTV 및 감지기 관리는 소방재난본부로 자살방지지설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한강대교 투신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
5. 가양대교 보도 폭이 좁고 난간 높이가 낮아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6. 안전총괄실 공사장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국토부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고발생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료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7. 동절기 안전정책과 관련하여 결빙안내 등과 같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전 예측 시스템 도입할 것.
8. 자치구 재난 발생 시 현재 재난이 발생한 자치구에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재난 전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9. 학교 주변 및 통학로 사거리 교차로에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 보도상의 도로표지병과 횡단보도 상의 도로표지병 설치를 확대할 것.
10.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과 관련하여 자치구에 예산 배정 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극 확인하고 점검할 것.
 11.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 가로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다수 존재하는바 가로수와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것.
 12. 아스콘 밀도가 낮게 시공되어 아스콘 알갱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로 인해 균열이 심해진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불량 도로포장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도로포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13. 도로 품질관리를 위해 겨울철 도로포장은 지양할 것.
 14. 서울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시행 또는 계획중인 바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15.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PC콘크리트 패널에 시공상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끝부분의 콘크리트 파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시공 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16. 현재 도시안전기본계획에서는 재난 발생 시 담당 실국에서 재난을 총괄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총괄하여 통제하고 수습하도록 소방이나 경찰 등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컨트롤체계를 만들 것.
 17. 재난 발생 시 실무자 현장 파견, 교통 통제, 재난 알림 등의 위기 대응 체계를 세분화하여 도시안전기본계획을 구축할 것.
 18. 영동대로 복단 고가차도 철거의 경우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바, 현재 추진중인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9. 불량맨홀 정비사업의 1순위업체가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적격심사 중 부적격업체 적발 시 후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
20. 최근 폭우 폭설이 증가 추세인바, 이에 대응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21. 재난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방안을 강구할 것.
22. 서울시 노후고가의 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
23. 서소문고가의 개축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보수할 것.
24. 청년층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월소득 기준이 없어 월 소득이 높아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나 ‘월 소득이 높은 청년층이 아닌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료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바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25.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취지에 불부합하거나 계획 미흡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자치구가 일부 있는바, 자치구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
26. 성내유수지교 하부구조물 점검통로는 시설물 손상 방지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나 출입구 잠금상태가 불량한바, 신속히 점검하고 조치할 것.
27. 성내유수지교 보행로 콘크리트 바닥면이 파손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바 조속히 보수할 것.
28. 성내유수지교 종점부 교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주변은 잡목들이 뿌리를 내려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바, 잡목 제거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실시할 것.
29. 성내유수지교 대부분의 배수구가 토사로 막혀있어 우천시 노면 배

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바퀴에 수막이 형성되어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바 배수구 유지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것.

30. 오륜교 차도와 보도 사이에 경계석만 설치되어 있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31. 방이고가 내 잠실에서 거여동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로 전면에 대형교명주가 있어 후면의 차량보호 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인바, 교명주를 다른 형태의 안전한 시설물로 교체를 하거나 제거할 것.
32. 방이고가교 상부 교면 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부 노면에서 침투한 빗물로 인해 하부의 교량 슬래브에 백태현상이 발생한바, 교면방수가 완전하지 않은 슬래브의 표면보수 공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
33. 서울시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바, 기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4. 서울시재난상황실과 소방의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할 것.
35. 120 다산콜센터도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인 대책본부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6.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는 운영 시기를 장마와 제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7.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사고 대응시 작동하지 않았던 바, 유사한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을 신속히 정비할 것.
38.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방범과 교통관리용으로 설치된 8만대의 CCTV를 서울시가 재난관리에 활용하도록 통합운영 플랫폼을 구축할 것.

39.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노선은 학여울이 아닌 대치우성아파트에서 종료되는 바, 각 사업설명 시 노선구간을 변경할 것.
40.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당초 공법이 몇 차례 변경되어 공법 적용에 혼선이 생김으로 인해 공사추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41. 지난 8월 폭우 이후 도로 지반이 약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싱크홀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
42. 한강교량 중 CCTV가 미설치된 교량이 다수인바, 미설치 교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CCTV를 설치할 것.
43. 올림픽대로 내 동부간선도로 수서램프 진입차량으로 지정체가 심각한 바, 현재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는 때늦은감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44.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계획이 도시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현재 진행중인 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시키는 등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45. 구일고가 철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것.
46. 서울시민에게 실제 필요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강구할 것.
47. 디지털정책관에서 관장하는 서울도시실시간데이터를 안전총괄실에 서도 사전 연계, 이용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

□ 소방재난본부 : 24 건

1. 지하주차장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감지기, 스프링클러(SP)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설치된 소방시설만으로 화재진압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바,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2. 현재의 화재 발생 현상은 과거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 신규임용

자는 물론 기존 재직자들도 특수 유형의 화재 사고에 대비한 실화재 훈련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실화재 훈련장이 갖추어지지 않아 관련 훈련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화재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

3.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9건에서 '재난출동' 중 발생한 사고가 78.0%로 가장 높으며, 그중 '구급출동시' 발생한 사고가 212건으로 59.1%, '24세~35세'가 165건으로 46%, '소방사'제급이 141건으로 39.3%, '운전경력 5년 미만'에서 280건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차 운전애 앞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운전경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운전연습장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
4. 이태원사고 당시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인파 통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소방차에도 현장대응용 휴대용 확장기를 비치하여 위급 상황시 원활한 주변통제를 실시토록 할 것.
5. 1963년 창단된 119청소년단은 현재 서울 109개소 3,555명이 활동 중에 있으나 서울시내 유치원이 932개소, 초등학교가 610개소, 중학교가 390개소, 고등학교가 321개소인 점을 감안할 때 활동인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됨. 어릴 때부터의 안전교육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이므로 119청소년단 활동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6. 소방드론의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하나, 고장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장발생 원인을 보면 '조작미숙(33%)'으로 나타나는바 드론 교육이 사용자별로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7.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운영실적을 보면,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점검과 관련 회의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

8.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예산과 소방력 낭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할 것.
9. 화재현장 출동 중 감지기 오작동이 확인되면 단순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감지기교체와 조치방법을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토록 하고, 1년에 2회 이상 비화재보 출동이 발생한 곳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할 것.
10. 한강안전시스템에 설치된 CCTV카메라를 살펴보면, 과거에 설치된 카메라(2015년)나 최근에 설치된 카메라(2021년, 2022년)나 화소수가 200만 화소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저성능장비가 최근 시설에도 설치된 사유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
11. 응급실 환자 거부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할 것.
12. 건축물 내 소방시설로 설치되는 급기댐퍼에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오작동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점검할 것.
13.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본 시설물이 소방시설로는 분류가 되지 않아 소방점검대상 시설물이 아니기는 하나 상인들 입장에서는 동일 장소에 중복적인 소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점검 방안을 강구할 것.
14.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되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예산확보 및 편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
15. 이태원 사고 수습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염려되는바 긴급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등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 할 것.
16.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소화약제(가스계) 자동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에 실패했던 상황을 보았을 때 추가적인 소방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과거 가스계 소화설비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7.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약 4만 3천 대가 설치되었고 운영성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8. 소방시설점검과 관련하여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보고서 접수 및 처리 방식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19.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히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
 20. 화염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포함되지 못하는 항목이 있는 만큼 직원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가 항목을 반영할 것.
 21. 전통시장 등과 같은 장소에 매설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만큼 관리 소홀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22.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과 관련해 건수 대비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저조한 상황으로 신고포상제 운영 및 대시민 홍보활동 현황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앱 등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23. 불법건축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적발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추적관리 할 것.

24. LPG가스를 사용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우 여전히 폭발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정책 추진을 통해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물순환안전국 : 30건

1. 신월 빗물 저류배수시설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 수리모형실험하면서 설계가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바 '23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인 대심도 빗물 저류배수시설 추진 시에는 수리모형 실험을 사전에 시행하여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조정석 철거 및 하상정리, 저수호안공 하상정리 증가 등의 사유로 당초 공사비 대비 50%이상 증액된바 이는 설계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추후 유사사업을 추진 할 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물순환안전국 추진 총 41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39%의 예산이 차년도(2023년도)로 사고 이월될 예정인데, 이처럼 예산현액의 39%나 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사고이월을 초래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4. 25개 자치구에 총 860개소 총연장 25,509m의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축하고 있으나 점용료 지급 또는 공공하수도 이설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가 사유지에 저축하거나 점유하였다면 점용료를 지급하거나 이른 시일 안에 공공하수도를 이설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5.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구매와 관련하여 현장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조치하여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6.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전문가 구성이 조례와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협의회 운영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
7.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화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품별 최적의 보관방안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할 것.
8.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제출한 설계량과 실제 준설량의 차이가 커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오차가 적은 과학적인 준설 설계량을 산출 방안을 배양할 것.
9. 한강유역환경청이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에 대해 오염총량제 BOD 수질기준 초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검사방법 개선 등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예측프로그램의 신뢰성, 정확도를 검증하고, 오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11.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 사업에 별건의 GIS DB구축 사업을 편성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편법 집행으로, 의회 예산 심의권을 다소 침해했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12. 2022년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원칙에 따른 인사, 업무에 따른 보상,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직렬별 배분을 세심히 살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13. 향후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공사 과정에서 강남역 일대 유입구, 유출구 등 공사 시행 시 주민 반발, 집단 민원이 예견되므로,

- 이를 대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반대 민원 대응 방안, 공사 추진 시 유입구 및 공사현장 부근 주민 인센티브 혜택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14. 물재생센터 약품 구매와 관련한 서울시 감사에서 특정업체 선정 청탁이 확인되어 2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한바 약품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공직기강 및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
 1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채용실태에 대한 서울시 감사에서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나타난바 인사·채용과 관련된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물순환안전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상위기관으로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것.
 16. 물재생센터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한바 노후 시설 개량 등 안전관리 분야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등이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7.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를 외부에서 건조 처리하는 경우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많으므로 절차를 준수하여 가급적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8. 집중호우 또는 폭우 발생 시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하여 예상되는 피해 및 용량한계, 그리고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19. 서울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갑작스러운 풍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률 증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0. 시민 참여형 폐수배출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점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1.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지역 내 저지대 지하주택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업

비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22. 내수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근본적으로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빗물받이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호우시 빗물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3. 직영인 물재생센터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의 사택 운영기준이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중인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
24. 2004년부터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25. 물재생센터에서 수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대체가능한 친환경 소독제를 검토하여 사용할 것.
26.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서비스의 경우 침수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선정되어 신림동 반지하 사고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바 침수지역지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것.
27.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없으나 약물 관련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민 보건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임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류수의 약물 농도를 줄일 수 있는 수처리방안을 모색할 것.
28. 물재생센터별로 운영 중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9. 서운로 저지고지수로 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됐다면 이번 침수

피해 저감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기간 중 집중호우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30. 침수취약지역 내 저지대 지하주택가 CCTV에 비상방송설비(스피커)를 함께 설치하고 하천범람이나 집중호우 시 경고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12건

1.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구매와 관련하여 현장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특정업체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조치하여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물재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기화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품별 최적의 보관방안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할 것.
3. 한강유역환경청이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에 대해 오염총량제 BOD 수질기준 초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검사방법 개선 등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서남, 탄천물재생센터 내 사택에 직원 또는 직원의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거주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5. 물재생센터 약품 구매와 관련한 서울시 감사에서 특정업체 선정 청탁이 확인되어 2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약품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공직기강 및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

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채용실태에 대한 서울시 감사에서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나타난바 인사·채용과 관련된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물순환안전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상위기관으로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것.
7. 물재생센터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한바 노후 시설 개량 등 안전관리 분야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등이 우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8.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무형태와 연장근무 수당 등에 대해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의제기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할 것.
9. 수방기간 전 빗물받이 청소를 자치구 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내수 침수 피해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사항 검토할 것.
10. 2021년 입사자와 2022년 입사자간 임금 기준이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기간, 경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평한 임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1. 물재생센터에서 수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대체가능한 친환경 소독제를 검토하여 사용할 것.
12. 물재생센터별로 운영 중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4건

1.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바, 공사장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 월드컵대교 가교설치 공사 중 사용한 작업배(폰톤)는 무게중심이동을 고려하지 않았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가교공사 재개 시 작업배(폰톤)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또는 다른 방법의 작업 방식을 검토할 것.
3. 월드컵대교 가교설치 공사현장에서 수동식 구명조끼를 착용하였으나 익사사고가 발생한 바, 공사장 근로자에게 자동식 구명조끼를 지급 등 수상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4. 월드컵대교 가교설치 공사중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 요인을 추정해볼 때 작업 수단 검증, 작업자의 안전 장구 착용 등에 대해 감리자, 발주자 모두 소극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모든 공사 수행 시 감리자,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적극적이고 철저히 수행할 것.
 5. 공사현장에 설치된 CCTV 중 일부만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송출되고 있어 공사장 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인지할 수 없는바, 공사장 내 CCTV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과 신속히 연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
 6.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불법재하도급이 지적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외 추가 의혹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사위원회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전반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사 중 설계변경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8.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것.
 9.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부실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었다가 다시 취소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에 대한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10.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비가 설계단계에서 반영되도록 되어있음에도 설계 변경으로 반영한 현상이 다수 파악된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할 것과 각 건설현장의 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11.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는 추가설계 부분을 발주자가 계약하지 않고 시공사와 설계자 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편법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편법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할 것.
12. 건설정보시스템에 각종 공사 준공도면이 누락된 자료가 78% 이상인바, 서울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면 입력을 철저히 할 것.
13.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신속히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
14. 공기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고 있는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 추진 시 사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보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준비를 거쳐 착수할 것.
15. ‘신청사 건설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결국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었음. 설계 부실로 예산낭비가 발생한 바 추후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삼아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16. ‘올림픽대로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공사’ 실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바 공사장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17. ‘올림픽대로 남단IC 연결램프 구조 개선공사’는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도로와 공사현장 입구가 맞닿아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사장 연결부를 개선할 것.
18.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설계를 재설시하고 있으므로 시공안전성이 높은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할 것.
19.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의 일부 심의 및 평가위원의 정보가 현행

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운영풀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

20.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실시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21.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가 포함됨에 따라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가 보여지는 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할 것.
22.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당시 계획되지 않은 난지한강공원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상당수 발생하고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진바 공사계약 이후 다수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것.
23.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중 시공사의 설계변경 제안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공사비 단가에 낙찰율 대신 협의율 적용 부분이 시민감사로 환수처분되어 시공사와의 소송이 진행된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시 지방계약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24. 건설공사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는 법으로 의무 규정하고 있는바, 미설치 현상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
25.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 도입 방안 강구할 것.
26.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중 공사와 전혀 무관한 '양화대교 하상잔재물 처리 용역'을 실시하는 편법 설계변경을 이루어진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7. 공무원 직접감리제를 실시함에 있어 인력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의 출입구 위치가 정체지역에 위치한 바 시계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
29. 공무원 현장 직접 상주 실시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및 인력 확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바 대책 마련 후 실시할 것.

30.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완료 후 개장되었으나 시공 하자가 다수 보여지는바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할 것.
31.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지하 암반으로 인한 장비 고장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공법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이 드는바 공법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32. '신림공영차고지 조성공사'의 안전난간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3.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추진일정이 변동되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을 편성하여 면밀히 사업을 추진할 것.
34. 서울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시행 또는 계획중인 바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 기술심사담당관 : 15건

1.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이 비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신기술·특히 적용현장의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불시점검 시행과 점검현장 수를 늘리기 위한 인력보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2.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추후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의무 점검 기간이 곧 도래할 예정이나, 품질시험소는 아직 수리재검정을 위한 인력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선제적 준비 방안을 마련할 것.

4. 현재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로 인해 많은 발주기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서울시에 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5.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강의 실적 및 성과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4급 이상의 공무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서울시에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월빗물 배수터널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
7. 품질시험소 청사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 서울시 공사현장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계획중인 공무원 직접감리제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9. 서울시가 택시미터기를 애플미터기로 전면 교체하기로 발표하였으므로, 품질시험소는 유희 검정인력 활용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사용량 감소가 예측되는 검정장비들의 활용 및 불용처리 방안을 강구 할 것.
10.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건설기술용역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만점을 받은 평가 항목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평가점수를 신뢰할 수 없는바, 보다 투명하고 정밀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기술심사타당성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적정 건수가 0건이 나온바,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절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
12. 공무원 직접감리제 추진에 따른 임기제 감리공무원의 급격한 증원으로 인해 감리공무원의 검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를 보완 할 것.

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특허관련자가 각종 심의에 참석할 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으므로,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14.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의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사후 평가보다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동점검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전기자동차 충전기 재검정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검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검정기기의 조기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기술연구원 : 16건

1. 연말정산을 외부용역(회계법인)등에 의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나친 외주화를 자제하고 내부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연구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 서울기술연구원 「인사규정」에 '성범죄 결격사유' 항목이 없어 성범죄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채용한 사례가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향후 서울기술연구원 「인사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 채용 시 성범죄 사항을 포함한 결격사유 확인을 철저히 할 것.
3. 개원 후 현재까지 수해와 관련하여 총 12건의 연구를 수행했는데 연구 결과가 서울시 정책 등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선제적 연구 및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서울시 기술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4. 서울연구원과 연구 분야가 중복되어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기술연구원만의 명확한 연구 분야를 확립할 것.
5. 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가 서울시 정책을 지원하지 못하고 연구원 혼자만의 성과가 된다면 인력, 예산, 시간 낭비로 이어지

는 만큼, 서울시 정책실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연구를 추진하길 바랍.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가됨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의 내외부 제보 및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감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적절히 처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7. 계약 관련 공고일보다 계약이 먼저 체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
8.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된 바와 같이 재물조사가 미 실시되거나 누락 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무형재물 등을 포함한 재물관리에 더욱 철저토록 할 것.
9. 정원(108명) 대비 현원은 98명으로 결원율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바 서울기술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추진을 위해 정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0.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
11. 서울기술연구원이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침수 피해, 이태원 사고 등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선제적 연구 및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연구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2. 현 연구원장 취임 이후 기술연구원이 상당한 연구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서울연구원과의 통합문제에서는 동등한 기준의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고 통합과정에서 기술연구원 역할, 직원 처우 등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토록 할 것.
13.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사용,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에 대

한 부정적 사용과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4. 연구 추진 세부 내역을 보면, '서울시 침수지도' 등의 연구가 물론 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침수예측시스템'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만큼, 기술연구원 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 市 유관부서, 서울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구가 중복하여 수행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연구원만의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연구를 추진할 것.
15. 최근 피산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서울도 지진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진안전센터가 폐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서울시 환경을 고려한 연구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진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
16. 합리적인 내부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다면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8. 주택공간위원회

106건

주택정책실 : 32건

1.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이 부당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강구 바람
2. 뉴타운 해제지역 대안사업 추진이 방치되고 있는데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낙후 등 문제점이 큼. 종합적 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3. 이태원참사 관련 무단 증축으로 사고를 키운 면이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징수하고 있는 형편임. 이행강제금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강제집행권, 형사고발 추진 필요
4. SH공사 이전 관련, 기관 간 서로 소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바람
5. 청년월세지원 기준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에게 주거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 마련 바람, 정부사업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을 받는데 서울시 사업은 10일만 신청을 받으므로 이 부분도 개선 필요
6. 매입임대주택 관련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 물량에 대한 공급에만 치중하여 SH공사 재정부담 가중, 지역쏠림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7.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인력이 부족한데 주거복지 도모를 위해 시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8. 매입 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많은 자치구는 추가매입을 자제하는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9. 태릉골프장 부지 관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 협의해주시기 바람.
10. 비엔날레 관련 후원 협찬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서울시민이 행사에 대해 잘 알수 있도록 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람
11.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관련 임대주택 공급 기준일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하여 세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12. 생활SOC사업 24곳 시범사업지가 사업중복으로 기 투입된 예산이 매몰되

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람

13. 생활SOC사업 지원기준은 1개소 별 20억원 내외인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중복 초과 지원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길 바람
14. 재개발·재건축 미해산 조합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람
15. 구역 경계가 여러개 행정구역이 인접해 있는 경우 지역간에 상반된 입장으로 인한 갈등, 진입로 문제로 일부지역 고립, 난개발 우려 등이 있는데 도로나 생활권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정비구역 적정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필요
16. 공공재개발 추진시 주민참여단 구성에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명확한 지침 필요
17.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개인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고려해주고, 사업이 부진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정리 필요
18.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에 비해 입주자인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크지 않음. 역세권은 청년주택이 아니어도 개발 여지가 크므로 지역분란을 야기시키는 역세권이 아닌 조금 외진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사업방향에 대한 재조정 필요
19. 도시건축전시관 수탁기관인 파트너스 시스템이 민간위탁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축물 전시 등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람
20. 가꿈주택 관련 중복지원이나,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
21. 항공고도제한이 있는 방화2구역과 같이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재개발의무 임대 주택 최소비율 15%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예외규정 등 대안 마련 해주시기 바람 (별도보고)

22.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의 경우 공동거주를 원하는 입주자끼리 청약가능한 것처럼 민간임대의 경우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방안을 구해주시기 바람
23.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경쟁률이 청년에 비해 매우 낮는데, 면적이 작고, 기준소득이 낮은 이유임. 소득기준을 높여서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24.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반강제적인 규정처럼 변질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5. 사회주택 감사위원회 점검결과 보고서에서 일부 취사선택하여 자료 제출하였는데 사회주택 평가에 대한 왜곡이며 이를 바탕으로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제라고 봄
26. 불법건축물 관련 법령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이행강제금만 내고 시정조치가 미흡한데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27.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관련 혼합단지 대표회의 구성은 입주자와 임대인 간 세대수에 비례해서 구성원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건의한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고민 필요
28. 청년월세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주택이 열악한 환경임. 집다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검토 필요
29. 장기전세 법제화 이전 승인받은 국민임대를 방침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하였는데 법적근거가 미흡해보임. '17년부터는 국민임대로 재전환하여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전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가 불안하지 않도록 살펴주길 바람.
29. 4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준공 30년 경과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 우려가 있음. 중산층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최우선 고려하는 공공주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 함.

30. 오세훈 시장의 세대별 주거 지원 공약은 청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특히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선거용 공약임.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검토해야 함.
31.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의 소멸을 위한 반지하 매입 사업은 자칫 수해 피해주민을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반지하 주민의 주거상향에 중심을 둔 반지하 정책을 모색해야 함.
32. 모아타운, 모아주택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혼선을 겪고 있음.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노후·불량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정비방식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더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미래공간기획관 : 18건

1.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2. 예산집행 현황, 마을건축가 운영내역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면밀한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람
3. 공공개발기획담당관 포괄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임에도 과도하게 이월되는 것은 문제이며, 시의회에 포괄비 집행내역에 대해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4.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의 관리부서와 실제 운영부서가 다르다는 문제점 존재하므로 향후 이에 대해 시정해주시기 바람.
5. 코로나19로 인한 수의계약 예외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실시해 왔으며, 근거 조문이 삭제된 후에도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음. 무분별한 수의계약은 지양할 것.
6. 지역 주민 의견수렴 없이 서울시 내부 판단만으로 서부선 차량기지를 여

의도공원에서 노량진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7. 공공건축 설계공모 표절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이문차량기지 스킵소음·분진 등으로 주변 거주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 이에 대해 검토할 것
9. 송현동 57번지 협의매수가 안될 시, 문체부의 이견회 기증관 건립사업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으니, 57번지 소유주와 원활히 협의하여 해결할 것
10. 업무 및 위촉자격이 비슷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구별없이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할 것
11. 사전협상제도 시행 시 협상기간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니, 협상횟수를 단축하는 등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협상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
12. 서울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이 다수의 서울시 용역에 참여하는 것은 사적이익 추구 수단이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동서울터미널 상가철거세입자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대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며 협상조정협의회 정식안건으로 세입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할 것.
14.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용산공원 일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LH공사와 송현동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서울의료원 부지를 맞교환할 예정이나 서울의료원 부지의 가격이 송현동 부지보다 높아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6. 남대문, 동대문,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대한 건축혁신방안 사업을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17. 선셋이라는 외래어보다는 '노을명소'와 같은 한글을 사용할 것

18. 장기간의 사전협상이 진행된 후 사업부서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또 다시 비슷한 고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절차를 거쳐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됨. 또한 사전협상이 지연된 사업지의 경우 착공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사전협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디지털정책관 : 13건

1.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을지라도 임명 절차가 필요함.
2.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조례상 여전히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음. 조치하기 바람
3. 자치구 노후 CCTV 개선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임. 노후 CCTV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보고해주기 바람
4. 복지시설 공공와이파이의 설치 편차가 자치구별로 심한데, 낙후된 지역부터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보고해주기 바람
5.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 운영매뉴얼이 서울시처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 운영매뉴얼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또한 자치구 CCTV 관제센터 근무자 수가 행안부 지침 대비 매우 적음. 관제인원 증원을 위해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검토 바람
6. 서울시에 대한 해킹시도는 날이갈수록 증가하는데, 서울사이버안전센터의 주말근무를 통신직 공무원들이 당직근무 형태로 수행하고있음. 보안전문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은 보안위협에 취약해보이므로, 보안전문인력확충 방안을 보고해주기 바람
7. 데이터센터 보안 관련 서버실 출입 시 지문, CCTV가 있으나 개별 서버는 시건장치가 없는 등 누구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보안을 강화

하기 바람

8. 스마트폴에 포함된 기능을 적극 활용(불법주차 및 흡연단속 등)하고, 적절한 위치 선정 등 사용자 중심으로 설치해주시기 바람.
9. 스마트폴이 특정지역(구로구)에만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배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람.
10.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및 대비에 힘써주시기 바람.
11.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노후시설 교체, 시스템·데이터 이원화에 신경써주시기 바람.
12. 스마트시티 특구 선정 시 심사위원 선정 등 선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13.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서울시의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했음.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서울시의 행정서비스가 멈출 수 있으므로 모든 시스템이 대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함.

□ 서울주택도시공사 : 33건

1. 최근 10년간 SH공사 승강기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4~5개 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져 왔음.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일부 업체에 낙찰이 집중된 사유 등을 파악하고, 다른 여러 중소기업들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서울시 감사결과 태양광시설 보급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부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기료 절감 자료도 SH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원이 실제 조사한 결과가 다름. 설치 후 5년도 되지 않아 316세대에서 철거되었는데,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시

설 설치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일부 센터의 시설보수 예산 초과 집행액이 과도하며 초과집행이 반복되고 있음. 2023년 예산 편성시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4. 매입임대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 비용을 모두 SH공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하자를 다수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원주택을 보면 발달장애인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이 많음. 편의시설 설치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유형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임대주택 보유세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유세 감면에 대해 적극 대응 및 검토를 요청할 것
7. 맞춤형 공동체 주택(자치구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경우 주택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며, 비합리적인 유형도 존재함.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공사에서도 입주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전반적인 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할 것
8. 매입임대주택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매입임대주택 사업방식 또는 운영방식 중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소규모 건설업체들과의 상생 방안도 강구할 것
9. 김현동 사장 취임 이후 반값아파트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홍보만 치중할 뿐 정작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매우 저조함. 지금이라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0.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임대주택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음. 주거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

터 철저히 살피 조치할 것.

11. 사옥 이전 추진에 노조가 반대하는 만큼 본사를 중심으로 절반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며, 한편 사옥 신축시 층수와 관련한 인근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여부도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
12. SH공사 사옥이전에 대해 서울시 및 중랑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13. 반지하 주택 매입시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서로 이견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인접지까지 매입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또한 매입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자치구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고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4. 일부 설계사무소가 매입임대주택을 101건이나 설계했고, 브로커처럼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특정 업체가 매입임대주택의 설계를 상당수 시행하게 된 계기와 SH공사 퇴직자와의 관련성 등은 없는지 점검을 실시할 것
15.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분 재공급 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주택 공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선공개 후 수선이 아니라 선수선 후 공개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제고시킬 것
16. 블라인드(어플)를 통해 성비위 사건발생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조치 및 교육을 통해 성비위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7.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920개 중 84개가 미개소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 매입 예산액은 150억원에 달하나 미이용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SH공사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역

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로서, 도시재생 앵커시설의 총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19. 기존 임대아파트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다양한 설치 반대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내 전기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20. 2020년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사 자체적으로 체납자 대응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특히 봉천동 탈북모자 사망사건에 이어 신정양천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계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임대료 등 체납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시스템 마련과 주거복지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1. 동자동 쪽방촌 같은 곳에서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납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납부 유형을 보증금과 월세로 단순화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
22. 역세권청년주택 당첨자 명단 유출과 같은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23. 가든파이버 툄동 신임 대표이사 선출시 SH공사 출신 직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관리단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24. 하자관련 콜센터 상담 인원이 11명으로 임대주택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보충을 검토할 것. 또한 하자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동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시범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단지 관리사무소는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는바, 각 임대주택 단지에 안내를 실시할 것.
25. 타 임대유형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만 최대 5%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인상폭을 1~2%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전반적인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장기전세 임대료 결정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

26.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관련하여, 임대단지는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재건축 추진 관련한 세부 기준 등 관련 법이 없는 상태임. 향후 입법건의를 하여 조속히 재정비 기준 설정 및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자원조달 및 거주민 이주방안 등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27.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LH공사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내 공사나 타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8.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처분 당시 공사 자체적으로 직위 해제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아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29. 행정안전부 적정 부채비율 관리기준 200% 대비, 5년 후 공사 부채비율은 221%로 예상되는데, 향후 반지하 주택까지 매입할 계획이어서 서울시로부터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무건전성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0. 주거복지종합센터 관련하여, 16개는 민간용역으로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는 모든 센터를 직영할 예정인데, 민간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31. 현재 반값아파트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데, 공공의 예산이 투입된 주택에 대한 환매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면 로또청약이 될 수 밖에 없어, SH공사가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사인 간의 거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32. SH공사 정관의 사업범위에도 포함되어 있는 토지비축은 향후 SH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하

략기에 적극적인 토지비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33. 과거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 적 있는데, 국민임대 자격 변동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는 장기전세를 다시 국민임대로 전환하고 있음. 임대주택 유형 전환 및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 전환임. 서울시와 함께 이 사안을 재검토하여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

□ 서울디지털재단 : 10건

1. 인권경영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맞추지 않은 부분 조정 필요
2. 메타버스 크리스마스 시민 참여 이벤트 및 메타팻 과업의 적기 수행 필요
3.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직원들이 몇 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 조직문화 및 처우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함
4. 요청드린 자료가 지연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는데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충실히 제출하기 바람
5. 공무국외여행 신청은 출국 30일 이전에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건이 있어 시정이 필요함
6. 해외공무출장 시 로밍 명목으로 통신비를 사용하였는데 추후 시정하기 바람
7. 이사장 취임 이후 11명 퇴사하고, 최근 수개월내에 3명이 퇴사하였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을 검토해보기 바람
8.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는 1명으로 채용인원을 늘려야 함
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
10. 수의계약 체결 건 중에 그 사유와 과정이 불명확한 건들이 다수 보이며, 노트북 관리에 미비점 등이 발견되는 등 물품·계약 관리에 개선이 필요함.

□ 도시계획국 : 20건

1. 도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청장 위촉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한 위촉이고, 도시계획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맞지 않음.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인 경우 원상회복하고 법률적 미비는 완비가 필요함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의원은 주민의견 청취, 불이익 방지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다'로 판시되어 있음, 지역구 안전에 대하여 시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제척 및 회피토록 하는 관행적 행위는 시정하기 바람
3.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을 위촉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심의까지 하는 것임. 구청장 위촉은 법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임
4.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의회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견청취 말고는 권한이 없음. 시의회의 권한 재정립에 대하여 검토 바람
5.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위원 구성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정위원의 용역 다수 중복참여 및 위원회 중복참여 문제를 시정해주시기 바람
6. 신속통합기획 공모 미선정 시 명확한 탈락사유를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 있음
7. 지난 3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시 제시한 비온드조닝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
8. 용역보고서 공개율이 낮음. 지금까지 비공개 용역보고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로 전환할 것
9.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대비 실현 용적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2040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상업지역 배분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 바람

10.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비 용역 추진 바람
11. 현재까지 유지된 서울시 용도지역 지정 기준이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용도지역 지정으로 획일적 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필요하다면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 용도지역 선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12.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이 대체로 유사한 목표 및 세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자치구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여 지역생활권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1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된 곳의 지정을 해제할 때는,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14.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수립 시, 추진 방향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체계 개선 필요
15. 남산의 경관을 지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지구 재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
16.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계획 시, 대체부지 확보 후 세부개발계획 수립할 것을 명확화하는 한편, 대체부지로 논의되는 '신구로 우수지'에 대해 우수지 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17. '도시자연공원구역' 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보상 이외의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또한 구역지정 및 조정 기준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
18.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비가 보상 규모에 비해 적으므로 지속적인 보상에 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여가국과 협조를 이어갈 것

19. 현재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 중 현황과 맞지 않거나, 자연경관지구 지정 필요성이 없는 곳은 해제 검토 필요
20. 회기 때마다 준공된 용역결과를 보고 바람. 작년과 올해 준공된 학술용역, 기술용역 내용을 파일과 책자로 보고할 것

□ 균형발전본부 : 8건

1. 균형발전총괄부서로서 비전, 추진전략, 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 제시 필요
2. 개포구룡마을 사업 해결방안 수립 관련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진척이 없음. 현재 조치만으로 해결이 안 되므로 특단의 해결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3. 현재 균형발전본부의 정체성과 목표가 모호하다고 판단되므로, 본부의 균형발전 본부의 정체성을 구체화한 목표 수립 필요
4.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여분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으니, 공공기여분을 균형발전계획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강화방안 마련할 것
5.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시 전체의 실질적 재정지원 및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사업의 총괄권한이 필요하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획조종실로부터 편성권을 가져와야 함
6.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는 등 방만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해 왔으므로,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진행해주시기 바람
7. 문화재청은 곤돌라사업을 제외하고 유네스코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니, 유네스코 지정 자체가 남산 곤돌라사업 추진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남산 곤돌라사업 추진에 국가기관과의 검토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8.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관련 2017년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 이후, 2019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추진계획이 무효화 되었음. 2022년 현재 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추진계획의 골자 및 진행과정이 6년

전과 동일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민과 상인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람

□ 디자인정책관 : 11건

1.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공미술작품을 검색했는데 몇몇 작품은 검색이 안 되고, 스마트 서울 앱에도 사진자료가 없음.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서 바로 조치 바람
2. 향후 「미디어 파사드 사업」 추진 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 명소화 등의 사업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은 디자인 분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안전, 방법, 심리,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함께 고려하여 실효성 및 확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기 바람
4. 지역단위 공공미술 사업 추진 시 장소 선정과 공모 절차 기준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5.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수십억의 「공공미술 사업」 예산이, 비단 몇몇의 소수 업체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공공미술 생태계 구축과 사업자 육성을 위해서도 사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4개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이 필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7. 향후에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특정 장소에 중복되어 설치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치구별로 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람
8. 스마트보안등 사업은 1인가구추진단처럼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하기 바람
9. 12월 동절기에 LED 간판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은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 고려 바람

10. 소외·낙후지역 경관 개선사업추진 시,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역에 이 사업의 혜택을 고르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11.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선정에서부터 시제품을 만들고 상용화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7건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과거 병원 근무 기간을 현재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2. 약자의 개념이 모호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약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약자의 개념을 명확히 기준을 확실히 할 것
3. 시구비 매칭 복지사업 구비보조율이 줄어들고 있음. 약자 지원 사업이 자치구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을 늘릴 것
4. 약자동행 관련 사업과 기존 사회복지 사업과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사업 중복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5.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인력보강 및 타실·국 협의를 위한 조직 위상 강화를 추진할 것
6. 약자 동행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 시스템 구축, 특히 예산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
7.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적은 예산 그리고 계획 위주의 사업만 있음. 인원구성 및 사업내용 개선을 통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실질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바람

□ 미래청년기획단 : 9건

1. 「청년 수당 사업」에서 월세나 공과금 등 청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현금 사용 증빙자료 제출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정책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현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2. '21년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서, 객관적 언론보도를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던 청년단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실제로는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단체였던 것으로 나타남. 향후 청년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단체 선정 시, 객관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내용이 계획서 내용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주시기 바람
3. 청년수당 사업에서 지급중단 사유 중,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로 인한 건수가 많은데, 수당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책임감과 동력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해당 사유로 지급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4. 미래청년기획단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보습득이 빠르고 자격 조건이 되는 일부 청년만 수혜를 입지 않고 모든 청년에 사업참여의 기회가 돌아감, 청년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할 것
5. 서울청년센터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위탁 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6.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청년기획단이 청년 주거, 노동, 일자리 등 고민과 함께 개입을 해야 함. 청년기획단의 역할 및 정립이 중요함. 총괄부서로써 청년정책의 전략이 필요함
7. 무중력지대를 살펴 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시스템을 도입하고, 카카오플러스 채널 가입이 필수인 곳이 있는데, 다른 채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 바람
8.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 청년들은 전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거취약 청년에 맞게 추진해주

기 바람

9.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주기 바람

서울디자인재단 : 10건

1. DDP 마켓의 공실률이 높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하여 전체적으로 대관 가동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인근 상권과의 상생 방안에도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
2. DDP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해 주기를 바람
3. 서울디자인 재단의 법률자문단 구성이 특정 법률 자문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정바라며, 또한 동 법률 자문기관 소속 변호사가 인사위원회에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기 바람
4. '서울 새활용플라자센터'의 예산규모와 건물운영 인력 대비 방문객 수가저조하므로, 방문객 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DDP 건물 관리에만 국한되어 있으니, 서울시 정책변화에 맞춘 재단 사업 다양화가 필요
6. 기존에 추진한 행사 대부분이 방문 만족도 조사가 빠져 있음. 자체 추진 행사, 위탁 추진 행사와 관계없이 향후 만족도 조사를 모두 시행할 것
7. DDP 내 서울라이트 관련 컨테이너, 전선 설치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8. DDP가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방안과 DDP인근 동대문 상인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9. 서울라이트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시, '상권 활성화 관련지표'(사업기간 내 유동

인구 수, 카드 매출액 등)을 추가하여 실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0. 서울새활용플라자 방문객수 및 교육참여 인원 저조 등 운영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함. 방문객수 증대 및 입주기업 관리 등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10. 교통위원회

201건

도시교통실: 72건

1. PM 업체가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보조금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기 바람
2. 피감기관은 의원들의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하길 바람(지적)
3. 도시교통실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위촉 비율이 낮아 시정을 요구함
4. 스마트쉘터 등 안내판 오류 정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5. 사모펀드의 시내버스회사 매입 후 고배당지급,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상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운영에 대한 규제 및 대응방안 마련
6.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잉여예비차의 투입
7.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배차시간 단축안 마련
8. 심야버스 노선연장 및 노선신설을 적극 추진
9. 간선도로와 병행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위험성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10.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왕십리 방향 우회차선 신설하여 상습교통 정체를 완화할 것
11. 서울시내 일부구간 제한속도 50km를 다시 70km로 변경한 것은 즉흥적인 계획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됨, 따라서 교통계획 수립의 면밀한 검토 요구

12. 어린이보호구역내 간선도로(골목이 아님) 30km 속도제한을 야간에는 완화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
13. 위례신사선 경전철 노선이 올림픽웨미리아파트 1/2단지 사이로 확정되면서 소음/진동 우려로 주민 성명서를 제출했으나 안전성 문제(노후아파트, 지반 연약), 재산권 침해(사유지 침범) 등 해당아파트 주민 배제 등 주민 의견 청취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음
14. 광화문 월대교통정체에 대한 도시교통실의 대책
15. 교통평가지 시민의견 반영방안을 강구
16. 코로나로 인한 공항버스 지원방안 마련
17. 시내버스 평가에 있어 성과급배분 뿐만 아니라 패널티를 주는 방안
18. 신림선 차량 누수 관련
 - 신림선 열차내 누수가 발생(시민제보) 했음에도 이병윤 위원에게 제출한 신림선 누수현황 자료에 차량내 누수 0건으로 제출함. 허위보고 재확인할 것
 -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운영주체 등이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서울시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며, 하자보수 비용도 제작업체의 부담이 필요
19. 신안산선 정거장 및 출입구 변경 관련
 - 신안산선이 민간투자사업(2020년)으로 추진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2013)와 달리 정거장 및 출입구가 변경됐음
 - 국토부는 기 실시설계가 완료된 정거장은 '정거장의 위치를 준용하여 전부 설치할 것'을 명시(2018.1.)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수정의견을 일주일 만에 공표하는 등 서울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설계되었음
 - 비용절감으로 민간업체는 이득이나 시민 불편은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고 서울 시민에게 불이익한 사업계획 변경은 애초 사업 취지를 몰각한 사업으로 평가
 - 출입구 위치수정 및 증설을 위해 국비 및 시비의 추가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는 국토부를 설득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반영에 노력하길

바라며, 넥스트레인도 이에 협조하기 바람

20. 개인형이동장치(PM) 면허 인증 중단 관련

- PM 이용은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나, 대부분 업체에서 운전면허 인증절차가 전무함
- 따라서 만16세 미만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임
- 행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업체들은 면허인증 절차가 중단해 가입자를 늘리는데만 혈안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시민의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음
- 업체가 면허 인증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유도가 필요하며, 필요 시 견인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 바람
- 특정앱은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필요

21. 공유 스쿠터 사업 관련

- PM업체가 공유킥보드 뿐만 아니라, '스쿠터' 대여사업까지 확대함
- 공유킥보드 같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보행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해 보고 바람

22. 자율주행 시범사업 관련

- 청계천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데, 청계천은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자율주행이 성공하기 어려운 입지임
- 노면정비도 중요하지만, 오토바이, 자전거,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보행자 등의 간섭으로 자율주행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
- 원활한 자율주행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중구·종로구 단속 실적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저조했음. 위반 행위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단속이 약해졌다고 해석도 가능. 악화된 상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함. 중구

· 종로구에 협조 요청 필요

○ 청계천 자율주행이 안착될 때까지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 필요

23. 티머니 '티머니GO' 플랫폼 관련

○ 티머니는 '티머니GO'를 통해 따릉이, 썩썩, 고속·시외버스 예매, 택시호출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티머니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데이터 정도밖에 공개되지 않아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지 않은지 서울시가 점검해야 함

○ 티머니 역시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사업자이므로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경계하고, 티머니 데이터 개방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미래첨단교통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바람

24. 시내버스 사모펀드 관련

○ 차파트너스 사모펀드 버스회사 인수현황은 982대, 2,212억원 재정지원금을 받음

○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과다 배당, 유상감자 등이 실행되어 재무구조가 부실화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버스회사의 서비스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차파트너스가 버스산업에 뛰어난 긍정적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 효율화 노력도 미비

○ 또한 준공영제 구조상 비용 절감의 자구노력은 향후 표준운송원가의 감액으로 이어지는데 차파트너스가 매년 이를 성실히 이행할지도 의문

○ 차파트너스도 주장하는 취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버스운송조합과 버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함께하기 바람

25. 택시 정책 관련

○ 택시요금 인상 시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요금 인상은 반드시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

○ 국토부와 서울시간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의문, 각각의 대책이 중복되어, 되려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 결국 요금 인상 권한을 행사한 서울시에

책임으로 귀결될 것

- 특히 서울시의 대책에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공급증대 효과가 없어 심야 승차난은 계속되어 시민 불만 심화
- 공급확대를 위해 대형택시, 고급택시 면허 전환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단계적 전환이 바람직하나, 국토부가 서울시 의견과 다르게 전면 완화를 천명한 만큼 불필요한 다툼보다는 택시 공급 증대를 위해 면허 전환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공급과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형택시, 고급택시 총량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26. 심야버스 확충 관련

- 심야택시 승차난의 대책으로 추진된 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가 더더 심야 승차난 개선에 효과를 보이지 못함
- 버스회사 입장은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결정시 즉각 운행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는 심야승차난에도 심야버스 확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뒤늦었지만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심야버스 운전기사를 신속히 확보해 심야버스 노선을 속히 확대하기 바람

27. 8호선 연장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8호선 남양주 별내신도시 연장 개통 시 배차간격 단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8호선은 천호, 잠실 등 환승 수요가 많아 이미 혼잡도 130%를 넘겼음.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로 연장되는 8호선은 남양주와 구리에서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더해지면 혼잡도는 1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경기도가 주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연장구간만 분석됐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및 기존 본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음

- 또한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상 오차도 상당함. 당시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시 인구를 약 64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2022년 9월 남양주시 실인구는 약 74만명으로 10만명의 오차가 있음. 기존 8호선 통행 인구 조사에서도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에 10% 내외의 오차가 있음
- 8년 전 수요예측자료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개통 전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호선, 7호선 등 경기로 연장되어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야기된 선례가 있는데 8호선도 마찬가지로 혼잡도 문제가 예견됨. 종점이었던 암사역 인근 주민들은 열차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임
- 서울시는 암사역사공원역에서 시계발 열차 운영이나 추가 증차로 배차간격을 짧게 해 혼잡도를 완화해야 하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장구간 개통 전 적극적으로 혼잡도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28. 5호선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서울시가 공개한 '2021년 도시철도 수송실적'에 따르면 가장 혼잡한 지하철 구간 중 2곳이 강동구에 해당 됨
- 해당 구간은 5호선 길동▶강동(132%), 8호선 강동구청▶목촌토성(134%)으로, 특히 길동▶강동 구간의 2022년 상반기 혼잡도는 141%로 예년보다 증가했음
- 서울시는 전동차 1량의 혼잡도 100% 기준을 160명이 탑승한 상태로 상정하는데, 이는 54좌석이 꽉 차고 통로와 출입문 쪽에 서 있는 승객이 모두 106명일 때임. 혼잡도가 150%로 증가하면 승객은 240명이 되고, 몸과 얼굴이 밀착돼 부딪힐 정도가 됨
- 특히 하남에서 이미 승객들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강동 주민들은 “아침마다 압사 직전이다”,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데 도시교통실장은 “5호선 혼잡도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은 서울시가 그동안 무심했던 ‘방증’임

- 예산을 문제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태원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5호선 증차와 배차간격 조정에 매진해야 할 것임

29. 심야버스 확대 시 예비차 활용 관련

- 심야버스 확대 시 기존 노선 혼잡도 악화 등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 노선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 예비차 활용 방안 검토 요구
- 심야버스 운영을 위해 정상운행 버스를 변경 운행, 예비차를 변경운행 했을 때 발생하는 운송비용에 대해 비교 후 보고 바람

30. 도시교통실 직원 외부강의 관련

- 임기제공무원은 외부강의가 아닌 내부 집행부에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강의 횟수 제한 등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할 것
- 서울시 '대표'로 서울시 '노하우'를 알리는 목적으로 출장처리를 했다면, 강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강의를 받았다면 서울시에 귀속 되는 것이 맞지 않나?

31. 자전거등록제 소극행정 관련

- 자전거등록제 강동·양천구 2곳만 시행 중으로, 방치자전거 대책 중 하나인 자전거등록제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자전거등록제와 관련 자치구에 일괄 모바일 등록방식 방안을 강구할 것
- 강동구 암사역 방치자전거 문제 해결 바람
- 강동구 암사동 고덕로1길 횡단보도, 암사동 아리수로 횡단보도 개선 바람

32. UAM 실증사업 안전문제 관련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한강 일대 운항 사실상 힘들지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강행해 예산 낭비
- 연구용역 중간보고자료에 따르면 UAM 도입 시 기존 계획한 한강 관통 대신 도시 주거지 상부 통과해야 해 과거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충돌사고' 우려
- 설익은 UAM 도입 대신 도시철도 차량 증편으로 혼잡도 낮추는 게 시급

33. 공유킵보드 주차장 관련

- 공유킵보드 주차장 서울시 지원 특혜 소지 우려
 - 공유킵보드 주차장 설치 비용을 한국PM협회·킵보드업체와 공동부담 방안도 검토해보길 바람
34. 마을버스 지원 사업의 제한 근거는 부시장의 방침으로서 조례에 근거할 것
 35. 신안산선 대심도 공법으로 아낀 예산을 반영하여, 만리재역을 신설할 것
 36. 대흥역 3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신설 건의
 37. 전기버스 입찰가격이 동일한 것에 대한 답합에 대한 조사요청
 38.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및 이행여부
 39. 지하철 공사의 과도한 시방서 계획에 대한 검토
 40.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구간 개선 필요
 -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예외 규정을 담아 4개소 이내 범위를 해제한 점에 대해 서울시의 결단 필요 요구
 41. 출퇴근 및·심야버스 혼잡도 심각, 출퇴근 단축버스 줄이는 것 지적, 오히려 늘려야 함
 42. 장애인 콜택시 플랫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장애인 이용객들의 편의개선 필요 지적
 43. 따릉이 광고 유찰 비용 문제로 보여짐, 광고 업계 자문을 받아서 적정가격 책정해야 함 지적
 44. 재생자전거 가격, 신제품보다 비싼 문제, 서울시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함 지적
 45. 자전거도로 수요에 따라 불필요한 곳은 삭선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 지적
 46. (주)메트로9호선 위험준비금 관련
 -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대상 '위험준비금' 용도의 사용 지적
 - 향후 위험준비금의 사용과 적립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47. 개인형이동장치(PM) 면허 인증 관련, 법령상 PM 16세 미만 사용 불가인데 초등학생이 사용한 사례 언론보도 등에 보도되고 있음. 면허 등록 시스템의 한계 아닌가? 면허등록시스템 개선 필요함

48.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 착용 관련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PM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되었으나, 준수율 저조함
- 전국 평균 19.2% 보다 6.6% 낮아
- 경찰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 공유PM 사고 증가에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할 것

49. 모바일앱·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 도시교통실 소관 웹사이트·모바일앱 품질인증 추진
- 최근 5년간 실태조사 D등급 17회, C등급 10회, 개선율 저조
- 업데이트·적시성·이용자 불편사항 답변 빠른 개선 바람
- 예산 확보 통해 기준에 미달한 앱 보완할 것

50. 직원 외부강의 관련

- 외부강의 180건 중 42건 출장 미처리, 연가 미사용 29건, 연가 사용여부 '조회불가' 5건임
- 출장비 이중수령 건 증빙 및 조치 바람

51. 공항 리무진버스 관련, 공항리무진버스 이용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반 리무진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내 시정조치할 것. 연내 일반리무진 노선 운영에 나설 민간사업자가 없을 시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52. 심야버스 확대 관련

- 심야버스 수요대응 운영을 위해 심야버스 노선이라도 차량 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방법 강구
- 심야버스 장대노선 14개 중 9개 해당 되는데 노선단축을 통해 노동강도 줄여야
- 앞으로 서울시가 심야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인데 정책적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53. GTX-C 노선 공익감사 관련

- 공익감사결과 GTX-C 도봉구간이 돌연 지상화가 된 데에는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음
- 행정력, 재정적 낭비와 개통에 큰 차질을 빚은 만큼 서울시가 각종 법적 책임 물어야 함
-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에 맞춰 모든 화력을 다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우선사업시행사에 서울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킬 것

54.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관련

- 1~8호선 종합관제센터 사업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 종합관제센터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1~9호선 통합 추진 필요성 지적

55.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 관련

- 당연직이사의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참석률 저조
- 공사채 발행,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2021~2025)은 서면결의 사유도 없이 서면 이사회 처리
- 대면회의에 참석해 공사 운용과정을 잘 살펴보고 철저히 감독해주길 바람

56. 우이신설 연장선 예산 관련

- 우이신설 연장선 관련 실시설계비 예산 왜 없는지? 市の 의지표명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상황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과 공유바람

57. PM 주차장 표식에 대한 지적(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반영 안 함.

개인용이동장치(PM)에 대해 시민 안전의식과 교통 문화를 제고할 방안 강구

58. 8호선 연장(별내선) 확장된 부분은 경기도에서 문제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게 책임 떠밀기 아닌가? 문제가 예상된다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 마련할 것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운용계획과 추후 방안 수립

59. 정류소 환경보다 버스가 빨리 오게 하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하지 않나?
정류소는 편안한데 버스가 안 온다. 전시행정 아닌가. 스마트쉼터의 안락함보다 버스 배차 간격 축소가 중요. 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에 대해 업체와 협의 아닌 '통보' 공문 발송. 출·퇴근시간 집중배차를 통해 혼잡도 완화 필요
60. 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돌려막기식 답변 태도 지적
61. 주정차위반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공공질서 저해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것
62. 교통공사 적자 심각. 운영을 늘릴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경전철 등 재정 투입 사업의 사업타당성과 수요조사의 오류, 책임소재와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
63. 교통불편 신고 앱에 신고했더니 답변이 엉뚱함. 피드백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신고채널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챗봇을 비롯 민원 콘트롤타워 필요함. 난립한 불편신고의 일원화 필요(신고 후 엉뚱한 답변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64. 장애인 시위 등 안전과 관련된 공권력 집행을 엄정히 할 것
65. 심야시간 지하철 운행 연장으로 인한 정비시간 축소 및 근무자의 피로도 상승에 따른 안전성 문제, 재정 적자 등에 대한 방안
66. 무인운행 신림역, 셋강역 3개역 무정차 통과에 따른 현장조사 요구
67.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및 입간판 단속 강화
68. 교통시설물의 관리 점검 철저 (의자열선 등)
69. 도심항공교통(UAM) 한강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 운행 시 안전사고 문제가 있는데 실제 가능한 것인지 확인 요구
70. 신도림역 등 혼잡도 심한역 개선
71. 교통공사 의견광고 폐지 관련, 의견광고 비율 0.08%에 불과함에도 폐지하려는 이유와 의견광고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재검토 필요
72. 대중교통이 주민들과 유리되어 있음. 주민이 원하는 노선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노선 신설하기 어렵고 지역 격차도 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17건

1. 동북선 공사와 관련, 언론보도 지적사안인 상하수관 파열, 지반흔들림으로 인한 주변 건물의 민원, 진동 등에 대한 대응방안 및 공사현장관리 철저
2. 동북선 공사와 관련, 지반흔들림으로 인한 주변 건물의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3. 동북선 제103정거장 출입구를 유동인구가 많은 경동시장, 약령시장 방향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남측방향으로 설치하여 주민 민원을 초래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지적
4. 도시철도 사업의 대상 지역의 보상과 관련하여 사전협상 및 협의 전문성 강화
5. 8호선 연장(별내선)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8호선은 천호, 잠실 등 환승 수요가 많아 이미 혼잡도 130%를 넘겼음.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로 연장되는 8호선은 남양주와 구리에서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더해지면 혼잡도는 1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경기도가 주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연장구간만 분석됐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및 기존 본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상 오차도 상당함. 당시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시 인구를 약 64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2022년 9월 남양주시 실인구는 약 74만명으로 10만명의 오차가 있음. 기존 8호선 통행 인구 조사에서도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에 10% 내외의 오차가 있음
 - 8년 전 수요예측자료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개통 전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호선, 7호선 등 경기도 연장되어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야기된 선례가 있는데 8호선도 마찬가지로 혼잡도 문제가 예견됨. 종점이었던 암사역 인근 주민들은 열차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임

- 개통 전 암사역사공원역 출발 운행 및 배차간격 조정에 대한 건설 주체인 도
기본에서 기술적 검토 후 보고 바람

6. 8호선 연장(별내선) 관련

- 별내선 차량기지 증설 추가비용 분담 주체, 국비지원의 형평성, 공사주체 등
공사시행에 대해 경기도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 선사고등학교 피해에 대한 해결책 강구
- 별내선 공사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구 시의원에게 즉시 보고 바람

7. 9호선 4단계 착공 관련

- 9호선 4단계 동절기 굴착행위 중지 원칙인데 연내 착공 가능한지?
- 착공이 어려운 공정구간에 대해 보고 바라며 차질없이 진행 바람.
-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시행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해줄 것

8. 9호선 2·3단계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관련

- 70억원 들인 9호선 2·3단계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10곳 이용률이 지난해부
터 1%에 불과
- 유지보수 및 활성화 시도보다 철거 하는게 현실적, 원점에서 재검토 후 보고 바람
- 향후 시민 니즈에 부합한 정책과 면밀한 검토를 선행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9. 동북선 민간투자자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특히 후순위채권이 고금리로 책정되 어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

10. 동북선 사업의 의사결정에 특정 사모펀드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11. 동북선 상계역 환기구 인근 주민 피해 적절한 보상과 공사 기간 단축이 필요함

- 동북선 상계역 환기구 공사로 인해 인근 도로 매우 협소해짐, 상계역 출구
상계동에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 환기구 인근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12. 진접선 관련

- 4호선 진접선 연결로 창동주민들이 출퇴근시 혼잡으로 매우 불편을 느끼므로 평면환승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진접차량기지 지난해 업무보고와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 시 사업비가 403억원이 증액됐는데 사유 제출할 것
 - 진접선 연장 공사 중 2016년 6월 가스 폭발 추정 붕괴 사고로 사상자 14명이 있었고, 2020년 11월 지지대 붕괴로 인한 1명 매몰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차량기지 완공 시까지 사고 예방 당부
13. 동북선 사유지 보상 관련, 동북선 사유지 보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지연이 없도록 면밀한 추진 당부
 14. 공사장 재해 관리 관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 요청
 15.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22년 10월 현재 실시 협약 추진현황표를 보면 '20.7 도시교통실 ➡ 도기본으로 업무이관 '22.8 도기본 ➡ 도시교통실로 업무이관 됨. 단일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업무 분장을 통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6. 도심지 발파 관련, 발파방식을 전자뇌관으로 사용하도록 검토 바람
 17. 별내선 상하수도 파열에 대한 회사 및 관계자 처벌이 경미함

서울교통공사: 74건

1. 업무상 비밀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2. 서울메트로환경 경영환경 무재해 목표는 0건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달성할 수 없다면 목표명을 바꿀 것
3. 답변 시, 정확한 수치를 숙지하여 답변해주길 바람
4. 감사장에서의 피감기관의 태도(지적)
5. 서울교통공사 사장 발언 유의 ('아니' 등 경어 미사용 발언 지적)
6. 공사의 적자 증가에 대한 대비책

7.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지연증명서 및 미승차확인시 환불 기한(7일)의 연장
8. 1호선 (제기역, 청량리역 등) 노후 역사의 환경 및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
9. 향후 동북선과 환승역이 예정되어 있는 제기역의 경우,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1호선 제기역사도 리모델링할 것
10. 공사 내 청렴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감사 강화
11. 지하철보안관과 경찰대의 합동순찰 강화 필요함(범죄발생다수시간대)
12. 지하철 모든 차량에 CCTV 설치필요
13. 공기정화장치 입찰시 독점체제 지양할 것
14. 심장충격기현황 전수조사 할 것
15. 현장의 자료와 본사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
16. 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 등 자회사의 적정인원 및 인력운용에 대한 검토용역 실시
17. 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의 복리후생의 확대
18. 유실물센터 직원의 충원
19.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매도가능증권등 자산운용에 대한 내부점검
20. 공사 부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21. 공사 차입금 상황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22. 공사 자회사와 모회사의 복리 및 처우 개선
23. 사회적 기업 외에 유실물 무상기증기관의 다변화 검토
24.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급여가 이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치
25. 일산선 위수탁 검수 채권 소송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 강구
26. 일산선 위수탁 비용에 따른 변호사 소송비용 및 향후 대책
27.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 서울시가 지금껏 미세먼지 저감에 투입한 예산은 1,336억원, 터널 양방향

집진기, 대용량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추진됨.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법적기준 초과한 역사는 2020년 8곳, 2021년도 7곳 인데 반해 2022년도 29곳으로 크게 증가함
- 미세먼지 법정기준은 365일 중 단 1일, 매시간 평균값으로 측정값을 평가 하기에 평균의 함정이 존재함
- 이용량이 급증하는 출퇴근 첨두시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고 터널 양 방향 전기집진기 및 대용량공기청정기가 가동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실제 출근시간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 호선 전체 역사의 1/3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지 못 해 이용객들은 외부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음.
- 즉, 터널 양방향집진기 성능평가 용역에서는 16%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인다고 하지만 평균값에 불과한 결과이며, 실제 첨두시간에는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개소당 5억원을 들여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더 적합한 효과적인 기술은 없는지 경제성 평가가 필요함.

28. 전동차 냉·난방 온도 관련

- 탄소중립 어젠더 대응을 위해 지하철 냉난방에 따른 소비전력 저감 관리가 필요함
- 열차운행 시 차량 내 온도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그에 연동해 냉난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29. 8호선 연장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8호선 남양주 별내신도시 연장 개통 시 배차간격 단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8호선은 천호, 잠실 등 환승 수요가 많아 이미 혼잡도 130%를 넘겼음.다수

의 인구가 유입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로 연장되는 8호선은 남양주와 구리에서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더해지면 혼잡도는 1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경기도가 주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연장구간만 분석됐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및 기존 본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상 오차도 상당함. 당시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시 인구를 약 64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2022년 9월 남양주시 실인구는 약 74만명으로 10만명의 오차가 있음. 기존 8호선 통행 인구 조사에서도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에 10% 내외의 오차가 있음
- 8년 전 수요예측자료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개통 전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호선, 7호선 등 경기로 연장되어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야기된 선례가 있는데 8호선도 마찬가지로 혼잡도 문제가 예견됨. 중점이었던 암사역 인근 주민들은 열차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임
- 서울시는 암사역사공원역에서 시계발 열차 운영이나 추가 증차로 배차간격을 짧게 해 혼잡도를 완화해야 하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장구간 개통 전 적극적으로 혼잡도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30. 5호선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서울시가 공개한 ‘2021년 도시철도 수송실적’에 따르면 가장 혼잡한 지하철 구간 중 2곳이 강동구에 해당됐음
- 해당 구간은 5호선 길동▶강동(132%), 8호선 강동구청 ▶목촌토성(134%)으로, 특히 길동▶강동 구간의 2022년 상반기 혼잡도는 141%로 예년보다 증가했음
- 서울시는 전동차 1량의 혼잡도 100% 기준을 160명이 탑승한 상태로 상정하는데, 이는 54좌석이 꽉 차고 통로와 출입문 쪽에 서 있는 승객이 모두 106명일 때임. 혼잡도가 150%로 증가하면 승객은 240명이 되고, 몸과

얼굴이 밀착돼 부딪힐 정도가 됨

- 이태원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5호선 증차와 배차간격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1. 지하철 시위 관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는 교통방해 및 철도시설파손시 형사처벌을 받는 한편 불법행위로 규정함
- 4호선의 경우 130분 이상 지연된 바 있고, 시민을 불모로 각종 사회적 손실 야기함
- 공사는 시민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 바람

32. 지하철 승강설비 고장 관련

- 최근 5년간 1~8호선 승강편의시설 고장 2,534건 발생, 에스컬레이터 1,795건(71%) 차지함
- 7일 이상 고장 방치된 곳 153건, 신당역·고속터미널역·동묘앞역 특정 역에 장기간 고장 지속 발생
- 5호선 E/L 강화유리 파손 등 감사 진행 필요, 승강설비 부품 품질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필요함

33. 차량기지 보안 관련

- 지난 9월 22일, 26일 두 차례 군자차량기지, 창동차량기지 '그래피티' 범행 잇따라 발생함
- 그래피티 행위 발생 시각도 몰라 방호 체계 미약
- 차량기지 보안은 시민 안전과 직결됨으로 방지시스템 강화 바람

34.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관련

- 적자 규모 1조 원을 돌파한 공사가 법적 근거 없는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 연간 약 70억원 지원 중임
- 특히 임원에게 개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원할 때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요금

까지 지원해주다 보니 최신폰을 쓰며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상황임.

- 임원에게 퍼주시기식 지원이 아니라, 상한제 정해서 내부지출 구조조정부터 필요하지 않나?
- 휴대폰 요금지원 재정비할 필요성 있음

35. 직원 겸직관련

- 겸직위반 17건 중 사전신고, 사후신고, 무신고자가 각각 몇 명인지 확인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 바람
- 정보통신2사업소 소속 황**과장은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강의로 2018년~2020년 3년간 약 2억원의 수입을 거뒀는데 21년 8월에야 적발됐고, 공사에서 강등 처리만 했는데 미온적인 징계는 아닌지?
- 월 평균 보수액이 100만 원 이상 겸직자도 여럿 발견됐는데, 겸직 시 수입 상한액 제한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 바람

36. 공사통합 후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안 강구

37.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의 확충

38.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내구연한(20년)도래에 따른 유지보수계획 수립

39. 레일, 고가선 등의 금속 및 비산먼지 등의 관리 방안 및 신기술 도입 계획수립

40. 다중 인원 관리에 대한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시점에서,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등 그동안 추진 사업의 가속을 붙여야 함

41. 지하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사업 효과가 없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 전면 폐지 등의 결단이 필요함

42. 지하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20년 이상 노후 기계의 선제적 수리를 통해 추가 파손을 막고 예산 절감도 해야함

43. 지하철 캐노피 미설치 지역의 논슬립 설치의 재확인 및 전 역사 확대 설치 필요성 지적

44. 지하철 객실 내, 역사 내 CCTV의 비중 및 사각지대 등 미비점 지적

45.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응급처치 이수율 10% 미만 매우 저조함, 혼잡시간대 즉

시 처치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수율을 높여야 함

46. 영등포역 탈선 사고 관련

- 6일 20시 50분대 영등포역 부근 하행 무궁화호 열차 탈선으로 30분 이상 양방향 운행 중단됐고, 이후 하행선 지연운행이 있었음
- 탈선 사고 후 연합뉴스는 22시 17분, KBS는 22시 19분 속보가 나왔음. 연합뉴스는 ‘재난보도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이며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임. 사고 발생 즉시 언론사에 속보 보도가 나가야 함
- ‘서울시 안전안내문자’는 21시 42분에야 탈선 사실을 알렸고, ‘또타지하철앱’은 21시 23분에 탈선 사실을 알리는 첫 문자를 보냈는데 늦장 대처가 아닌지?
- 게다가 안내된 사고발생시각도 각각 달랐음. ‘서울시 안전안내문자’에서 20시 53분 경으로, ‘또타지하철앱’에서는 20시 58분 경, 20시 52분 경으로 안내함
- 탈선이 4차례나 일어난 것도 아닌데 발생 시각이 4가지나 되는 것은 말이 안 됨. 시민에게 혼선을 주는 일임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2차 피해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혼선을 차단해야 함

47. 해킹 문제 관련

- 서울교통공사 최근 5년간 약 9억8만건의 해킹공격을 받았으며, 하루 평균 약 57만 건에 달함
- 해킹유형을 구분하면 디도스공격 약9억3만건(95%), 웹공격 4753만건(4.6%), 스캔공격 93만건(0.3%) 등 발생
- 국가별 해킹 공격 시도 현황에 따르면 미주권 82만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은 4만8천 건 등임
- 해킹공격에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킹시도는 꾸준히 늘고 있어 화이트해커 영입과 방어시스템 고도화에 아낌없는 예산 투입으로 적극적 방어에 나서야 함

48. 연결통로 승강설비 고장 관련

- 도시철도 44개 역에 조성된 역사와 민간건물 간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

164대(52개소) 중 7개소 14대(에스컬레이터 10대, 엘리베이터 4대) 고장상태로 방치

- 조성 시 협약서에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빠뜨린 결과임
- 정상화는 다행이지만 법적 분쟁을 통해 시간과 법적 비용을 투입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 남은 5곳도 소송 외에 해결할 수 없게 됨.
-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협약서 조문에 잘 반영하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49. 신조전동차 관련

- 노후 전동차 개량을 위해 2014년 2호선부터 10차레에 걸쳐 약 3조원을 투자하여 노후 전동차를 교체 중이나, 모니터링과 효과분석 없이 지속 신조전동차 도입 중임
- 당장 신조전동차의 장애 및 정비감소, 수리비용 및 잉여인력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경영개선에 반영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
- 아울러 신조전동차 안전점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 신조전동차가 도입완료 될 2호선 '1인승무제' 시행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 바람.

50. 성범죄 발생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 이후 17개월간 서울교통공사에 발생한 성범죄와 성희롱 7건 중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건은 2건에 불과함
- 공사는 성폭력 사건 인지조차 못해 11개월 지난 9월 언론보도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였음
- 3건 중 2건은 정직 1개월에 그쳤는데, 앞으로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수사 감찰해야 할 것임

51. 경영목표 설정 관련

- 경영목표는 기업의 미래를 설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공사는 경영목표를 매년 형식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 자료에 따르면 공사를 비롯한 5개 출자기관의 경영목표와 추진과제, 성과목표를 나타내는 자료가 제각각이라 비교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임
- 공사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전사적 무재해운동'의 산재발생 건수 목표 값이 '13건 이하'로 설정했는데, 재해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지 않나?
- 내년 경영목표 산정 시에는 실효성 있는 경영목표화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길 바람

52. 인재개발원 인력 운용 관련

- 인재개발원 인사발령으로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함
- 전문성이 뛰어난 간부를 인재개발원으로 무작위 발령하는 것이 아닌, 현장인력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 인재개발원 인력 운용 관련 재배치 수립 바람

53.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련

- 공기청정기 설치 후 공기질 측정결과 공기질이 더 나빠진 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 공기청정기 흡입풍속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중인데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양방향집진기 관련 市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로 설치 계획이 진행됐다가 현재 공사와 업체간 계약 체결로 사업을 정상 추진이라고 밝혔음. 성능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정상 추진하는 것이 맞나? 공사의 입장은 어떤가?
- 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해 설치 전/ 설치 후 효과, 성능 등을 상세히 보고 바람

54. 도봉차량기지 주취자 난동사건 발생. 국가보안시설에 주취자가 정문으로 들어온 사실이 납득이 어려움. 차량기지 보안 허술. 무단침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 강화 필요. 도봉차량기지 경비반장 감봉 3개월 처분받자 징계 재

심청구 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책임이 있는 것임. 책임의식 제고 바람

5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는 교통방해 및 철도시설 파손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법행위로 규정. 시민을 불모로 각종 사회적 손실 야기,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처 바람
56. 3호선 옥수역 대기실 화재, 홍제역에서 넘어짐 사고 발생. 작업자가 일어나자마자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사망에 이를 뻔, 사망까지 이를 뻔한 중대사고임. 메트로환경 기강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할 것
57. 감사실 워크숍에 사장·감사 참석했는데, 감사실이 경영진 견제하는 역할임에도 직원 격려 차원 저녁 식사 참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개선 바람
58. 감사가 노동조합 간부들 특정사안들에 사규 위반 등을 조사하지 말거나 처벌을 약하게 지시했던 제보 있었는데 해명 바람. 2019년 9월 5일 창동차량기지에 감사팀 방문, 현장에서 근태 적발하는 도중 일부 노조원과 불미스러운 언사가 있었음(음성공개), 감사 소명의식 제고 바람
59. 승객폭주시 자체무정차 판단 필요
60. 혼잡도 개선대책 필요함(단기, 중장기)
61. 3호선 역사리모델링 4~5년내에 처리해주기 바람
62. PSD 통신장애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함
63. 장애인 고용비율 기준충족 필요함
64. 의견광고 폐지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됨. 깊은 검토가 필요함
65. 역사 냉방시설 안된 곳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5년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조치 필요
66. PSD고장 관련 통신사 5G중계기 출력문제 전문가 진단 바람
67. E/L 고장이 심함 E/L 850여개. 40여개 업체의 E/L가 들어와 있는 문제 검토 바람
68. E/L와 PSD 매일 고장 근본적인 원인 파악하여 조치필요

- 69. 공사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함.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 필요
- 70. 통합관제 구축은 스마트관제를 표방하고 추진할 것
- 71. 교통공사가 인원을 감축하고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음. 인력, 설비,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72. 자동적 무정차 경보시스템 구축필요
- 73. 기업어음(CP) 유찰되지 않도록 협의 필요
- 74. 환경자회사 직원의 적정한 건강진단비용이 책정되어야 할 것

□ 서울시설공단: 38건

- 1. 돔구장 지하의 서울책보고 입점 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추후 사업 추진시 수요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
- 2. 돔구장 지하공간을 야구와 연관된 장소를 유치하여 이용객과 수익성을 늘이는 방안 마련
- 3.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 이용기준 검토를 통해 실질적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
- 4. 장애인콜택시 적정운영인력 확보 검토
- 5. 장애인콜택시 과태료 부과액이 60.3% 증가했는데, 범칙금 납부 주체는?
 - 거제시는 GPS 추적하여 범규위반 관리하고 있음. 관련 시스템 도입 검토바람.
 - 과태료 부과로는 부족해보임 추가적 대책이 필요
- 6. 18년부터 사내복지기금 미출연 되고 있는데? 市입장 및 해결안은?
- 7. 재해대책 비상근무 횟수, 시간에 비해 총액인건비에 묶여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은? 시와 협의하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하여 보고바람
- 8. 에너지저장장치 사업(ESS)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만큼 안정성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
- 9. 자동차전용도로 노면표시 재귀반사 휘도 관련
 -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노면표시 재귀반사 휘도 점검(4개소)

결과, 비정상(100mcd/m²-Lux 미만) 값 확인

- 동호→성수대교(1개소)

- 올림픽대교 하부(1개소)

-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은 노면표시가 하자 기간 내 성능이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부실한 관리로 성능이 미흡한 노면표시가 존재하고 있음
- 공단이 관리하는 전 구간 노면표시에 대한 전수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결과를 보고 바람
- 우천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안전을 위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

10. 고척스카이돔 '책보고' 관련

- 고척스카이돔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서울도서관과 구로구청이 협의해 책보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
- 하지만 고척스카이돔 기준 5km 내에는 '책보고'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화 시설인 도서관이 이미 수십여 곳이 있고, '20~'21년도에 서남권 도서관 확충 사업에 대대적인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었음
- '책보고' 설치계획의 기초가 된 입지 타당성 용역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부실함이 존재함
- 주객이 전도되어 고척돔 활성화를 위한 '책보고' 설치가 아닌 '책보고' 설치를 위한 고척돔 공간 제공으로 전략해 고척돔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포기하게 되었음
- 결국 고척돔과 시너지를 내는 시설유치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공단의 무책임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까 우려됨

11. 공단 직원의 근태관리 관련

- 공단 직원에게 배포한 '실수사례집'을 통해 근무 기강 환기를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
- 실제 공단의 '징계 처분의결서'에 나타나듯 '무계 결근'으로 인한 징계가 상당

수 존재해 공단의 근태관리의 문제점 및 근무 기강 해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공단 직원의 기본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공단의 근무기강 확립을 주문함.

12. 장애인콜택시 관련

- 장애인콜택시 업체 선정에 관련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의심하는 보도가 있었으나, 공단이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책임 존재
- 수능을 앞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콜택시 우선배차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주기 바람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부주의'에 대한 징계가 잦는데 운전원의 주의 강화 필요, 한편 운전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고 시 과실 비율을 잘 따져 무리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13.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 일시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제한적 이용(10시~15시)으로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지?
-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이용하지 못하는지? 서울 외 지역병원 이용자를 위해 타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해 보임
- 장애인콜택시 기존 및 신규 이용자의 등록 절차, 구비서류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서류의 진/허위 구분 방법은?
-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람

14. 공단 직원 외부강의·겸직 관련

- 외부강의 82건 중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가 80건(98%), 이중 출장비를 지급 받은 건수는 15건임
- 출장비 미수령자와 수령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출장비 중복 수령자 증빙자료 제출할 것
-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은 직원 사례도 있고, 공단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있음. 앞으로 외부강의·겸직에 대한 복무 관리 강화가 필요함

15. 직원 징계 관련

-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임직원 81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임
- 공단 징계 이후 직원 소송 등에 따라 징계 변동이 2건 있었는데,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양정과다' 결정이 났음
- 징계 결정이 소송전으로 가고, 간부는 솜방망이 징계 수준인데 '형평성, 공정, 일관성' 3박자가 맞는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관리방안 제출 바람

16. 따릉이 QR 단말기 부품 및 배터리교체 입찰 등 조달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요청

17. 전기차 충전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CCTV가 과연 필요한지? 3~4천만원의 예산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단속 권한이 없는 시설 공단이 자치구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임. 사업 점점 지적

18. 동부간선도로 상습포트홀 발생 구간에 대한 버스정류장의 콘크리트 바닥재와 같은 근본적 해결이 필요 지적

19. 어린이대공원의 장애인화장실 설비 적정성 문제, 리모델링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있는 만큼 빠른 시정이 필요함

20. 모바일앱·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 서울시설공단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준수를 위해 공단이 노력한 점은 칭찬함.
- 장애인콜택시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C등급 받다가 지난해 D등급(안드로이드), S등급을 받다가 지난해 D등급(IOS)으로 떨어졌음
- 장애인콜택시앱은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는 교통서비스 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당부

21. 법 개정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관련

- 최근 2년간 서울시설공단 성범죄가 총 4건 발생,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건은 0건임
- '피해자 명시적 반대'는 피해자가 여가부 통보 동의 시 우려되는 2차 피해와 사건 장기화에 따른 심적 고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공단 4건 중 3건이 근무지 조정에 그쳤음. 성폭행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한 뒤 2차 가해 당한 사례도 발생
- 재발 방지 위해 실질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당부

22. 청렴 의식 제고 관련

- 매년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는 사유 및 매뉴얼 필요.
- 감사 조치가 매년 발생하는데 개선 의지 부족 및 청렴 의식 필요함
- 성비위로 해임된 임원 관련, 성과급 지급 문제 있음. 청렴도 하락 우려되며 직원 청렴 교육 당부
- 직원 비위 사건 다수, 징계 수준을 높여야 필요성 있음

23. 공단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관련

- 공단의 경영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재 및 불분명함
- 특히 성과지표는 지난해 목표달성치보다 낮은 경우 있음
- 제대로 수립하여 내년 업무보고 시 반영 당부

24. 경영전략본부장 임명 관련

- 경영전략본부장 임명 관련. 내부직원 중 채용한 사유?
 - 채용 면접이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적격자인지?
- 해임된 상임이사의 성과급 보고 현황 위증 문제 지적

25. 어린이대공원 관련

- 2016년 후문매점 입찰의 낙찰가액이 낮은 이유는?
- 어린이대공원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필요. 안전체험센터, 수영장, 동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검토 당부
-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 실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 모색 해주길 당부

26. 어린이대공원 관련

- 어린이대공원 현재 수익성은?

○ 어린이대공원 장단점은?

○ 어린이대공원 업무보고서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부분이 없어 현 실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움

27. 임직원 업무추진비 관련

○ 공단 규모에 비해 임원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예산이 부족함, 市로의 적극적 요청 및 개선의 노력 당부

○ 감사 업무추진비 연간 615만원, 회의비 316만원 책정 931만원인데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28. 콜택시 구매 업체가 2~3개 였는데, '22년 1개 업체로 선정된 이유는?

29. 차량선정위원회의 배점표가 매년 상이하며, 안정성 등의 중요성이 높은 항목의 배점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다수 있음. 독과점 우려, 배점표의 전면 재검토 요청

30. 자전거 위탁금액 대비 낮은 따릉이 가동률 지적, 예산 낭비 우려됨

○ 가동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본적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 필요함

31. 위탁 및 수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전 입찰 방식 및 긴급 공고가 나간 이유는? 긴급 공고에 대한 확인 필요함

32. 위탁 및 수의계약 관련 계약방식 및 금액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본부별 계약방식 상이함 지적 및 도로시설처 공사 사업 관련 입찰가와 낙찰가가 동일한 것이 석연치 않으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요청

33. 경기장 안전 관리 소홀 지적(홈페이지 내 출입구 미표기)

34. 무허가 용도 변경 발생 건 지적

○ 市 승인없이 용도변경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수조치 된 것은 법적문제가 발생된 것. 환수조치로 인한 예산 낭비에 경각심 필요

35.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 검토 필요

36. 콜택시 업체선정 독점 문제 제기

○ 작년 안분 구매한 것에 비해 올해 1개 업체 선정된 것 문제 제기, 정량평가

수치가 비슷한데, 임의성 강한 정성평가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듭

○ 차량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임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37. 재무제표상 불용액(미지급금)과 미수금이 함께 급증하는 문제 지적,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 필요함

38. 지하철도 배수설비 이중화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 의문이 듭, 근본적으로 하수관이 문제인데 작년 예산 감축이 실시된 것 지적, 하수관 정비 실시 요청

11. 교육위원회

187건

서울시교육청 : 154건

1. 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종교 교육을 시행하는 종립학교 중 종교과목을 단수로 개설하여 학생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치할 것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신고 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교육청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법무부 등과 협의
4.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의 교육청 이관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구청과의 협의 지속
5.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관련 규정을 즉각 시정
6.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구성된 일부 고등학교의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 규정 완화
7. 매입형 유치원 사업 진행에 있어 매입 직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개축을 계획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현황을 면밀하게 검토 추진
8.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의 안전대책 강화

9. IB 교육과정 요소를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 사업 추진이 사교육 수요 증가,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10. 교장이나 교감이 소속 교원에게 갑질을 한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전보인사만 시행한 사안에 대해 조치의 적정성 등 재검토
11.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할 것
12. 교육청은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보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선보고 할 것
13.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조례에 대해 교육감 성향에 따른 편향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14. 청원게시판 익명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청원자의 개인 정보 수집동의, 실명인증 방법 등을 통해 청원게시판 운영의 실효성 확보
15.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16. 공직자 비위 행위 근절 대책 수립 추진
17.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권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 사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확대
18. 연간 감사 계획과 함께 5년~10년간 중장기 감사 계획 수립 시행
19. 감사관은 서울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여 공명정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업무 수행
20. 수감에 임하는 모든 직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1. 감사관 주요 업무와 이질성이 큰 교육행정지원팀의 업무를 교육행정국으로 재배치
22.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연차별로 관련 예산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
23.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증가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모색
24. 학교도서관 내 사서 및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에 사서, 사서교사를 배치
25. 학생 식당이 미설치된 학교에 조속히 식당 설치를 완료하고, 교실 배식

이 이뤄지는 학교 등에 대해 보냉식기를 보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

26.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치 마련
27.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8. 교원 1인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29. 관계 기관과의 협력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조속히 설치
30.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가 미흡한 사학법인에 대한 제재방안 및 납부장려 대책을 조속히 마련
31. 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지적 건수가 많은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모색
3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 직원 비중이 높으므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33. 감사관 등 개방형 직위 임용이 친분, 성향 등에 따라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
34.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가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35.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36.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 제고
37. 키다리샘 운영에 있어 교육부 지침 철저하게 준수
38. 일부 교원이 키다리샘 프로그램을 일과 시간 중에 운영하여 급여와 수당을 동시에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39.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를 전수조사하여 원인 규명하고 조속한 시설 복구 지원
40. 연수원 건립 사업을 전면 재검토
41. 학교협동조합 및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전면 재검토
42. 효율적인 학교 예산 운영을 위해 자치구에서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청 예산과 동일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43. 정신건강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 모색 및 사후관리보다는 예방 주력

44.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별, 학교별 학생 수 편차가 커지고 있으므로 교원 1인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 마련
45. 내실 있고 효과적인 국제교류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사업 전반의 성과 등을 재검토
46. 신속한 재난 대응이 전개될 수 있도록 재난·재해 발생 시 시의회 등과 업무협조 및 보고체계 개선
47. 교육감 직무수행평가 등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대변인과 정책안전기획관 등이 협업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등 강화
48. 감사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형식적 처리를 지양하고, 갑질 행위 증가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적극 대응
49.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자료를 현행화하고, 일부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페이지에 대해 즉각 조치
50.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에 학교별 표준 모델(과목 편성 사례 등)을 개발, 보급
51. 유아교육진흥원 청사의 미등기, 과학전시관의 건축 법규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의 개선 방안 모색
5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53.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학업 지원, 진로지도 등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54. 사립학교의 강당과 체육관에 장애인편의시설(무대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 모두 설치
55. 학구도안내서비스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등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56. 영세업체 도산 등으로 기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점점 개선
57. 청담고등학교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
58. 교육청은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59. 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소속 공무원 대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가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 개선
60. 교육청은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외래어 사용 및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업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61. 학교도서관 자동화 장비 구축 사업의 성과평가가 전개될 수 있도록 대출 반납 실적, 만족도 조사 등
62. 교내 3D프린터 설치·운영 시 개방형 모델을 지양하고, 기설치된 개방형 3D프린터는 밀폐형으로 전환하거나 흡배기 시설 추가설치
63. 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 예정인 3D프린터 활용 메이커 코딩 수업 진행 시 학생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
64.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개선,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학과 개편, 교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실습 현장 마련 등을 통해 특성화고의 신입생 충원을 미달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65. 현행 중학교 학생 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6. 고교선택제 하에서 학교별 학생 지원율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
67. 발암물질이 검출된 음수대가 설치된 학교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
68. 급여, 세입 등 특정 업무 분야에서 저경력자의 퇴사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69.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 고용 비율 준수
70. 지방자치법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문화된 교육규칙, 장기간 미운영된 위원회 등이 규정된 규칙 등 즉각 정비
71. 디бет 운영에 있어 유해사이트 접속,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부작용이 크고, 양품화 및 재배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 전반 재검토
72. 교장협의회와 같은 임의단체가 주최하거나 관련된 행사에 교장의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73.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의무비율 3%를 준수
74. 라이더 카페 등 신종 유해시설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관계 당국 협의 등을 적극 전개

75. 관내 학교에서 출제 오류에 따른 재시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6. 교내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
77. 노후화된 학교 교사(僑舍) 및 구조물 등의 안전 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육안 점검 이외에 다양화·전문화된 방법이 활용되도록 방안 마련
78.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의 저조한 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79. 재개발 구역(흑석9구역) 내 위치한 학교(은로초교와 중대부중)의 공사 소음 노출, 통학로 안전 문제 확보
80. 동작구 흑석동 내 고등학교 개교 추진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81. 방과후 학교 강사 인력의 질적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82.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국가 정책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83. 아동학대, 폭행, 절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들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고 세분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
84. 상당수의 시민감사관이 전직 교직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로 채용
85. 기관포인트의 사적 이용 방지
86. 직원에게 휴대전화 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을 지원하는 관행 중단
87. 전문적인 자격 요건과 객관적 업무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 채용·연장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88.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해소
89. 학교 내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
90.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들이 학교폭력 담당 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
91. 명예퇴직한 교원들이 퇴직 직후 기간제 교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92. 교원들이 본인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겸직하는 일이 없

도록 관리 감독 강화

93. 소속 교직원의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양식 통일
94. 교원 대상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가족 직업을 기재하는 항목 삭제
95. 교원의 정치편향 발언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징계 처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9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비중 확대
97.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 대상 상벌점 조항들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즉시 시정
98.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절차 준수
99. 학교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100. 카카오톡 서울시교육청 교육뉴스 채널로 제공되는 서울교육뉴스의 가독성 개선
101. 영문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고, 관리 감독 강화할
102. 오탈자, 날짜 미기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 철저
103.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사안처리(처벌, 불이익 조치 등)
104.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직 기간 중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수령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105. 교육청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06. 안전보건 지도점검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107. 안전보건 지도점검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시 학교가 특정 업체와 계약해야만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치
108. 학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유기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지도, 감독 강화
109. 수서 신혼희망타운 입주로 인한 기존 학부모와 신규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
110. 학교 회계연도와 무상급식 회계연도가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111.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중 2년 이상 운영실적 없거나 중복·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해 조속히 정비
112.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폐지 검토
113. 「양성평등 기본법」에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성비 기준을 미준수하는 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대해 관련 성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114. 안전교육 관련 법정 의무교육 시행에 있어 임의적으로 수업시수를 축소하지 않도록 할 것
115. 실제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7대 분야 학교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운영
116. 교원의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시
11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조례안 제출계획 변경 사항의 분기별 통지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
118. 기금조성 목적과 취지에 배치되어 운영되는 생태전환교육기금 폐지 검토
119. 생태전환교육이 정치 편향성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 점검
120.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본래 사업 목표에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사업 전면 재검토
121. 혁신교육전공대학원의 교육과정, 생태전환교육 운영 등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22. 교원휴직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방학 기간에만 복직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123. 일부 학교에서 장기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등에 따른 기간제 교원 해고가 발생하므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안 모색
124.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심야 단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단속 인원 충원
125. 학원장과 교습자 위주로 구성된 학교자율정화위원회 관련 자치법규에 제척, 회피 및 기피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대책 모색
126. 상위법령에 맞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운영
127. 수업나눔카페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학교 내 유휴 교실이 학생을

-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유희교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시행
128.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임의적인 계획 변경 및 연차별 이행 목표 축소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약 관리업무 철저
 129. 양천구 등 향후 3천 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 현장에서 의무설립 교육기관의 진행 상황을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
 130. 2026년 시행 예정인 보직교사 지원제도 연구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교원 보직수당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 모색
 131. 학교 동물 해부 실습 시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
 132. 기존 유치원 영양교사의 퇴직에 따라 채용 시까지 발생 가능한 공백 기간 중 안정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133. 관내 전체 학교 화장실에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134. 교육복지사업 확대에 대응하여 행정기구 개편 방안 검토
 135.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사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징계양정의 관행 개선
 136. 범죄 혐의가 중대함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유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한 후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검토
 137.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감이 위원장 선임에 관여하지 말 것
 138. 서울교육수첩의 현행화 및 핸드폰 번호 누락에 대해 즉시 시정
 139. 교육감과 관계가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인사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관행 개선
 140. 특정 민간전문가에게 자문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자문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자문의 실효성 제고
 141. 디벗 사업으로 보급된 스마트기기의 고장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리 비용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기기 관리방안 마련
 142.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광고료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

으므로 교육청 광고 예산의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

143. 학교 종합감사 주기(3년)를 경과함에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가 상당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가 규정에 맞게 종합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조치
144. 일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벌금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에서 노력
145. 학교석면관리컨설팅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서와 실제 집행 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승인된 내역에 부합된 것만 집행
146. 교육행정국장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 즉시 시정
147. 현장에서 인조잔디 설치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148. 서울시교육청 교육금고 지정·운용에 있어 마이너스 가산 금리 적용, 저조한 협력사업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약정 내용 전반을 재검토 및 계약 해지 검토
149. 교육금고 선정 시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기준표를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개선
150. 서울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포함)의 기금 및 교육금고 수익률 관리 철저
151. 조례에 따른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의회 보고 의무 철저
152. 학교 화변기 교체 사업 시 적정 단가를 책정하여 예산 낭비 방지
153.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교육정책 사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154. 예산 산출 시 과도한 계상 방식 개선

교육지원청 : 1건

1. 소속 관용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

□ 직속기관 : 28건

1. 교육연구정보원은 자체 또는 위탁연구, 현장연구 등에 있어 주제가 중복되거나 내용이 유사한 연구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
2. 교명 변경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학교가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학교명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 철저
3. 웹 포털 등 이용률이 저조한 플랫폼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4.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청(직속기관 등 포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이용자 수가 적은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5. 과학전시관은 개방형 실험실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6. 과학전시관 홈페이지 내 관계 기관 홈페이지 링크 등 현행화
7. 과학전시관 유튜브 채널 계정의 일원화 및 관리 방안 마련
8. 교육연수원 홈페이지의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9. 성장과 역량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예산 절감
10. 교원 근무시간 중 출강 시 급여와 동시에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모색
11.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 중단
12. 교육청 내부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관계 규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3. 교육청 소속 직원이 담당 업무에 대해 강의를 할 때 강사수당 등이 지급되는 부분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토
14. 학생교육원은 불용예산을 최소화
15. 유아교육진흥원은 본원 건물의 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본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
16. 학교급식에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17. 품질 높은 급식을 위해 조리 종사원 1인당 담당하는 인원수 조정
18.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베임, 화상, 폐암 등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19.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씻기 교육 프로그램 등 마련
20.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전처리가 HACCP 인증 시설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1. 학교급식 식자재의 공산품 비중을 낮추고 자연식품과 계절 식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학교급식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
22. 친환경유통센터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 단가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사례가 확인되므로, 친환경 식재료 공급 단가가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마련
23. 태풍 등 자연재해로 식자재 납품이 취소된 경우 대금 지급 정산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침 마련
24.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그리스트랩의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오수 배출, 악취 및 안전사고 발생 문제 등을 해소할 방안 모색
25. 학교 내 산업안전사고 발생 시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예시에 사업주를 기관장으로 잘못 표기하여 안내된 부분에 대해 즉각 시정
26. 학교급식으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을 수립, 시행
27. 사립학교에 설치된 정화조의 유지,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28.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시설보수지원센터가 자율형사립고 등 지원 제외대상 학교에도 시설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도서관·평생학습관 : 2건

1. 직원의 민원 응대, 불친절 관련 민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여 친절교육 강화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

2. 의회 업무보고 작성 시 도서관 운영 및 실적의 변동추이 등 현황을 더욱 세밀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운영 방향 명확히 제시

학교안전공제회 : 2건

1. 체육 시간이나 이동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
2. 사무국장 등 임직원 채용 시 공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고 기준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건의사항

951건

1. 운영위원회

23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5건

1. 시장 개인 유튜브 대신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서울시 유튜브가 구독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2. 저출산 정책을 위한 예산이 약 3조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 저출산 정책을 정비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서울,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
3. 남산 고도 제한으로 주변 주민의 피해가 많으므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바람.
4. 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SH본사, 센터장, 입주자대표 등 관계자 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5. 시장 핵심사업인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시의회사무처 : 18건

1. 의원 연구실에 집행부 직원들이 단순 물품 전달을 위해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는데, 의원 연구실 앞에 종이박스를 놓는 등 의원 연구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2. 의원연구실에 무단침입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주의.
3. 본관, 별관 지문태그 시 호환성 문제 해결 바람.
4. 방문자 출입증 교부·패용 문제 시정.
5.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 지연 등 문제 발생, 사무처가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람.

6.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도 공개하는 등 의원 뿐 아니라 외부 기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련, 부실, 중복되는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안내를 해 주기 바람.
8. 연구용역 시행 시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들 정책개발에 잘 활용되도록 개선 바람. 또한 연구용역이 단순 FGI조사, 사례조사에만 그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8. 웹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기관 부처들의 각종 홈페이지가 호환이 안 되어 불편함. 시의회는 시스템 관련 용역업체 입찰 시 호환이 가능한 업체로 입찰 조건 제시 검토.
9. 10대 때 고가에 구입한 장애인용 차량을 11대에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추후에도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기보다는 필요 시 리스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비용 절감 검토.
10. 통합방송스튜디오 사용실적이 저조한데, 접근성이 낮아 촬영, 편집 등 이용이 어려우므로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 검토.
11. 언론홍보실의 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재설계 필요.
12. 의원연구실 명패 교체를 제3의 색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사무처에서 의원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고, 운영위원회에게 보고도 없었음. 앞으로 개선 바람.
13. 사무처 직원 명함을 세련되게 새로 디자인 필요.
14. 시의회 신문고 답변 시 서울시 로고가 찍혀있어 서울시가 답변한 것처럼 느껴지므로, 의회 로고가 찍힐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15. 본회의장과 의원회관을 동일한 건물에 배치하는 등 의원 편의성 향상 필요
16. 여성 수면실·휴게실 등 휴식 공간 필요
17. 가족수당 과다지급으로 환수한 내역이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지급 관리 바람.
18. 의원들 지적사항을 체계화할 것.

□ 비상기획관 : 11건

1.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폭우로 인한 수해, 이태원 참사 등)에 서울시 안전총괄실 등 여러 부서 간 유기적인 대응책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길 바람.
2. 화생방 방독면을 재난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방독면은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데, 다중 운집 시설 등에 추가로 비치하여 지하철 화재 등 유사시에 시민의 안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3. 비상기획관이 4년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언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것에는 서울시에 분명 책임이 있음. 전·평시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서울시와 토론하고 결론을 내야 함.
4. 비상기획관에서 서울형민방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음.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민방위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5. 세대별로 다른 안보 인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민방위 제도 도입이 필요함.
6. 각 동의 방위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7. 재향군인회는 지원이 많지만, 동 방위 협의회는 지원이 없음. 동 방위협의회에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비 등 지원이 필요 하나, 미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 요구.
8.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음용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9.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재 제작을 개별 자치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공통적인 교육을 하는데 3개 업체로 나눠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

10. 민방위복이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 3, 기초 2개 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민방위복의 전면 교체는 막대한 국가적인 예산(300억원 추정)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현장 혼란도 우려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만큼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행정과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
11. 최근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처리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건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9건

1. 신규 및 내부 직원에 관한 수사 직무교육이 부족해 보임. 수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절차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할 것임.
2. 온라인으로 위조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단속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람.
3. 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민사경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람.
4. 전문수사자문단의 안정적 운영과 수사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5. 인센티브 부여 등 내부직원 사기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6.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전문관 지정을 통해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길 바람
7. 주택과와 연계해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동물보호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의 반려경찰단, 민간단체, 동물병원 등과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함.
9. 최근 3년간 수사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고 하나 그 기간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님. 오히려 범죄는 더 다양해지고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음. 수사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행정국 : 13건

1. 서울혁신파크를 새롭게 개소하면서 기존 터에 남아있는 160여 개의 업체를 퇴거해야 하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할 것.
2.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합에서 이번 주말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영리단체가 과도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함. 교육 문제, 환경문제 해결 등 더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함.
3.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지 등 자료 제출 협조(공문 발송) 및 제출.
 - 재난 상황 일지, 현장출동팀 명단·출동시간·도착시간 등,
 - 112, 119, 120 등 각 신고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 등 취합자료
4.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청년층에게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5.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인원 배치, 인사적체,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MZ 세대의 공직이탈이 심화되고 있음. 업무량이 많고, 대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 더 많은 직원과 자원을 투입하는 등 조직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꿔나가야 함.
6. 행정국은 서울시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고민 필요.
7. 공무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외부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힐링센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할 것.
8. 본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으로 운영하지 말고 향후 지속적으로 본예산으로 편입시켜 추진해야 할 것임.
9. 행정국 자체 청렴도 조사를 살펴보면 인사 분야의 점수가 낮음. 행정국의 인사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줄 것.
10. 공무원들의 역량평가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11.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요하지만, 기부금품 모집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기부금 목표액은 크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모인 기부금품은 목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효과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적절하게 홍보를 해주길 요청함.
12. 서울시 연수원은 직영(속초), 민간위탁(서천, 수안보), 임차(제주)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22년 운영만 비교하면 제주연수원이 운영비는 가장 적고 만족도는 가장 높음. 직영과 민간위탁이 기존 서울시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 결과임. 직영과 민간위탁 연수원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여 주기 바람.
13.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들은 해마다 이용빈도는 낮아지고, 적자의 폭은 커지고 있음. 시설은 노후하고 관리도 허술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사실 캠핑장과의 경쟁 이전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도 벤치마킹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큰 변화가 요구됨.

□ 재무국 : 15건

1.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매년 2,000억으로 획일적으로 책정해 놓았음. 매년 관행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므로 유동적인 목표액 설정이 필요해 보임.
2. 체납 지방세 징수 시에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공조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주기를 바람.
3. 세금 징수 시에 자치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치구에게 징수 권한을 주고 그 성과를 평가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세금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기를 바람.
4. 세무조사팀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고 징수요원이 장기근무할 수 있고 보람과 성취를 얻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인센티브 제공, 세무조사과 신설을 통한 업무 위상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독권이 전혀 없는 상황임.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감독 방안

대해 정부와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람.

6.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7.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가택조사 후에 개인의 사생활 영상을 과도하게 노출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 체납자 동산압류에 따른 가택 수색시 개인사생활 노출 문제가 있었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8.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에 있어서 서울시가 17위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혁신적인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를 추징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해나가기를 바람.
9. 평창동 미술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신경 써주기를 바람.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 예산 편성 사업에 관한 지적이 계속됐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미리 걸러야 한다고 보여 짐.
11. 매년 수십억 원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수급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 적정예산이 책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를 바람.
12. 공유재산심의회에 서울시의원도 당연히 참석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13.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신인도 가점 중 ‘성평등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명칭 변경과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4. 2021년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10.7%, 지방세의 경우 26.9% 초과 징수가 발생함. 세입추계의 오류는 본 예산의 건강한 편성에 지장을 초래하며, 방만한 추경의 원인이 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게 되고, 예상하지 않은 전출금의 발생으로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좀 더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산식을 통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계를 결산에 근접하게 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함.
1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안건 중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부지 사용

의 문제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됨으로서 이후 불가피한 예산의 추가 집행 또는 불리한 조건에서 자치구와 소유 및 운영에 대해 협상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유지 및 국유지 등에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착공 전 토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 평생교육국 : 20건

1. 서울권이 입시교육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길 바람. 예를 들어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서울형 교육플랫폼과 연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람.
2.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탁사업이 종료되지만, 정규직 인원 고용승계, 기존 프로그램 이관 운영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결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배치라는 것은 우려의 지점이 있으므로 세심하게 신경 쓸 것을 요청함.
3. 문해학습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배움터(디지털재단)와 유사하므로 해당 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이 필요하니 검토하기 바람.
4. 서울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국가의 디지털 교육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해 검토할 것.
5.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의 금액과 지원 대상이 터무니없이 적음.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자립지원수당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6.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 시설들이 넘비시설로 낙인찍혀 지역사회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7.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가 편향된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이므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

8.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를 제대로 평가하여 다른 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할 것.
9. 쉼터 유형구분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쉼터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학대, 성폭력, 성매매 등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입소하는 경우가 있음. 입소 경위에 따라 구분을 두고 치유 정도에 따라 보호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10.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강화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것.
11.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고 학생과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은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울형 교육플랫폼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 것임. 서울형 교육플랫폼과 고교-대학연계가 일부 중복되어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12.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람.
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기를 바람.
14. 청소년 쉼터 사업의 성과가 미진함. 이에 대해 개선해주기를 바람.
15. 다른 자치구에는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유일하게 종로구에만 청소년 센터가 없음. 종로구에도 청소년 센터가 건립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쓸 것.
16. 예체능 전공 졸업생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길 바람. 이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17. 서울런 등을 활용해 기초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에 대한 학습

도 진행하도록 할 것.

18. 서울시가 근거로 활용한 논문(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에서 사용한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용어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고, 소득차이가 교육격차를 발생시켰다거나, 저소득층일수록 교육성취도가 낮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 바람.
19. 시의회와 평생교육국 간 법령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2021, 2022년 교재 쿠폰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법률유권 해석·자문을 다시 의뢰해서 검토내용을 제출할 것.
20. 플랫폼 구축과 멘토링 형태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보다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식(바우처) 통해서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인재개발원 : 11건

1. 인재개발원의 청사 이전 대상 지역으로 강북 수유 영어마을이 지정됨. 그러나 국가 타당성 조사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등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일관성 없는 타당성 조사를 지양하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도록 할 것.
2. 30년 이상 노하우를 쌓은 퇴직 공무원이 신입공무원에게 성공담, 조언,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 일반적인 강의 형태가 아닌 토론식 수업 형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3. 비대면 교육 운영 시 수강자의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부적절한 수강 행태는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것.
4. 행감자료를 보면 예산불용율은 높고 집행률이 낮아 연말에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임. 다음 해부터는 사업을 월별로 제대로 진행하고,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행태는 지양하기 바람.
5.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은 1,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강남북간 균형발전이라

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청사 이전을 결정하기에는 큰 예산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판단은 지양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청사 이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6. 업무보고서를 보면, 9월말 기준으로 70%미만의 진행율을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스러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밀렸다고 답했는데 연말까지 사업진행을 완료해 줄 것.
7. 코로나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인재개발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해줄 것.
8. 인생 이모작 교육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비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참여율은 저조함.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9. 취미, 자격증, 봉사활동 등 서울시 차원에서 기업체 연계, 귀농연계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바람.
10.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정원을 매년 못 채우고 있음. 이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은 예산 낭비와 마찬가지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와 입소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1. 인재개발원 어린이집에 서울시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인 경기도 자녀까지 입소하는 것이 타당하였는지 의심이 됨. 오히려 서울시민들의 어린이집 이용권이 제한될까 염려가 됨.

감사위원회 : 13건

1. 위법 사항에 대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할 것. 이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감사를 해주기를 바람.
2.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인 공익감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3. 자료제출 협조 요청 [10월 29일~30일에 해당하는 안전총괄실 산하 재난상황실 업무 일지·서울시 종합상황실(당직실) 업무 일지·120 다산콜센터 신고 접수 현황 및 내용]

4. 서울시 직위표 상 행정1, 2부시장 산하에 있는 모든 담당관, 실·국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임.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권자인 시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온도와 눈높이도 감안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검토해 줄 것.
5. 시설물,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사전적인 감사활동 활성화가 필요. 앞으로 감사위가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하길 바람.
6.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의 성과가 좋음.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주기 바람.
7. 명예하도급호민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협업할 수 있도록 고민해볼 것.
8.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고민해볼 것.
9. 공직자재산신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원들이 공직자재산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이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원들에게 공직자재산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
10. 공무원 안전순찰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해 줄 것.
11.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 신경쓸 것.
12.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밴드, 서울런 사업은 물품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는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검토내용 제출할 것.
13. 서울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스마트밴드를 나눠주는 사업으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음. 서울런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부 등의 사업과 유사, 중복', '사설학원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교육청이 아닌 서울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그러므로 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혼란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8건**

1.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 바람.
2. 옴부즈만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노력해주길 바람.
3. 서울시 집행부는 문제가 있으면 옴부즈만위원회를 핑계 삼아 책임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음. 집행부의 이러한 관점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위원회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4. '주민감사'와 '시민감사'는 시민들이 구별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5. 타 부서와 업무 중복성이 겹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만의 특색을 강화시켜야 할 것. 시민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집단갈등이나 난이도 있는 민원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6.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무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막중하기에,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줄 것.
7. 민원인들의 고충 민원 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해보길 바람.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그 역할이 없지 않으나 다른 부서와 중복되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없애기엔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민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니 없어도 안 될 것 같은 계류과 같은 부서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시민의 아픔과 고충을 보듬어주고 힘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의 변화와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자치경찰위원회 : 10건**

1. 경찰법 및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교통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로 되어 있음. 하지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아직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음. 교통안전심의회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옮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교통안전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길 바람.

2. 사건 발생 시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
3. 학교폭력 예방에 투입되는 인원(SPO)은 133명인데 이들이 담당하는 학교는 1400여 개. 1명당 담당 학교가 10개 이상으로, 너무 많아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 실효성에도 의문이 감. 개선책이 필요함.
4.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cctv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함. SPO가 항상 cctv를 주시하고,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행정을 할 것.
5. 서울 자율방범대원 활동과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그런데 안심마을보안관(18억) 대비 서울자율방범대(1억)에 대한 예산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6.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해 보임.
7.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 소속으로 만들어진 것임. 금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매뉴얼, 조례 규정 탓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8. 이태원 참사 유실물 처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 것은 다행이나, 애초에 기간을 1주일로 짧게 지정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행정편의적으로 조치한 것. 현장에서는 유실물을 찾아가는데 혼선이 있다고 하므로 챙겨주기 바람.
9. 디지털성범죄 업무는 시 소관이라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답변을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조례상 성범죄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이므로,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들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랍.

10. 자치경찰위원장이 해야할 일은 자치경찰사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임. 행사장 다니는 것은 줄이고,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15건

1. 국내 봉사자들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대면 봉사활동이 줄어들고 비공식적으로 봉사하는 인원이 늘어서 집계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제대로 다시 집계 후 보고하길 바랍.
2. 바로봉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과 유형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
3. 외국인 자원봉사의 참여 증가에 맞춰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4.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국적 분류나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자료화하여 사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5.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이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갈수록 재난, 비상상황에 대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커질 것. 국가적 재난상황에 자원봉사센터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방안을 고민할 것.
7. 행정국과 협의하여 탈북민 자녀들의 학력 격차 해소, 외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등 동행 프로젝트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8. 자치구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현황에 차이가 큰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9. 직장 봉사단체, 민간 봉사단체, 직영 봉사단체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
10.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11. 센터의 자율성과 재정 독립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확대 노력이 필요함.

12. 청년을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 정도로 대학생 중심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준비생, 대학졸업생 등 대학생이 아닌 다양한 청년들도 봉사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센터를 통해 자원봉사를 경험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이 타 광역단체의 센터에 비해 크게 적음. 자원봉사센터는 집행부의 지원과 간섭에서 벗어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하는 만큼,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정의 자체적 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14.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보다는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음(25개 자치구 중 16곳 직영). 최근 2년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음. 자원봉사라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자치구 센터들이 직영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추진이 요구됨.
15. 서울동행과 서울런 멘토링 서비스, 지역맞춤형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 목적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운영되는 형태는 매우 유사함. 설계자의 의도와 달리 중복, 반복된 사업은 현장 활동가들의 부담과 피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타 부서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하여야 함.

서울장학재단 : 8건

1. 장학재단의 역할은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기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후 어떻게 훌륭하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함.
2. 학생들을 대상으로 골든벨, 퀴즈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서울장학재단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반영해 주기를 바람.

3. 어떤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들을 선발할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선발 기준이 애매함. 특히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선 재능이 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4. 홍보 기념품 목록에 칫솔 살균기, 부직포 가방 등이 있는데, 홍보에 적절한지 의심이 됨.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서 뉴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
5. 장학생 선발 초기 단계부터 선정위원회가 폭넓게 소외계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장학생 선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 선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6.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비상임이사장인데, 비상임 이사장 체제로는 책임있는 경영이 어려우므로,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 필요.
7. SNS 채널 홍보가 활발하지 못하는데, 홍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더 많은 사람이 장학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담직원을 두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해볼 것.
8. 일부 장학사업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8건

1. 청년, 중년, 장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세대별로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세대별 평생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야 함.
2. 50플러스 재단 통폐합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진행할 것.
3. 시민대학의 참여 인원이 너무 적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효과적

으로 하면 수요는 많아진다고 생각함. 몇몇 사람들만 참여하는 시민대학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음.

4.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 센터에서도 여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경우가 많음. 그런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자치구에서 또 만들어 운영하면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선하길 바람.
5. 좋은 프로그램과 홍보를 잘하면 수요는 많을 것임. 연령별 맞춤형 홍보 강화 필요.
6. 낮시간 대 제공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며, 직업교육 등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방식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양하고, 야간교육 강화에 노력할 것.
7. 50플러스재단은 그동안 인생 이모작을 위한 일자리 교육과의 연계 뿐 아니라, 장년층의 경험과 능력 등의 자원을 지역사회와의 접목을 통해 환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많은 성과를 보임. 단지 장년층의 교육이 일부 유사, 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예산이나 사업, 직원의 수에서 규모가 큰 50플러스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이라면 더욱 이치에 맞지 않음. 무리한 합병은 오히려 유사, 중복 사업들을 양산하거나 인위적인 사업의 조정으로 양 기관 종사 직원들의 일자리만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음.
8. 평생교육 경비지원 사업의 경우 장학금 사업으로 목적과 대상이 다르지만 서울시 장학재단의 사업과 일부 중복됨. 장학금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장학재단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장학재단의 한계가 장학금 편중성이라면 장학재단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당 사업도 장학재단이 받아 장학재단의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기획조정실 : 15건

1. 현재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자녀 많이 갖기 등 캠페인·홍보 필요함.
2.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다자녀 출산 직원에 대한 승진 가점 등 강력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함.
3. 마을변호사·법무사 사업이 비대면 상담 중심으로 추진되어, 예산 집행률이 낮음. 집행률을 높여 주기 바람.
4. 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는 마을법무사 관련하여 성명 등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제출된 요구자료에는 비공개가 되어 있음. 공개가 필요함
5.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임. 홍보 및 준비에 차질 없도록 바람.
6. 투자출연기관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만족도는 높게 나오는데도 내부만족도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조직문화의 경직된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시 본청의 부채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감축을 위한 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함.
8. 서울시 지속가능한 2030 의제가 부진하지 않고, 향후 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함.
9. 서울기술연구원 최초 설립계획서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직 비대화

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기관 통폐합이 조직 비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10. 과거 유사·중복 위원회가 지적이 되어 통폐합 추진중에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람.
11.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서 인사 가산점 부여 등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임.
12. 서울로 7017 슈즈트리, 옥탑방한달살기 등 전임시장 당시 실효성 없는 일회성 전시행정추진 지적.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은 지양하기 바람.
13. 투자출연기관 사내대출 관련 기관별 금리 및 상품이 제각각인데, 서울시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이 제시하는 방안을 건의함.
14. 50플러스 재단이 3년 연속 경영평가가 다 등급을 받으며 최우선 평가개선과제가 기관장과 임원으로 지적되는데, 개선이 안되고, 고위급 임직원에 특정 단체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
15.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에서 이용자들에게 통폐합 논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단체문자를 발송했다는 정황이 있으나, 기관에서는 발송한 적 없다고 답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바람.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포함) : 9건

1. 캠퍼스타운 탈락 대학에 대한 구제방안을 고려할 것.
2.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이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3.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 하자로 인해 창업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 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4. 서울산업진흥원(SBA) 고유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11월 기준으로 창업기업 지원 예산 집행이 저조함. 서울산업진흥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내에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5. 로봇과학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도 개관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 바람.
6. 로봇과학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방안 고민하기 바람.
7. 마곡신단 입주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 중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길 바람.
8. 창업지원시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 마곡, G밸리 등 특점산업 중심으로 분포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의 접근성 높은 곳에 확대가 필요함. 창업지원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적극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명시되어있음. 서울시 경제정책실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경제적 분야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고가 필요함.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15건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함)

1. 꾸러미사업의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은 비싸지만 상품의 품질은 뛰어나. 임산부들에게는 양질의 제품이 필요함. 출산 이후에도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 상인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인

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전통시장이 아닌 상인회에 대한 지원으로 전략한 사업은 재검토해야 하며, 예산 지원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회 관리방안 마련 검토 바람.

3.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달빛야시장 등 야시장 지원 예산이 동일함. 푸드트럭 등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기술교육원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려면 의회 동의를 필요한바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5. 마을기업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긴 하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폐지를 건의하기 바람.
6. 신개발 원예기술보급'사업 내에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칭과 사업의 내용이 맞지가 않음.
예산명료성의 원칙에 의거해 세부사업 내용에 맞춰 사업명을 수정해서 명확히 할 것
7.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8. 신한컨소시엄 협약사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시적인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중단이 발생함.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결과 보고 필요.
9.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수단으로서 카카오페이 활용 여부 보고 필요.
10. 서울사랑상품권 협약서상으로 홍보, 배포와 관련된 서비스가 카카오의 역할인지 여부 보고 필요.
11.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관련 토지분할매입 외 추진사항이 없음. 공문 등 여러 가지 정황에 근거하여, 사실상 중단된 사업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낭비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12. 사업규모가 800~1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임에도, 2016년 사업 시행 전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음. 현재까지도 의회에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현황 보고가 필요함.
13.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14. 전태일기념관 운영 재정사업평가 2년연속 '매우 미흡'이라는 이유로 사업비가 5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운영하지 말라는 것인지.
 -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했다면, 시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거나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음. 민간이 행정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행정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함
15.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상 의무규정 그동안의 미조치 사유 및 개선방안 보고 요청

□ 서울시립대학교 : 13건

1. 우수 교수 유치 방안 마련 필요
2. 반값등록금 폐지에는 고등교육법상 제한이 많아, 국가장학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적 제한이 있어 불가능하지 않은지 우려가됨.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도 함께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등록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자금 대출 문제 등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등록금 인상 논의는 부적절함. 상징적으로라도 현행 등록금 제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4.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개설 시 강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양질의 수업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확보를 요청함.
5. 세무학과 교수 징계 등 징계위원회 개최 운영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함.

6.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인지하고 신경 써주기 바람.
7.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적절 수준(20:1 이하)으로 관리가 필요함.
8. 총장의 강의여건 제고를 위한 공약사항 중 전임교원 책임시수 감면은 완료됐으나 강의전념학기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강의여건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람.
9. 교원의 학술지 게재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국내외 학교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되므로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연구력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도서관 평가(3년주기)와 관련하여 내년에 평가가 있으니 20년 평가에서 저조했던 부분에 유념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11. 사회공헌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2. 서울시립대가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주기 바람.
13. 반값등록금이 자퇴 증가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학교 자체의 문제 등 자퇴 증가 원인 분석이 필요함.

서울농수산물공사 : 10건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1. 친환경농산물 납품업체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업체 선정이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사실 여부 확인 바람.
2. 밀키트 판로를 롯데마트 외 시장 내 입점업체 등 판로확대 검토 필요
3.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농가에 도움되고 일반인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해보기 바람.

4. 가락시장e몰 종료 과정을 보며 스마트 마켓 플랫폼의 체계적 개선 및 발전적 운영 필요성 새삼 인지. 소비자 만족 위해 애써주기 바람.
5. 가락몰 4관 강제집행 등 매번 강제집행시 소송에서 승소한 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봄. 이에 대한 대책 요청
6.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관련 실제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7. 2021년도 서울시 안전점검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히 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바람.
8. 최근 영업장소 구분 분리 조치 관련해서 패소하는 등 강서시장 상인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개정 전까지는 법을 지키는 게 타당함. 향후 이런 부분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 필요
9.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분리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음. 기존 연구원 내 공간 재구조화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여 시에 제안하기 바람.
10. 하역노조의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서울연구원 : 10건

1. 올해 대표기획과제가 완료되는 즉시 소관 위원회 및 위원 대상 보고 및 결과를 공유해주기 바람.
2. 대표기획과제 중 'MZ세대 용어'와 관련하여 세대에 맞는 용어에 대한 연구수행을 요청함.
3. 공동연구 수행현황이 저조하므로 국내외 학술기관들과 협력하여 시정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

4.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서울시 각 산하기관들 간 연구협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5. 연구위원들의 학술지 게재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연구원 차원에서 국내외 학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도시재난, 위험 등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관한 지속적 연구를 요청함.
7. 서울연구원 사회공헌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사회적 공헌을 위한 전략 과제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8.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봉사, 성금 기부, 환경보호, 물품 기부 등 국책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함.
9.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발굴하고 타 연구기관 프로그램 사례도 참고하는 등 적합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10. 택시 등 교통수단 관련 연구 진행 시 노동조합, 현장 노동자 등 현장 소통을 통한 연구방법을 채택해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행 요청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원 : 6건

1. 뷰티트레이드쇼 관련해서 기간을 좀 더 길게 운영하고 공간 운영에 대해 더 고민하기 바람.
2. 테스트베드 사업 실증기관 관련해서 수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고졸채용 인원이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4. 서울형 R&D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기 바람.
5. 테스트베드 사업 관련, 구조 일원화 후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6. 단편 애니메이션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7건

1.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ESG경영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2. 개방형직위 채용 등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출연금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신용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5.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사업자대출을 가계 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많지만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7. 최근 급격한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대규모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구상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 10건

1. 부탄에서 외국인 직업훈련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북부에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3.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홍보를 서초, 동작까지 확대하여 실시해주시기 바람.
 - 다양한 채널로 홍보해주시고, 중장년층도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람.
4. 중부기술교육원의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고, 무단결석으로 인한 중도

- 포기자가 많음. 중도포기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및 지속적 참석 유인책 마련을 촉구함.
5. 성과지표가 취업률, 수료율,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중장기적 비전이나 특색을 잘 살린 학과 개설도 필요하므로 이를 검토해주시기 바람.
 6. 일자리정책과는 기술교육원이 상대적 약자이므로 소통의 부재 및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시립대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필요.
 7. 기술교육원 운영은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재단 또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특히, 법인에서 전입금 지원도 없고, 훈련생 교육이나 취업 연계에 법인과 접목되는 부분도 없음. 또한, 각종 비위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찾아보기 어려움.
 8. 서울시와 정책 협의 시, 인력양성 제고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통합적인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올해 모집공고 관련하여 보도자료와 학과개편 이후 조정된 모집정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확인할 것.
 10. 내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학과개설 방향 공유 바람

4. 환경수자원위원회

----- 115건

기후환경본부 : 33건

1.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물청소 외에 먼지억제제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시민환경교육은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니,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가 매우 부진하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하기 바람
4. SR센터 종사자 임금 수준이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득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 운영 중단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철거까지 8년간 동시 운영에 따른 불편 해결을 위한 타협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6.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7.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보조금 상향 등 제도개선 건의, 제조사에 기술 건의 등을 하기 바람.
8. 서울시에서 태양광 발전효율을 높여주는 신기술 태양광 산업 등을 지원하기 바람.
9.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상암동 주민들의 상실감이 큰 만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
10.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건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만큼 집중하여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건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주택정책실과도 긴밀하게 협업하여 녹색 건축, 용적율 관리 등 정책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1. 베란다 태양광 폐업업체 고발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진행현황을 보고해 주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짧으니, 확인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바람.
12. 영세 세탁소를 포함하여 VOCs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원 외 규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환경마일리지 보상품 중 안 쓰는 것들이 있으니 정리 및 간소화가 필요하고,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마일리지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람.

14. 에코마일리지 미사용 시민 독려를 위해 기존 안내문자 내용 변경이나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5. 종량제봉투 원가산정 항목 및 봉투값 인상에 대한 검토하기 바람.
16. GHP(가스열펌프) 사용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도 배출저감장치 설치 지원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에도 설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기 바람.
17. 대형감량기 보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8. 서울시에서 제작한 '음식물 쓰레기 제로' 홍보물 중 깔끔하게 다듬어진 식자재 구매를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별도의 포장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9. 집단급식소 등에서 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 대행업체 환경공무원의 업무 일원화, 용역비의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21.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가 일부 주민에 의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상황 설명 요청. 주민설득과 과정을 충실히 하여 추진하기 바람.
22. 4·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녹색교통구역 대상 일정시간 차량통제, 대중교통 및 따릉이 이용 확대 등 정책 성과가 날 수 있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니, 검토하기 바람.
23. 젤타입 아이스팩 사용·회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전환을 위하여 실태조사, 친환경 인증·규격화 환경부 협의 등을 하기 바람.
24. 헌 옷 수거함 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25. 리엔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치구와 협의를 강화하기 바람.

26. 전기차 충전기 확충이 시급함. 보급량을 늘리는 한편, 보급된 충전기의 고장 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27. 공용차고지 충전시설이 갖추어진 시내버스를 제외한 대형버스, 중형버스의 경우 충전시설이 부족하므로 시관리 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확보하기 바람.
28.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세입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과 기후변화기금 등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9. 광역이 아닌 단독 음식물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등에도 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0. 다회용 컵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재검토하고 현재 회수기만 설치하는 효용성 없는 다회용 컵 회수기 설치사업에 대해 다각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31.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2. 기후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기후환경본부가 적절하게 조치하기 바람.
33.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푸른도시여가국 : 23건

1. 푸른도시여가국에 과거부터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바, 공원녹지분야에서 공무원, 기간제 등 근로자들은 뉘수가 없는 관계이므로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 '26년까지 계획된 공원내 책쉼터에 대해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조성을 완료하기 바람.
3.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의 토지주와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4.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와 관련하여 자투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소

외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동대문구에 신규 조성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해 관련 주민민원 등을 조사하고, 위생적이고 친근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람.
6.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잘 검토하고 중성화사업도 균형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미조성 공원 면적의 1% 밖에 안되는 토지의 보상비가 전체 공원 보상비의 20% 수준이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공평한 녹색복지 혜택을 위한 녹지 확보 등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 정책 선회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75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용산 이촌녹지 매입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이 부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9. '18년 기준 국내 알러지 환자가 8백만명인데 은행나무 등 가로수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매우 많음. 시민들의 알러지 등을 검토하여 가로수 수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0. 한양도성 낙산구간 등 공원 내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치하기 바람.
11. 서울시 모든 공원에 비화학적, 친환경 병해충 방제가 확대 적용되도록 효과 검증(성과관리)를 하기 바람.
12.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제한 민원과 관련하여 팻티켓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반려견 출입제한이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법적근거 포함).
13. 공원 내 CCTV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바람.
14. 서울로 안전난간 높이가 낮아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안

전관을 너무 많이 투입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5.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하여 동일 대상에게 보조금을 중복 지급하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16. 교육을 마친 시민정원사들이 공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녹화사업을 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보조사업의 경우 많은 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산과정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18. 장애인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공원 시설을 보완·정비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길(둘레길 포함) 확대를 검토 바람.
19. 옥상녹화 시행효과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 및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주거지 인접한 도시텃밭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음. 사업 추진시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 반응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방향을 수정하고,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식물원 등 건강, 자연친화적 환경 도시 조성에 묘안을 강구하기 바람.
21. 야생동물(멧돼지) 포획 및 피해보상 등의 사무가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산림녹지업무를 관할하는 서울시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규나 규정,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가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2. 자치구 교부금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람.
23. 서울창포원은 2009년 개관했고, 주변 5천세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노후된 어두운 공원이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 : 8건

1. 외부 업체에서 서울대공원 대형주차장 월 주차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부분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2. 아자(AZA) 실사단 지적 및 반영사항 관련 지속적인 후속 조치·보완을 통해 아자 인증 갱신 목표 이뤄내기 바람.
3. 서울대공원 야구장 주말 개방 운영 시 시민 안전보호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서울대공원 내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 허가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대공원도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하는 등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 기하기 바람.
5. 서울대공원 캠핑장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인 미술관과 협의 및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6. 유사시설인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에 비해 sns, 유튜브 등 구독과 조회수가 매우 낮음. 해외 및 타시설 벤치마킹 및 홍보대사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7.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교육을 통해 책임있는 서울대공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8. 홍보전 계획이나 번식계획은 동물원 관리상태나 시설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하기 바람.

□ 상수도사업본부 : 16건

1. 정수센터 슬러지케익 운반비용이 매년 상승추세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공사장 등 수도계량기 동파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3.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부적합 아리수 음수대 발견으로 아리수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되므로 아리수 음수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4. 아리수와 먹는샘물과의 비교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없어짐. 홈페이지에 다시 추가하여 아리수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5.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배수지 신설 7개소 확충 건설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6. 작년 신설된 본부 안전조사과가 자체 감사기능 등을 확대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7.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 신규 인력 채용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연구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관련하여 임시 부지 위치 선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바람.
9. 서측 정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 파악 및 예산반영 등 차질없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10. 입상활성탄 적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신규 활성탄 수급 확보와 더불어 재생활성탄 연구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동절기 이외에 활성탄 교체 가능 연구 포함).
11. 발암물질 문제로 철거된 음수대 시설은 장애인, 노약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로 교체하기 바람.
12. 아리수 홍보비용 투입 대비 음용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음. 아리수 바로알기 주간 및 아리수의 날 행사 시행, 마트, 은행, 주민센터 등에 리플릿 비치, 대형마트, 지하철 10초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 등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하도급실태 점검시 '22년 지적사항 급증, 변경된 하도급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14. 학교 음수대 옆에 보통 양치대가 설치되어 있음. 학교 아리수 음수대 청결 관리도 부실하여 이용이 안되는 경우도 다수 있음. 양치대 등의 노후 배관을 교체하고 아리수음수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5. 스마트원격검침 시스템 도입비용과 운영비용, 검침인력 감축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16.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에 따른 수돗물 생산에 있어, 상류 지역인 남양주, 구리, 하남시의 책임분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 한강사업본부 : 17건

1. 한강에 축제가 많은데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임에도 행사기획 및 온라인 홍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므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바람.
3. 한강 흡연부스 시범설치는 추경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자전거 속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사고 다발지역 15개소는 한강 홈페이지,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길 바람.
5. 5,000톤 유람선의 실효성, 제각각인 B/C결과, 인프라 비용 등 크루즈 운항에 반하는 지점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유람선과 서울항의 활용도와 시민의 이익 부합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람.
6. 아라뱃길 풍광 등 볼거리가 없음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관광인프라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람.
7.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의 모든 축제 진행 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동패턴과 시대요구 등을 잘 반영하여 안전매뉴얼을 재점검하기 바람.

8. 기 체결된 서울 마리아 협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업체와 맺을 협약서는 서울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람.
9.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 안전에 소홀함 없도록 주의 기울여 주기 바람.
10. ‘한강’ 어플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1. 광나루한강공원에 신규로 조성된 야외 결혼식장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바람.
12.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같이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길 바람.
13.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비용산정을 정확히 하고 분리수거 역시 철저히 하여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4. 2018년 조성 이후 한강조형물은 청소 및 유지관리 수준으로만 진행되고 있음. 오랜 시간 경과한 조형물로 시민들의 지적이 많은 조형물이나 노후 조형물을 정리하고, 추후 조형물 설치나 전시 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기 바람.
15. 서울웨이브아트센터는 유선장임에도 각종 대관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밤늦게까지 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안전문제도 우려됨. 안전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6.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다수 있음. 한강공원 야생동물(뺨, 쥐) 출몰에 따른 관리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예산을 이용/전용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7.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이 아닌 옥외광고를 집행한 것은 실효성 없는 광고집행이라 판단되므로 홍보비 집행에 있어 효과성 있는 광고매체를 선정하기 바람.

□ 서울에너지공사 : 18건

1. 소각열, 하수열 등 다양한 미활용에너지를 확대하여 공사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서울시 태양광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3. LNG가격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미활용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4. GS과워 수열량을 연간 계약용량에 맞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열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5. 서남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서에 사업부지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행정 업무처리 절차를 강화하기 바람.
6. 임직원 외부강의가 과다하므로 외부강의, 자문회의 참석을 공사 차원에서 자제하기 바람.
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떨어져 보임으로 외부교육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8. GS과워 수열 중단에 따른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9.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 관리업체 지원 범위가 경기도로 확대됐는데, 솔라테라스라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10. 감사 차량 운행일지 관리를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11.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당히 낮는데, 평균 점수 도달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12.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용품지원 사업 등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을 노력하기 바람.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교육장을 마련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15. 신규 직원 채용공고 시 근무처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16. 직원 인사기록물을 전자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17. 사업 예산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전용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8. 온실가스 감축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할당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대변인 : 9건**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첨부파일 제출 시 자료 구분을 위한 파일명 기입 바람.
2. 민원은 시장의 시정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점검이 필요함.
3. 서울시 출입기자과 의회 공보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시정 언론의 활발한 홍보가 필요함.
4. 보도와 해명 자료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사실 입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보도 바람.
5. 대변인은 언론사, 출입 기자와 잦은 접촉 및 원활한 소통을 통해 왜곡된 보도 배포 근절을 위해 노력 바람.
6. 해외 홍보 활동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7.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간지(자치발전) 배포의 검토를 요청함.
8. 시정에 대한 부정확 및 왜곡 보도 대응은 물론, 각 정당의 서울시당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함.
9. 정정보도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서울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

□ **홍보기획관 : 13건**

1. 홍보기획관과 TBS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2. 서울시정 해외 홍보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바람.
4.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 및 상담 치료 등 피해자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람.

5. 120다산콜재단 상담업무가 시민들의 편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6. 120다산콜재단 과업처럼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기 바람.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기 바람.
8. 사업 예산 보고 시 사업별로 자세하게 분류하여 보고하기 바람.
9. 요구자료 제출 시 누락된 자료 없이 제출하기 바람.
10. 시정에 있어 약자와의 동행 기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11. 방통위의 TBS 상업광고 관련 결과 수신 시 적극 협조 및 잘못된 사항 적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바람.
12. 시민청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시민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13. 권역별 시민청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문화본부 : 13건

1. 조직개편으로 단장급(기획관)이 사라진바 문화본부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단장급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 현재까지 미납된 채납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람.
3. 작은도서관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조례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검토 요청.
4.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확대 요청.
5. 서울시 미래유산에 세제혜택 같은 지원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람.
6. 문화비축기지가 그 명칭에 맞게 문화향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
7.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절실하게 필요한 문화향유 관련 지원 마련 요청.

8. 왕궁수문장 요원들이 공연을 위한 이동중에도 왕궁수문장이라는 사명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
9.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의 노력 요청.
10.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신경 써주시길 바람.
1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 목록별 개별 전자파일로 구성해주시길 요청.
12. 가칭 이견희 박물관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요청.
13. 문화본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천르네상스 관련 사업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주시기 바람.

□ **관광체육국 : 12건**

1. e스포츠 분야 한국 위상이 아주 높는데, 또다른 한류 문화 선도의 계기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람.
2. [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회원 대상으로 제공하는 개인별 기량 변화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대회 실적을 제출한 것은 결과 지향적인 판단이라 생각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람.
3. 전문체육시설 확충 과정에서 국제 규격에 맞게 잘 설립되도록 꾸준히 확인 바람.
4. [체육회]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관련 법 개정 사항 파악이 늦어 민원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법률·행정적 부분에 신경쓰시길 바람.
5. 관광과 체육이 한 실국에서 다뤄지기엔 관련성이 적고 비효율적이라고 봄. 문화관광 / 체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봄.
6. 2036년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검토하여 내용 공유 바람.
7. 서울시 내 관광특구는 7곳뿐인데, 각 지역의 관광문화를 잘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시길 바람.
8. 노원구 어울림센터 1층 수영장, 지하 볼링장이 위치하여 구조상 누수 우려가 있어 꾸준한 점검 필요함
9. 빅데이터와 같은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심야 버스관광 등 관광자원

개발에 활용 바람.

10. 관광체육국이 주도하는 한강 케이블카 사업 제안 드리며,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 추진 바람.
11. 도시민박 한옥체험 사업 추진 시 개보수 지원 등 전통문화 수호에 보다 적극 힘써주시고, 급변하는 관광 산업 환경을 반영한 한옥 민박업체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코로나 전후를 비교한 자료 추후 보고 바람.
12.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생활체육시설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람.

서울역사박물관 : 8건

1. 중요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중요한 업무이며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기금 조례 통과를 위해 서울역사박물관도 노력하도록 주문.
2. 기관의 수익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중도 포기가 높은바, 기관의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라고 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시기 바람.
3.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 자료에 방문객 현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세분화하여 알려 주시기 바람.
4. 공공기관에도 ESG가 요구되는바, 전시등에도 친환경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5. 소속 직원들이 외부강의 상한선을 준수해주시도록 요청.
6. 화재소화시스템을 인체에 무해하며 소장품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플루오르화 케톤 계열로 된 소화시스템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7. 스탬프 투어가 학생들의 방학 숙제로도 활용되도록 방학 시기를 더욱 겨냥해보기 바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
8. 찾아가는 박물관이 자치구별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 서울시립미술관 : 6건

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창작자들이 신규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을 자치구 구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서울시립미술관 행사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단순한 공지 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길 요청.
4. 공공기관에도 ESG가 요구되는바, 전시등에도 친환경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5. 야외설치작품들이 설치나 철거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
6. 우리나라 실용미술 외에도 종합예술 발전을 위해서 미술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세종문화회관 : 9건

1. 광화문광장 재개장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한 콘셉트 개발과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2. 서울시향 콘서트홀이 세종문화회관에 들어오게 된다면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의 공연 기회가 줄어들 우려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함.
3. 횡령, 직원 협박 등의 문제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는데, 적극적인 감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대책 수립 및 개선이 필요함.
4. 기부금은 후원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주길 당부드립니다.
5. 징계 회부 대상이 주로 장기근속자인 것을 보아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개선 부탁드립니다.
6. 예술단의 조직 내 역할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조직 방향성(유스오케스트라와 청소년 국악단 등 관련)에 대한 상황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7. 내부비리 등 조직 전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조정과 내부 비리에 대한 세세하고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8. 세종문화회관은 기부나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통한 자원 확보에 힘써주길 바람.
9. 법정 의무교육 등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활발히 하고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서울시립교향악단 : 5건

1. 채용 공고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채용 공고 노출 확대가 필요함.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류 및 별도자료 파일명 기입 등 자료 제출에 유의 바람.
3. 서울시향 공무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가 비정상적으로 큼. 채용 비율 조정을 고려하길 바람.
4. 직접 검색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콘텐츠 노출 확대가 필요함.
5. 서울시향 민원 창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요청함.

서울문화재단 : 7건

1. 재단발전위원회 규정이 실무와 맞지 않는 점 개선 요청.
2.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예방 대책 이외의 법적 대책 마련 필요.
3. 조직개편 관련하여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요청.
4. 기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람.
5. 생활밀착형 소극장들이 재정상 열악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6. 노조와 관계에 있어서 좋은 협력사례는 백서로 작성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요청.

7. 노조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람.

서울관광재단 : 7건

1. 디스커버 서울패스 판매 부진, 특별한 대안을 계획하고 제시 바람.
2. 관광종사자 교육을 꼭 외부인사로 진행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내부 전문 직원들의 역량 활용 고려 바람.
3. 관광 사업 분석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술 적극 활용 바람.
4. 도심 등산 관광센터 개설지 신규 선정 시, 지역별 공평한 배분을 위해 관악산, 아차산, 청계산 등 남부 지역에도 적극 추진 바람.
5. 유명인 위주의 홍보를 선호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을 다른 콘셉트로 운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6. 추후 업무보고 시 대행 업무는 '대행' 표시하여주기 바람.
7. 홍보 업체 선정 시, 실력있는 업체 선정하여 주기 바람.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3건

1. 지속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TBS가 공영방송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당초 재단 설립 시 10년을 바라보고 기획한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TBS 활성화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외국인 청취자들을 위한 eFM 역할 증대에 힘쓰기 바람.

120다산콜재단 : 9건

1. 현재 서비스 중인 외국어 말고도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도 있음. 차후 서비스 개선 시 이러한 분들을 고려해주길 바람.
2. 민원인의 폭언 및 성희롱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실질적 법적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타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함.

3. 악성민원 유형 및 피해직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함.
4. 성과관리제도가 승진이나 성과급 제공을 위한 용도만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길 바람.
5. 노조 파업 관련하여 협상 시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람.
6. 직원들의 감정 노동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인입롤 대비 응대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실질적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람.
7. 자기계발 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한 명도 없음. 조직의 경직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지며 직원 복지에 신경쓰길 바람.
8. 세출예산 상 예비비를 사업예산과 일반관리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기재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자료부터는 개선 바람.
9. 이월금과 결산잉여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단어 사용 바람.

6. 보건복지위원회

----- 107건

여성가족정책실 : 13건

1. 아동수가 급감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수도 감소하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폐지 시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조정 등 중장기적 조정계획 마련하고, 노후화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도 함께 진행할 것
2.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인상이 필요함. 특별활동비 상한선 결정사항을 자치구에 위임할 방법을 검토하거나, 관련 상위법 개정을 건의할 것
3. 1인가구 수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정책의 고도화, 세밀화 필요하고, 1인가구를 위한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바람

4. 동주민센터 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으러 온 1인가구 시민에게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통해 홍보물 배부 바람
5.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직원들의 트라우마 해소 및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위해 노력 당부
6.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중 세금을 내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계를 파악해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자녀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7. 여성경제활동 분야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바구니에 담아 주기 바람
 - 정책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디자인해 주기 바람
8.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 구축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 필요
 - 공개입찰, 공급업체 자치구 설명, 지급물품 중복 등 문제
9.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를 여성 일자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
10. 성평등기금 사업비 8억 8천만원 중 공모사업이 7억9,300만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음. 단체에 치중하는 것은 사업을 쉽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사회활동 시민단체의 경우 운동성이 강해 일반시민과 괴리되고 현재의 사회분위기에서 젠더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 요망
11. 아동복지센터 유기아동 아동수당 관련 씨앗통장 관리 철저
12. 서울시 저출산대책 컨트롤타워 필요
 - 정책, 조직 재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하기 바람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한 곳에서 집중하여 추진되어야 함
 - 서울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등 통합적 해결 체계 마련 필요
13.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통계청) 산후조리의 선호장소 중 78.1%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함. 필요성에 역점을 두어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문서로 보고해 주기 바람

□ 여성가족재단 : 4건

1. 여성가족정책 싱크탱크로서 재단의 역할 강화 및 정체성 제고 방안 마련
2. 우리나라에서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하기 어려운 데, 여성 인재들이 창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고도화해주기 바람
3. 스페이스 살림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설계의 전문성이 떨어짐. 여성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MOU를 맺는 등 연계 방안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4. 재단의 역할 및 정체성 제고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3건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자립지원단)

<서부여성발전센터>

1. 21년도 직원 이직이 11명중 8명, 이직률이 72퍼센트임. 센터장 이직 전후로 이직한 사람이 7명인데 문제 있는거 아닌지 확인 필요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2. 법적분쟁 전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활동임. 중재자의 자격을 서울시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서울시 대리자로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성의껏 대하는 태도로 도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직원 교육 강화 필요
3. 직장맘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권리구제 건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권리구제 건수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과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의 지원으로 신뢰자본 구축 필요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 4. 상근노무사 이직률이 높는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서울시 서남권·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 5. 법률지원 기능의 중복성 지적

- 복지재단, 각종 법률구조 기관, 노동청 지부, 노동상담센터 등의 노무상담 및 법률지원 기능과 중복되어 보임. 서울시 예산으로 반드시 별도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근거 확립 필요

- 6. 중복업무에 대한 통합적 기능 재편 지적

-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타 여성 관련시설들과의 중복업무 검토해 기능 통합 등 필요

- 7. 온라인 상담 비율이 월등히 높아 센터 대면방문의 비율이 매우 낮음, 센터별 기능 특화가 없으면 센터 기능 통합 필요

- 8. 직원 역량강화 교육 관련

- 직장맘들을 위한 상담 역량보다는 노무사협회에서 진행할만한 민간에서 영업을 위해 필요한 노무사 직무교육에 오히려 초점을 둔 교육 진행에 대한 개선 필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 9. 홍보방법의 다양화

- 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듦
-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보다 연령층별로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다양화 필요

- 10. 콘텐츠와 동영상의 구체성과 완성도가 떨어지고, 예산 대비 홍보 효과성 의심스러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콘텐츠에 담고, 양성평등의 저변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11.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가

해부모에 대한 재학대 방지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 검토할 것

12. 보호아동 수 20여 명인데 종사자 수가 더 많음. 보호아동수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및 더 필요한 곳에 예산 재배정 검토 필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13. 자립준비청년들이 SH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적정 수준의 임대료 검토 필요

□ 복지정책실 : 15건

1. 사회복지사업 등 예산 편성 시 정치적 이념보다는 시민의 삶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기 바람.
2. 쪽방 '동행식당 운영' 관련하여 식당 주인의 불친절한 응대, 차별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각 층 복도 설치로 냉기가 각 방까지 전달되지 않고, 주인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잘 들어주지 않는 등 무용지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객관적 지표에 의한 주민 직접 평가 프로그램(연구용역)을 제안함
3.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 공공요양시설의 경우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추진 요양시설의 경우 주민의 혐오·기피 민원 등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문제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률이 매우 높음. 소득·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폐지와 같은 기준 변경 시 안내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5. 추정 요청당시 사업계획서 상 일정준수와 자문단 구성·회의 진행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안심소득 수급자의 소득변동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안심소득시범사업을 잘 설계해주시기 바람. 대상자 확대도 필요

7. AI 안부확인서비스가 어떠한 환경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스마트플러그나 우리 동네돌봄단보다 최적의 효율을 보일 수 있을지 찾아내어 사업을 설계하기 바람
8.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대면 이용률은 감소하고 온라인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텐데 보조금은 동일한 액수가 지원되었음. 보조금 집행에 대해 신경써주기 바람
9. 희망통장의 발행 목적을 생각해서 그 기준에 대해 제고 필요
10. 탈시설 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책효과가 어떤지 파악해야 하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1. 거주시설 점검시, 제대로 점검해서 시설에서 지내고 싶은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 필요
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복지플래너 1인당 일평균 방문건수는 1건 정도인데 비해 사례관리 통합회의와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는 몇 백건(동 단위) 정도 됨. 회의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정책에 반영될 만한 유효한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의문이 듦. 해당 사업 및 예산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개선 필요
13.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긴급돌봄SOS, 우리동네돌봄단 등 위기가구 발굴사업의 경우 중복성, 투입되는 인건비 과다, 투입인력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가 있음.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하는 방안 검토해 볼 것
14. 노숙인을 위한 예산과 관련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음
반면, 노인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재학대율 높지만 담당기관은 4개 권역당 한 곳에 불과하고 각각의 위탁기관이 과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실종아동의 숫자도 노숙인 숫자와 비슷함에도 노숙인 관련 정책에 예산 쏠림현상이 오랜 기간 정착되어 왔음. 조정을 통해 다양한 대상에 정책과 예산이 재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노인과 청년층이 어려워짐. 안심소득 대상자 추가 설계 시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가중치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 볼 것

□ 복지 관련 시설 : 13건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장애인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복지 관련 시설 전체>

1. 기관에서 고령자가 자원 봉사하는 경우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전체>

2.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인들이 힘들어지고,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시장진입형이 많아야 일정하게 소득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내년에 시장이 나빠지면 노인들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기 더 어려워짐. 어렵게 잡은 일자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
3. 1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늘어날 수 있는 환경임.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중랑구, 강서구, 강북구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남. 이 지역의 노인복지관 운영 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4. 시민건강국의 손목닥터9988 사업은 그 플랫폼으로 시민을 끌어들여 건강관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워치 사업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과 손목닥터9988 사업을 연동해서 추진할 경우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와 고독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임. 사업 연동 검토 바람
5.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어울림 인형극은 인식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임. 동영상 찍어 SNS에 게시해주면 인식개선 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홍보 필요
6.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안하여 진행이 필요함. '고객의 니즈를 감안하여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가 않음. 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음. 어르신이 이해하기 좋은 국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동일한 언어로 소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7.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고용구조를 보임.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해서 제대로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8.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고, 노인학대와 직장내 괴롭힘이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회부되고 있으나 자동적으로 정화되지 않고 있음. 문제해결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 구성원이 협동조합원이라서 객관적 판단과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에 대비하여 수중재활센터 이용자에게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음.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조치할 것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0.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시설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의무채용을 안하는 기관이 많으며, 출자출연기관도 의무고용률 못 채운 곳이 있음. 장애인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노력 필요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11. 허브기능을 하는 (보조기기)광역센터를 만들고 교육평가, 홍보 등 중요한 역할 수행 필요
12. 센터장이 재활기기, 보조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과의 협력관계 유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위해 장애인이나 재활복지 전문가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분야 전문가와 협업 필요
13. AAC기기는 엄밀히 따지면 어플이 깔린 태블릿 PC일 뿐인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지 의문임. 보조기기 품목별 고시 때문에 가격이 비싼건지? 커뮤니티 톡 등 잘 살펴보면 고가 기기 구입 없이도 보편화적 기기 사용 필요

시민건강국 : 23건

1. 정신건강과는 담당부서로서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개소 이후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였는지 가시적 성과결과가 애매모호한데, 소프트웨어적인 점검,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상화 개선 노력을 요구함
2.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 지연과 반복적인 예산집행 부진·사고이월, 사전절차 이행 미흡 등 개선 필요
3.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법률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음. 법률이 모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별로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점검 필요
4. 간호인력 처우개선 관련 결원문제 조속 해결 요청

5. 서울시 보급 자동심장충격기 9,801개인데, 심야 가능 개수는? 이태원 사고 근처 보급 대수 반경 1km 안에서 4대로, 국비 예산 확충에도 신경 쓸 것. 부산은 편의점 업체와 협약해서 편의점에 설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검토 필요
6. 밴드 보급이 아니라 플랫폼 구축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밴드 구입은 바우처 지원 형식의 제도로 전면 개편 하고, 플랫폼 연동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 필요
7. 스마트밴드 관련 상담에 대한 효율적 개편 요청
8. 스마트밴드 추가 구입 및 배부계획 등 방침이 늦어진 데 대한 지적
9. 예산 불용에 대한 검토 필요
10. 스마트밴드 적정 예산 재검토 필요
11. 스마트밴드 건적이 5만원에 대한 검토 필요
12. 스마트밴드 2차 사업 참여자 모집 시 자치구별 분포도 고려하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자치구(노원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에 더 중점을 두기 바람
13. 스마트밴드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월되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속 사업으로 하게 되면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불용,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4. 스마트밴드 사업의 경제적 효과, 비용편익에 관하여 의회에 대한 설득이 부족 한데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
15. 스마트밴드 회수에 낭비되는 세금이 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신체 활동 우수자에게는 신체활동 용품이나 포인트, 지역화폐 등 보상제공이 가능하므로, 스마트밴드 사용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포인트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스마트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관리와 관련하여 초기 알코올중독자, 초기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기관 필요한데, 현재는 시설이 부족함. 마약 위험성 고려하여 시립병원 활용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17. 스마트밴드 관련 시스템 수용인원과 안정성 고려 필요
18.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참신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특징점이 없음. 시민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와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함.

19. 정신건강통합센터의 사업비 집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하며(지역복지사업: 1.1%, 당사자 및 가족지원 사업: 6.3%),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의심스러움. 정신건강통합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20. 정신건강통합센터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내역에 총액만 기록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도 타업체에 비해 저렴하다고만 기록하여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물품 구입 내역과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정확히 기입할 필요가 있음. 위탁기관인 정신건강통합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21. 보건소에 1억원 상당의 골밀도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9월 까지 25개 자치구 월평균 검사 건수는 76건 정도에 불과함.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서,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함. 적극적 홍보와 안내로 검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2.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서울 건강온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사용 절차를 간편화하고,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할 필요가 있음.
23. 손목닥터의 소득수준별 건강불평등 해소 기여 못함에 의문이 있음. 장기적 건강 보장에 타당성 증명이 우선 필요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내구연한 초과한 검사장비가 다수 있고, 각종 평가와 감사에서 장비 점검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검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뢰도 높은 장비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장비의 내구연한 등 전반적 관리방안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2. 최근 한강시민공원과 양재천에서 뱀이 자주 출몰하는데, 서울 도시생태계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할 것.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4건

1. 공공보건의료재단 의료장비 통합 구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재단이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보는데,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사업 활성화 연구 관련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건강돌봄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고안하길 요청
3. 시립병원 의사, 간호사 확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바람
4. 재단 10년사를 보니, 연구결과물이 너무 추상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함.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8건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축령정신병원)

<서울의료원>

1. 서울의료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선형가속기 도입' 관련 투자심사에서 안전상 우려 및 장기계획 미수립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은 소관 부서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를 소홀히 한 것임. 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준비 철저히 하여 방사선과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2. 감정노동보호위원회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 위원이 1~2명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3. 서울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 신설 관련 꼼꼼한 업무추진 요함

<은평병원>

4. 은평병원 내원환자 감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홍보 강화 필요
5. 은평병원에서 직원들이 폭력을 당한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대책 마련 필요
6. 은평병원 환자 대상 격리·강박 남용 우려가 있으니 이와 관련한 대책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동부병원>

7. 시립병원 장애인 고용비율 개선 관련 동부병원 고용률이 가장 낮으므로, 장애인 고용비율 개선에 특별히 신경써 주길 바람

<고양정신병원>

8. 고양정신병원 기능보강을 위한 내년 예산 설계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9. 옥상의 누수 문제는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 설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라매병원>

10. 영상의학과 촬영실 탈의 공간 개선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여 대책 마련 필요
11.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검토해 보기 바람
12. 병상가동률 제고,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경영 정상화에 힘써줄 것
13.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산정 기준에 맞게 적정한지 검토하고, 환자수 증대를 위하여 병원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14.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의 안정적 안착 및 확대를 위해 홍보를 활성화 하고 인력충원을 검토해 볼 것
15.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높으므로, 신규 간호사들이 실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직률 감소를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16. 마케팅 리서치를 통한 병원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및 발전 방향성 모색이 필요
17.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후 장비의 적절한 교체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 노후장비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것

<축령정신병원>

18. 입원환자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선거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권 보장을 위해 주의해 주기 바람

건강 관련 기관(정신건강통합센터) : 2건

<정신건강통합센터>

1.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로드맵이 부재한데, 센터는 각 자치구 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 왜 시립으로 센터를 만들었는지(미션)를 이해하고, 그 역할을 다해주기 바라며, 사회복지협동조합 ‘공간과 연대’와 같이 전문성이 결여된 법인이 아닌, 전문성 있는 시립병원들과의 연계도 노력해주시기 바람
2. 예산집행률 저조, 이용자 특성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회계관리 부실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당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전문성 높이기 바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32건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7건

1. 주최자 없는 시민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 위원이 발의한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2.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발의된 안전 관련 조례 2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할 것.
3.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총괄실장은 시장의 공관 사용을 건의할 것.
4.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5.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작하는 각 지역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검토 바람.
6. 안전총괄실은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공간정보 담당관에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 바, 각 시스템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7.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사 도로에 핸드레일 설치와 같은 보행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물순환안전국 : 12건

1. 개화 육갑문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보완 대책 마련해주기 바람.
2. 현재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 업무추진사항 및 보도 자료를 최소 1~2일 전에 미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람.
3. 물재생센터 노후장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타 사업 대비 후순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난지물재생센터의 노후화 및 악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주기 바람.
4.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기획, 설계, 공사, 운영 단계별 분석을 통해 3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5. 대심도사업TF팀에 전문가 그룹을 추가적으로 구성해줄 것.
6. 직원 사기진작 및 안전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물재생센터 사택 정비를 추진해줄 것.
7. 물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기 근무 중인 직원, 시·구 물 관련 직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8.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 관람을 활성화해주기 바람.
9. 도림천 인접 자치구별 치수 분야, 수목식재 분야 예산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에 공평한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0.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슬러지 소각시설 노후화 문제, 주변 택지지구 도로를 통해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운반차량의 진·출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

해주기 바람.

11. 현재, 물재생센터 부지 내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체 시설물 이용 신청을 유선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행해주기 바람.
12. 복개하천인 봉천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부족 및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연장이 절대 발생 되지 않도록 할 것.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2건

1.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없으나 약물 관련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민 보건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류수의 약물 농도를 줄일 수 있는 수처리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2.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 관람을 활성화해주기 바람.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5건

1.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에서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유지보수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함바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2. 사토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사토운반량의 정확한 산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송장관리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것.
3. 다수의 공사장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함에 따라 간접비 또한 증액되어 시공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간접비 증액은 불가피한 것임에 따라 소송이 아닌 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4. 부실별점부과위원회와 별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형평성 및 객

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 교수 등의 외부위원이 아닌 타 지자체 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정체지역인 테헤란로(역삼역~삼성역)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도록 건의 바람.

□ 기술심사담당관 : 6건

1.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의 미이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그 사유가 교육시간 조정 등에 따른 것인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공기적정성심의 관련 상위법이 개정된지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된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3. 서울시 건설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표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건설인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심의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 중 심의개최 연락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주기 바람.
5. 계약금액순회점검반을 4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누락되는 기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주기 바람.
6. 친환경제품의 도입을 장려해야 하므로, 각종 위원회 심의평가 시 친환경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 등을 강구해주기 바람.

8. 주택공간위원회

----- 105건

□ 주택정책실 : 29건

1.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서울에 집중되는데 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의 전세가

격 수준에 맞게 올릴 필요가 있음

2. 장위뉴타운 13구역 정비구역 해제되었는데 기존 계획했던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을 고민해주시기 바람.
3. 리모델링 사업의 내력벽 철거문제가 있는데 안전성 문제등 서울시가 정확한 허용기준을 가지고 운용할 필요가 있음. (수직증축 사업 몇 건인지 확인 요망)
4. 재개발 해제지역의 사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자치구·동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월별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
6.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사전동의를 얻고, 주민호응이 높은 사업지는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7. 타워팰리스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영구임대주택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8. 신내 콤팩트시티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 보고해주시기 바람
9.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관련 자치구 조례 재개정 독려 필요하고, 자치구별 예산편성액에서 교부잔액 있는바, 보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해주시기 바람
10. 주거환경개선과의 팀명이 1~4팀으로 시민들이 업무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팀명 개선 필요
11.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12.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것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신규매입 활용에 대한 방안과 임대수입으로 생계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등 철저한 준비 필요

13. 지원주택 공급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갖춘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4. 34개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단지들도 시설 노후가 심각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분들의 휴게공간 등이 매우 열악함. 34개 재정비사업 대상 외의 노후된 임대주택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5. 임대주택 유형을 폭넓게 만들어서 임대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16. 앵커시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관리가 안되어서 운영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친화형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주시기 바람
17.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바람
18. '23년 정부의 공공임대사업 예산은 대폭 줄었으나, 서울시는 시민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임대 사업 예산을 많이 확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9. 증산 공공주택지구 등 수년 전부터 계획했던 공공주택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되며, 공공주택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예산, SH재정 문제 등을 고려한 대책 필요
20. 쪽방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해야겠지만, 쪽방촌의 건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검토 필요
21.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음.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 완화 필요(토지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22. 재개발·재건축 사업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처리기한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2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 고금리 상황에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이차지원(이차보전) 상향,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고려해주시기 바람
24.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시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가능여부를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필요
25. 정부가 분양을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됨
26. 탐차로 생계유지하는 거주민을 위해 아파트내 탐차 주차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길 바람
27.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한 만큼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서울시의 정책 전환 및 대응 마련 필요
28. 서울의 고령인구는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 일부 지역에 밀집해 서울시 평균의 약 1.5배에 달하는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로당, 공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므로 보행환경 개선, 노인 관련 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9. 공유지가 부족한 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공개공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재를 넘어 지역 행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미래공간기획관 : 20건

1. 신이문기지창을 복합개발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주시고, 현장 방문해서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는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수서차량기지 개발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므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람.
3. 수서차량기지 이전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입체화에 따른 문제점 해

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람

4.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바람
5. 중랑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 시급한 상황이므로 서둘러 진행해주시기 바람
6. 가칭 이견회 기증관 설립을 위한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7.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의 사업시행자(HDC현산)의 행정처분은 언제쯤 예상되는지?,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므로 확인후 조치바람.
8. 사전협상제도는 모범적인 제도로 홈페이지 상담창구도 만들었으니, 홍보도 많이 하고, 협상기간을 단축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9. 옛 성동구치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보상 차원에서 주민편의시설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행정을 위한 시설보다는 문화체육시설 등 체육관을 건립할 것
10. 당초 舊)서울의료원 철거비용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실시할 것
1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시의회에 업무보고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바람
12. 2020년도 마을건축가 MP수당이 2개의 자료가 2억3천8백만원과 2억4천만원으로 서로 다른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료 제출시 오류가 없도록 할 것
13. 마을건축가 활동내역에 비해 수당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마을지도 발굴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려 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자치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14.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이 중단되며 서울시가 4년간 행정력을 들여 수행한 10여 개 용역의 성과물을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음.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시에는 사전에 사업성

을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사업 재추진 시
용역결과를 활용할 것

15. 노들섬 백년다리와 흑석고가가 연계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흑석고가의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기 바람
16. 수도자재관리센터 인공테크 조성 계획이 향후 올림픽대로 및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을 반영한 것인지? 장기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7. 노들섬 방문현황 자료에 오류가 많으니 방문객수 및 인기 프로그램의
정확한 통계를 반영하여 명품섬이 되도록 관련 프로그램이나 규모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람
18.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후 문화본부에서 민간위탁 운영 관련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꼼꼼히 살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
19.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서울시 모든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를 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므로 담당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는 것도 대안
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20. 그간 잘 운영되어 타 지자체로 확산된 마을건축가 제도를 공공건축가로 통합
하는 배경에 '마을'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디지털정책관 : 26건

1. 메타버스 서울 내년도 예산이 기본계획 대비 대폭 축소되었음. 예산이 더 투
입되더라도 새로운 시민 참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셉을 잘 잡고 추
진해주길 바람.
2. 어르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디지털 기술 활용 맞춤형 진로 교육 연구 당부
3.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 중 행정서비스 키오스크가 가장 어
렵다는 결과가 있음. 행정 키오스크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바꿔주길 바람.
4. 행정관청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이 많으므로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5. 디지털정책관은 한쪽에서는 시스템 고도화, 한쪽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챙겨야 하는 양면적인 상황에 처해있으나, 항상 이를 고려해서 집행해 주기 바람.
6. 지난 9월 오픈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잘 만들어 놓고도 이번 이태원 헬러원참사에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안전을 지키는 건 빅데이터, AI 기술이 아니라 대응 체계임.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말고 경찰·소방 등에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대응체계 매뉴얼 마련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 바람.
7. 2022년 12월 실시할 만족도 조사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기간을 특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 바람
8. 직원용 업무챗봇에서 후생복지, 인사·복무, 재무·계약 등에서 계약분야는 답변 정확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9. 행정포털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욕설 및 저속한 표현이 늘어났는데 반복 게시자들에 대한 게시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게시판 운영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행정포털 접근제한 관련 의회사무처 직위해제자들은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접근제한이 되는지? 직위해제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 주기 바람
11. 정보통신공사업에서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내거나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징수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므로 공사업체들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2. 아파트 월패드 해킹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주기 바람
13.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가 21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임

14. 공공와이파이사업의 추진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 등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보임
15. 에스플렉스센터 무단점유 및 임대료 감면 관련 코로나 등으로 임차인들이 어려운만큼 냉혹한 법집행보다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기 바라며 임대료 감면은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 바람
16. 비상발전기는 실제 사용시간이 적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지 검토하여 보고 바람
17. 과기부에서 민간IDC만 소방점검을 실시하므로 공공IDC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18. 데이터 백업과 이중화 조치를 통한 안전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19. 향후 기록물 보존공간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기록원 내 종이 기록 서고 면적의 1/2 규모의 역사박물관 수장고(1,082㎡) 입주 유지가 타당한지 재검토 바람
20. 2023년 메타버스 서울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 자가망 활용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전향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22.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상황보고를 철저히 할수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4조2교대라는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3.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24. 노후 CCTV를 교체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지능형 CCTV 설치 등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성능과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5. 데이터센터는 이원화(분산)가 필요하고 지방에 구축 시 여러 가지 정부 인센티브 등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26. '21년 동파 관련 안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최종 완료 시 별도 보고 바람

□ 서울주택도시공사 : 29건

1.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서울에 집중되는데 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의 전세가 격 수준에 맞게 올릴 필요가 있음
2. 장위뉴타운 13구역 정비구역 해제되었는데 기존 계획했던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을 고민해주시기 바람.
3. 리모델링 사업의 내력벽 철거문제가 있는데 안전성 문제등 서울시가 정확한 허용기준을 가지고 운용할 필요가 있음. (수직증축 사업 몇 건인지 확인 요망)
4. 재개발 해제지역의 사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자치구·동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월별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
6.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사전동의를 얻고, 주민호응이 높은 사업지는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7. 타워팰리스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영구임대주택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8. 신내 콤팩트시티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 보고해주시기 바람
9.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관련 자치구 조례 재개정 독려 필요하고, 자치구별 예

산편성액에서 교부잔액 있는 바, 보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해주기 바람

10. 주거환경개선과의 팀명이 1~4팀으로 시민들이 업무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팀명개선 필요
11.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12.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것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신규매입 활용에 대한 방안과 임대수입으로 생계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등 철저한 준비 필요
13. 지원주택 공급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4. 34개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단지들도 시설 노후가 심각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분들의 휴게공간 등이 매우 열악함. 34개 재정비사업 대상 외의 노후된 임대주택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5. 임대주택 유형을 폭넓게 만들어서 임대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람
16. 앵커시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관리가 안되어서 운영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친화형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람
17.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바람
18. '23년 정부의 공공임대사업 예산은 대폭 줄었으나, 서울시는 시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 사업 예산을 많이 확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9. 증산 공공주택지구 등 수년 전부터 계획했던 공공주택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되며, 공공주택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예산, SH재정 문제 등을 고려한 대책 필요
20. 쪽방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해야겠지만, 쪽방촌의 건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검토 필요
21.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음.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 완화 필요(토지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22. 재개발·재건축 사업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처리기한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 고금리 상황에 사업추진이 어렵는데 이차지원(이차보전) 상향,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고려해주기 바람
24.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시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가능여부를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필요
25. 정부가 분양을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됨
26. 탑차로 생계유지하는 거주민을 위해 아파트내 탑차 주차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길 바람
27.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한 만큼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서울시의 정책 전환 및 대응 마련 필요
28. 서울의 고령인구는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 일부 지역에 밀집해 서울시 평균의 약 1.5배에 달하는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로당, 공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므로 보행환경 개선, 노인 관련 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9. 공유지가 부족한 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공개공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

재를 넘어 지역 행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서울디지털재단 : 11건

1. '19년, '20년 최하위에서 최근에는 개선점을 보였지만,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 검토 필요
2.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함
3. 1,2급 채용시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전반적인 채용제도 점검이 필요함
4. 공공부문에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적극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
5.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어르신 정서케어 사업 결과에 대해 추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7. 디지털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승진, 급여 등 적절한 대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 규모를 확장하고 디지털 정책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8. 어디나지원단은 1:1 노노케어에만 한정하지 말고,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범위 확대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9. 다른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직원이 주축이 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10. 디지털도우미를 직접 찾아 서비스를 받거나,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항상 상주하는 등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개선해주기 바람.
11. 어르신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노노케어도 의미가 있으나 디지털교육 활성화 및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도시계획국 : 12건

1. 지역주민의 관심사인 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2. 한강 중심의 활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선유도~난지도간 곤돌라 조성등 시설을 통하여 수변을 활용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도입 필요
3.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진행 시, 선셋 명소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제반 여건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4.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확정 전에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기 바람, 특히 의회 사전보고를 통한 의견청취 필요
5.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미래전략 TF의 운영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람
6. 철도 지하화 사업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안전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혹시나 사고 발생 시에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 연계 방안 등도 고려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람
7. 현재 진행 중인 용도지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법 및 조례 등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8. 상업지역 물량배정 후에도 강남권과 강북권 간 상업지역 면적 차이가 나는데 강북권에 유보물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하며, 균형발전본부와 협의를 통해 균형발전성과지표 상 상업지역 지정 및 개발밀도를 반영하고, 시책사업(역세권사업) 뿐만 아닌 자치구 지역발전을 위한 상업지역 지정을 검토바람
9. 신속통합기획 공모절차가 분야별 부서가 달라 사업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총괄부

서인 신속통합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0. 2004년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13층 이상 건물 동수가 1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종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임의 지정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3종 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을 고민해주시기 바람
11.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투자대비 경제성, 상부공간 활용성, 기술적 가능성 등에 의문이 있음. 낭만적 접근보다는 치밀한 고민을 통해 정책추진 검토가 필요함
12.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수립 시, 추진 방향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체계 개선 필요

□ 균형발전본부 : 6건

1. 현재까지 추진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여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음.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마련을 위해 관련 토론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정비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물리적 정비 내용을 강화한 2세대 도시재생 사업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백서 발간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서울시 공동과세 실시 초기에는 재정격차가 완화되었으나 '17년부터 격차가 커지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통해 자치구 자주재원 확대 필요하고 균형발전 이행과제에 자치구 자주재원 균형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야 함
4. 서울아레나 사업이 고양시의 CJ아레나 사업에 비하여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지역경제권 활성화 등 경쟁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5. 잠실스포츠·MICE 민자사업의 사례와 같이, 목동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 및 목동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6. 광화문광장 재개장 후, 광장사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 촉구. 필요한 경우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

□ 디자인정책관 : 10건

1.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미술작품 프로젝트 추진 시 청년작가들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 바람
2. 도시재생사업으로 담장 그리기, 화단 조성, 골목길 정비 등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효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사업효과는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다른 방향으로의 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자체 경관계획이 없는 자치구도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람
4. LED 교체 사업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앞으로 더 서울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함. 앞으로 예산 심의 때 적극적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5.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위탁했던 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기 바람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며,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의 디자인재단으로 이관이 차질 없도록 살펴 보기 바람
7.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및 기획부서에 대해서도 디자인 관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8. 예산에 비하여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간소하므로 다음번 보고 때는 자세하게 사업을 보고해 주시길 바람
9.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의 민간위탁 종합평가 관련하여 센터 재위탁 여부에 대한 오해 소지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 이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해주시길 바람

10. 자치구별로 스마트보안등의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7건

1. 약자 지원 방향이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차등 지원 및 선별적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추진할 것
2. 약자동행지수 관련 각 부서가 지표 숫자에 집중하는 성과주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추진단의 정책방향은 사각지대 발굴과 실질적 지원 강화에 집중할 것
4.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및 사업계획 컨설팅 등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
5. 약자동행지수 개발 시 약자를 규정하는 정의에 대해 신중하고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식으로 '동행'을 할 것인지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 서울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 필요
6. 자치구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할 것
7. 약자동행 사업 우선 배정 등급 심의가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할 것

□ 미래청년기획단 : 3건

1. 서울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는 청년정책이 부재함. 일부 청년만 지원하는 청년정책을 통합하거나 줄이더라도, 서울청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 건의
2. 청년친화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추천받은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그 외 청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 위촉될 수 있도록 바람
3. 청년서울이 시장의 공약 달성 위주나 관주도의 형식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람

서울디자인재단 : 4건

1. 해외연수를 해마다 다섯 번씩 나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출장 건 관련 여행사 정보 보완 후 자료 보고 바람
2. DDP운영의 주목적에서 탈피해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바람
3. DDP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해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홍보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운영해주길 바람
4.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설립목적에 맞게 젊은 디자이너들 육성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 바람

10. 교통위원회

----- 66건

도시교통실 : 33건

1. 금천구 독산초, 두산초 부근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음. 안전펜스 설치 검토
2. 신안산선 석수역에 출입구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와 협조해주기 바람
3.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구청 심의에서 대부분 부결되고, '11년 마을버스 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마을버스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4. 택시요금 인상분이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주기 바람
5. 고사위기에 처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6. 티머니는 행감 수감대상이 아닌데 서울시가 티머니에 지분이 있는데 교통위가 현황을 볼 필요가 있음.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람. 독점적 지위를

앞으로도 인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

7. 복수의 버스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의 연봉제한 등 윤리성 강화
8. 친인척간의 버스회사 임직원의 연봉책정의 제한
9.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오탈자 주의
10.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회의실 배치 제외
11. 교통위원회 위원 지역구와 관련 사업은 사전 보고 바람
12. 민자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방안 강구
13. 9호선 사장 임원선정시 교통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것
14. 마을버스 보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원 검토
15. 마을버스 지선순환제도와 같은 차등요금제 검토
16. 연세로 상권을 보호를 위한 차없는 도로 해제 적극 검토
17.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예전 기준 및 지침을 고수하지 말고 유연한 대처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줄 것
18. 택시 개선 서비스 모색 필요. 임산부, 여성전용 택시 등(두바이 사례 참고)
19. 개인형이동장치(PM) 번호판 부여 검토
20. PM 단속 근거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비
21. 행정서류, 공문 및 보고서류 등의 구체화적 서술 요망
22. 주요 업무보고 최소 3일 전에 배부할 것
23. 행정용어, 사업명 등 외래어 지양
24. 마을버스 환승요금제로 인해 노선버스 정류장 중복 허용하면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음. 오히려 마을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부분만 다니니까 문제. 근본적 재검토 필요. 통합요금제 하에서는 몇 개의 정류소가 겹치든 상관 없다고 본다. 중복 정류장 4개>6~7개 정도로 확대 검토 필요함
25.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관련. 연세로 앞 이용객 주로 인근 대학생인데,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해제하지 말아야 함

26. 장애인콜택시 구매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의혹
27. 마을버스 서울시 재정 지원 못받고 있는 기존회사 동일하게 지원 필요. 마을 버스 증차 관련 서울시장 방침 받을 것
28. 지하철 혼잡도 등 안전 관련, 인력이 현장에서 해야하는데. 12월 말까지 본사 직원이 나가지만 인력감축 등 문제 있음. 한쪽에서는 인력 필요한데 감축하겠 다하니 모순 느낌. 진지한 고민이 필요
29. TOPIS를 정부, 소방, 경찰, 서울시 산하기관과 연계 활용하여 실시간 대응하 도록 조치 필요
30. 데이터 바탕으로 자동 무정차 시행시스템 적극 검토 부탁
31. 국내 전기버스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음. 공공영역의 진출 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개정 시급. 개선방안 검토하여 보고 바람
32. 버스 이용객이 준다는 건 시민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임. 노선 재정립 보완 및 버 스 증차가 필요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정책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33.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101.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교통 실에서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13건

1. 동절기 공사에 따른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 신안산선 관련, 신안산선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석수역 출입 구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 민자사업자와 협의 요청
3.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북선 4개 공구에 적용하고 있는 이 유. 건설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기 바람하며 향후 계획 보고해주시기 바람

4. 각 사업장별 균등한 민원대응이 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민원대응 매뉴얼의 필요성 언급
5. 사업과정에서 소송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의 세심한 검토 요구(동북선 지장물철거소송)
6.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회의실에 두지 않길 바람(예산 낭비)
7. 지역구 시의원 관련 사업은 사전에 보고 바람
8. 위례선 트램 2회 유찰과정에서 단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강구
9. 트램 건설의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도관리가 필요
10. 하남선 관련
 - 하남선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 2억원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한 이유 질의
 - 국비 부담분을 받지 못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게 된다는 점을 우려
11. 별내선 관련, 별내선 사업이 지연 된다면 지연 상황과 지연 사유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보고 부탁
12. 공사현장 관련, 현재 안전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도기본 공사에 대하여 유념하여 시공 바람
13. 동북선도시철도 재무제표를 보면 선순위대출(3%)보다 이자가 높은 후순위대출을 (9%) 받은 것은 걱정하지 않으며, 지하철 사업에 영향이 끼칠 수 있음. 사모펀드 회사가 3곳이나 있는 후순위 대출을 먼저 받은 것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 판단됨.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서울교통공사 : 19건

1. 교통세 신설 등에 대한 검토
2. 지하철 지연 반환 관련 직원교육이 필요함
3. 조직의 애사심 증진 방안
4.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직종에 따른 임금 차이의 해소방안 강구
5. 계약직 및 자회사 직원들의 마음건강센터 이용대상의 확대 추진

6. 직원 겸직 관련

- 당초 제출된 답변자료에 “보수 및 수당지급 내역 관련 자료는 별도 없습니다”에서 2차 자료에는 “겸직허가 신청 시 보수 등은 신청자가 신고토록 하고 있음”으로 기재해 제출
- 이는 지방의원의 업무 수행 및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향후 제출 시 자료 ‘부분 미제출’ 유의 바람
- 공사 직원 겸직 시 개인업체, 통신업체, 대학교 등 겸직한 경우가 5건인데 앞으로 민간과 대학에서도 공사에 겸직사실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바람

7. 지하철 승강설비 고장 관련

- 7일 이상 고장난 승강설비는 총 153건임. 6호선 52건, 5호선과 7호선이 각각 37건, 2호선 10건 순인데 각 건별로 고장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 바람
- 승강설비 고장을 예방하고 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8. 하남선구간 강화유리 깨짐 관련 감사 건의, 하남선구간 강화유리 깨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감사를 건의함

9. 공사의 정책과 방안에 일관성 유지를 주문

10. 공사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

11. 수서역, 공덕역 등 역사와 미사용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통로 활용방안

12. 지하철 역사 및 객차 공기질 개선 및 관리 강화

13. 지하철 심야운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정비 철저

14. 20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미리 체크 후 교체점검 할 것.

15.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채용 건 감사실시할 것

16. 공습경보시 승객, 지역주민에게 피난처 제공 확인

17. 마을버스 환승요금제로 인해 노선버스 정류장 중복 허용하면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음. 오히려 마을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부분만

다니니까 문제. 근본적 재검토 필요. 통합요금제 하에서는 몇 개의 정류소가
접치든 상관 없다고 본다. 중복 정류장 4개>6~7개 정도로 확대 검토 필요함

18.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관련. 연세로 앞 이용객 주로 인근 대학생인
데,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해제하지 말아야 함

19. 교통카드시스템 및 광고 관련 특혜 의혹 서울시 감사의뢰 건의

서울시설공단: 1건

1. 공단 발주입찰 자격과 조건에 대한 검증

11. 교육위원회 ----- 124건

서울시교육청 : 113건

1.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대학생 멘토링 등 보편적 사업이 아닌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2. 토닥토닥 키다리샘 사업 운영에 있어 식비 가격(8,000원)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동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교원 감축과 함께 진행되는 수석교사 증원은 교원들의 행정업무 부담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해당 정책 재고
4. 일부 입시학원이나 교습소, 입시컨설팅 업체 등이 교습 시간의 상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교습비를 수강하는 사례 시정
5. 위(wee)클래스 사업이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
6. 조희연의 열린 교육감실에 올라온 청원에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것
7. 갑질신고센터의 신고 사안에 대한 실효적이고 철저한 대처
8.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 화장실 이용 대책 마련
9. 취약계층을 위해 AI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0. 교원의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전문적 소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원 수급계획,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철저히
11. 학생의 읽기 역량,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 강화 방안 모색
12. 문해력 향상 측면에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13. 코로나 이후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서 위기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
14. 위클래스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15.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업 증가로 인한 교우 관계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16. 학년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심리 상담 지원프로그램 계획
17. 코로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위험군 학생 대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검사 앱 개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차질 없이 완료
18.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의무 봉사 실시 등 강력한 처벌 병행
19.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을 위해 조식과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20. 조리실 환기 시설 전면 개선 등을 통해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2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행 시 학부모 등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 강화
22.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 구성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듈러 교실 설치
23. 연수원 건립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 전반 재검토
24. 교육정책 기획 및 운영에 있어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성향을 따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인 관점 유지
25.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추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6.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27. 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생까지 기초학력 수준을 조사하여 기초(기본) 학력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28. 학교폭력 실태 조사 시행에 있어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의견 반영
29. 공·사립 초등학교의 운동부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30. 학업, 운동 병행하는 운동부 학생들의 고충해소 노력
31. 민주시민교육 등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
32. 영어유치원 및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33.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독립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에 대해 검토
34. 교육과정 개편,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35. 햇빛 발전소 사업 예산의 불용률이 높으므로 사업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 방안 모색
36. 햇빛 발전소 사업 시행 시 협동조합이 아닌 한국전력과 계약 추진할
37. BTL 사업 관련 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38. 대변인은 시민여론조사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문제나 고교학점제, 돌봄 문제 등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39. 정책안전기획관은 장애 학생 대상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보급
40. 정책안전기획관은 재난 안전 및 위기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
41.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교원이나 교실 부족, 교실 이동 증가에 따른 교우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모색
42. 정책 사업 명칭에 있어 외래어 사용, 축약된 단어 남용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43.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가이드라인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44. 대변인은 학부모, 시민 대상 정책 홍보를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조 강화

45. 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관계 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46. 직업계고 취업률 및 진학률 제고
47. 과밀학급 해소 및 과밀학교 내 특별실 공간 확보 방안 모색
48.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49. 교육시설 환경 개선과 학교 복합화 시설 구축 등에 있어 지역개발사업이나 교육수요(생존수영 등)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시행
50. 양질의 유아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유아교육과와 유아교육진흥원 간 협업 강화
51. 유아교육 진흥이라는 큰 틀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
52.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 감소 및 이중언어 지원 확대 방안 마련
53. 교육청은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에 대해 존중할 것
54.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 기관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내실있는 연수진행
55. 교원의 학생 대상 성폭력 중 언어적 성희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 모색
56.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교별 학생 지원율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57. 공공건축심의의 원안 채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8. 관용차 운전원 등의 급여수준이 운행 횟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59. 다같이학교 시행에 있어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교 시설 내가 아닌 별도 시설(센터)를 통한 운영방안 검토
60.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61.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62.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기, 업무지원인력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

63. 사립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64. 외국 국적 유아 대상 어린이집 원비 지원이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65. 교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포함한 성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66. 지역별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지원청별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배치는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업무량에 비례하게 인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67.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치료지원 인력 범위에 한의사를 다시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 요구
68.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이 동시에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
69. 원아 감소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급식비나 인건비 등의 지원 확대 방안 모색
70. 학교시설 공사의 하자 예방 및 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
71.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행도로 현황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 마련
72. CPR 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강화
73. 재난 안전교육 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확대
74. 교육청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시 지원 대상과 제한사항 등을 명확히 서술
75. 학부모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디벗 사업 확대·추진 여부 재검토
76. 디벗 사업 시행으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중독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77.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실현을 위해 각종 회의 개최 시 종이 사용 지양
78. 학교별로 생존수영교육 소요 예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산 낭비 소지 예방
79. 도박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학생 도박 실태 조사 예산의 적극적 편

성을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 노력

80. 학교 대상 화변기 교체 수요 조사를 실시할 때 학생, 학부모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81.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 분리
82.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부에 따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감액 교부 정책에 대해 재검토
83. 통합형 학교 단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긴급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84. 학교 공사에서 사용되는 창호 등의 규격 변경 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규격 변경 안내 미비로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85. 지역개발사업,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별 학습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86. 학생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명인·인플루언서 출연,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 등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구독률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87.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감을 느껴 학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88. 교육감은 필수 불가결한 사유가 아닌 비공개·개인 일정을 이유로 행정 사무감사 참석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
89.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 메인화면의 가독성 및 접근성 개선, 홍보 콘텐츠 다양화
90. 서울교육아이디어기획단 내실 있게 운영
91.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등에 대해 위원회 기능 제고 방안 모색
92.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존하므로 시민여론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 모색
93. 학령인구 감소와 별개로 특정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94.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성과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실시 검토
95.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 지원에 있어 지역별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6. 유아교육진흥원의 분관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97. 부모행복교실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책 홍보 강화
98. 영어유치원, 고액 진학 상담 등에 대한 학원·교습소 단속 강화
99.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 검토
100. 사업명에 정치적 의미가 드러나는 단어 사용에 대해 검토 및 시정
101. 서울시 내 도심권 재편에 맞춰 도서관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적인 도서관 운영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2. 학교급 및 직위 등에 따라 차등화된 교원연구비가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 노력을 적극 전개
103. 병설 유치원에서 종사하는 영양교사 및 보건 교사에게 겸직 수당이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104. 서울시 내 특수학교 중 국공립학교의 비중 확대
105.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유해성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
106. 전자철판 설치, 디벗, 전자도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107. 교육감 비서실장의 정무 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와의 원활한 대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108. 교육청이 진행한 디벗 사업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진하므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 위탁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 다시 시행
109. 자사고·국제중 지정 취소 소송의 패소로 막대한 소송비가 지출되었던 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110. 2020년 마스크 제조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와 60억원 상당의 마스크 구입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111. 안전성과 업무 능력이 보장된 업체가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 112. 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 조속히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113. 촛불침회 참여에 따른 봉사활동 인정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직속기관 : 9건

- 1.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 도입 검토
- 2. 혼합수업 등의 시행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별 학생 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무선AP 구축
- 3. 과학전시관은 자체 운영 행사의 안전대책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 4. 학교폭력 및 재난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치유 및 정서 프로그램 활성화
- 5.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 6. 학교급식 운영 등에 있어 교직원의 산업안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 7. 관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 8. 사립학교 시설 유지보수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교육시설관리본부 분소 설치 검토
- 9. 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검토

□ 학교안전공제회 : 2건

- 1. 학생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2.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 보상 공제의 적용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기타(자료제출 등)

1,074건

1. 운영위원회

27건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15건

1. 민선8기 시장 공약의 추진실적 내역.
2. 2022.9.22. 10시 제3차 안전대책회의 참석 대상 및 회의내용.
3. 오세훈TV 운영현황에 대한 상세자료.
4. 2021년 할로윈 축제 당시 이태원 일대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점검 및 서울시 내 추진한 회의·지침 등 관련 내용.
5. 에코스쿨 관련 3년치 자료(자치구별, 조성학교, 면적, 사업비, 사업내용).
6. 전국장애인연합회 시위 관련 자료(출근시간대 시위건수, 노선별 피해현황,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계획, 운행 방해 등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
7. 시장실 경력 경쟁 임용 관련 인사위원회 자료.
8. 불출석 간부(특보)의 불참 사유상 일정 및 동선(금일 시간대별 일정).
9. 보궐시기와 제39대 공약실천계획 비교하여 삭제, 변경, 확대된 사항 리스트
10. 이태원 참사 수습현장 행정제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 현장방문 관련 자료 (도착시점, 둘러본 곳 사진, 시간별 조치사항, 시장 보고자료).
11. 자살한 안전지원과장에 대해 발언을 한 내부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12. 언론보도회의(2022.10.20.) 보고자료 일체.
13. 자치경찰위원회 제도개선 관련(불필요한 이원화 체계 등) 시장이 노력한 내용 자료.
14. 2022.10월 시장 해외 출장 일정표 관련 연계사업 자체 계획서.
15. 2022.10월 시장 해외 출장 관련 출장사유, 방문지, 일정, 출장자수.

□ 시의회사무처 : 12건

1. 제19기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계획.
2.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퇴직 공무원 성명, 직급, 소속, 임기만료일, 중도 퇴직의 경우 원래 임기만료일, 현재 채용 추진 중인 내용.
3. 임기제 공무원 채용위원 및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4. 의원회관 내 CCTV 운영현황(CCTV화소나 제작일자 포함된 것으로 제출).
5. 보도자료 배포지침.
6. 자치구 지역신문 광고비 지급기준 및 근거(책정 기준표 포함).
7. 3년간 의원 의정활동 홍보영상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
8. 의회 청사 각 시설별 법적 설치 면적 기준, 미달 시설현황과 그 사유. 미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 현황 및 미반영 사유, 서울시와 협의한 내역, 의회청사 내 화장실 개보수현황, 의회 청사 증축 및 공간 확충 계획.
9. 의회 청사 기준면적 개선 관련,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내역(공문 등).
10. 3년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사무처 직원).
11. 2021년 가족수당 과다 지급으로 인한 환수 내역.
12. 오늘('22.11.15.) 사무처장 인사말씀 자료.

2. 행정자치위원회

----- 95건

□ 비상기획관 : 8건

1. 민방위 대피소가 정말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민방위 대피소 점검을 실질화하여 보고할 것.
2. 2022년 하반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보고할 것.
3. 2022년 제4차 안보정책자문단 회의개최 결과 보고 및 참석자 명단.
4. 우수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에 관한 자료 : 재향군인회 평가 관련 평가

기준, 평가채점표, 점수표 현황, 점수 사유 구체적 내용.

5. 2022년 제4차 안보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결과 보고
6. 민방위대피시설 전체시설의 정비가능 계획 제출
7. 을지연습을 비롯한 전역 시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수발 문서 제출 요망)
8. 감염병 위기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관련 2022년 교육 자료 개선 내용 또는 교육 자료(대설, 지진, 해일 등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자연재해 대응 교육 구분 요망)

민생사법경찰단 : 3건

1. 교육 진행 절차 관련 자료 및 최근 3년간 직원별 과정별 교육 이수 기간.
2. 세출예산 월별 집행내역(2022. 1월 ~ 11월 현재).
3. 월별 급량비, 관외출장 건수 및 금액.

행정국 : 12건

1. 서울혁신파크 특정감사 조치 결과.
2. 공익활동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3.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지.
4.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홍보 자료 (보도자료 배포 내용 등).
5. 주민자치회 자치구 시행 현황 자료.
6. 국가유가보조금 지원, 자치경찰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도개선 등 시도지사협의회 제안문건인지 되돌아보고 고민 필요.
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 외부전문기관 종합성과보고서.
8. 민간위탁사업 관련 수탁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침서, 없을 경우 2021년, 2022년 수탁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서(excel 파일, 하드카피 제출).
9. 수탁기관에 사업비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근거, 사례.
10. 직원동행프로젝트(조직문화TF)에서 논의 중인 다면평가 등 개선방안 중간보고 자료.

11. 임기제 공무원 관련 시장 방침(다면평가 결과 재계약 등 적용 관련 1년 유예 내용 포함).
12.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차이 내용 포함된 다면평가 방침.

□ 재무국 : 18건

1.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예산안 첨부서류 상 공유재산 관련 서류.
2. 최근 10년간 계약심사 예산절감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이 유찰된 현황.
3. 마을세무사 상담해결 건수 관련 자료.
4. 2020년 세무조사 추정액 대비 취소된 금액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람
5.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지적함. 직원 채용리스트에 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이 동일한 날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료가 부정확함. 이러한 자료로 행감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제출된 행감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현격하게 떨어짐. 수정된 자료 제출 바람.
6. 지방세연구원의 연봉 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이기에 비공개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자료이기에 이름은 제외하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람.
7. 지방세연구원 외부강의 시간 및 외부강의 허가기준 자료.
8.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계획에 따른 진행내용 제출 자료.
9. 지방세연구원 수입처리계정 사본 자료.
10.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사항 및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 향후계획 자료.
11. 은닉재산센터 운영 관련 언론사 기사 배포현황.
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취소되거나 지연된 사업현황.
13. 최근 3년간 팀장, 주무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
14. 2022년 10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업체(7개) 현황(업체명, 주소, 담당, 계약 사업 등).
15. 세수추계자문회의 설치근거 방침서, 금번 위촉근거 및 회의록, 법적근

거에 기반한 운영 방안.

16.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17.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시 노력 사항 자료.
18.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 사항 자료.

□ 평생교육국 : 15건

1. 보고서를 살펴보면, 원주, 영광, 군산에서만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표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해 보고할 것.
2.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관련 참여 지자체 산지센터 선정(업체명, 선정과정, 계약기간 포함) 자료.
3. 도농상생 공공급식 농산물 부적합 식재료 조치결과.
4. 청소년 쉼터 현황.
5.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개요(구조, 현황, 예산현황) 자료.
6. 서울런 관련(업무보고 15p) 직업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내용.
7. 서울형 교육플랫폼 학술용역 최종결과보고서(서울형 교육플랫폼 서비스 전략수립).
8.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비스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학술용역) 제안평가 심사자료.
9. 서울런 전문가 자문 관련 자문위원 명단 및 자문내용.
10. 서울런 추진 전 소득차이가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의 근거가 된 연구, 논문 등 참고자료 일체.
11. 서울형플랫폼 사전협의(7.21) 조건부 추진 통보, k-에듀플랫폼 연계통합 검토와 관련된 교육부와의 수발신 문서 및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자료.
12. 서울런 교재 지급 관련 개요, 근거(조례, 법률 등).
13. 헌법재판소 판시 관련 평생교육 개념 해석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

14. 2021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15. 서울런 행안부 사전협의 내용 및 수발문서 일체.

인재개발원 : 4건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교육운영 실적 p.117 표와 p.270 표의 내용이 상이함으로 확인하여 제출 요망.
2. 비대면 교육 출석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수강태도, 이석 및 수강포기 등 관리자료 포함) 자료.
3. 인재개발원 사업별 월별 집행 현황 자료.
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채용 진행 상황.

감사위원회 : 5건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관련 안전감찰 제도 변경 내용(제도 개요, 감찰 권한·기능 등)
2. 용역 계약 시 위원회에서 어떤 공고를 냈고, 어떤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계약 입찰 심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3. TBS에 대한 감사결과의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바람. 교통방송이 공정성을 가지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질책할 것.
4. 오세훈 시장 주요 시책사업 파악 현황, 점검한 내용, 점검 계획 제출 및 보고.
5. 스마트밴드·서울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파악 및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5건

1. 고충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진 내용.
2.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차이점 정리.
3. 감사 결과 후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 내역.
4. 감사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단 활용 방안.

5. 옴부즈만의 권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린 시민들의 숫자와 재판 진행 결과에 관한 자료.
6. 고충민원, 시민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절반 이하인데, 월별 집행률 현황 제출바람.
7. 국제옴부즈만 예산 관련, 교류 및 견학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8. 홍보 추진 관련,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및 홍보 계획이 아닌지?
9. 결산감사를 받은 후 옴부즈만위원회는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관행에 대해 개선하라는 시정권고를 들었음. 이에 옴부즈만위원회는 적극 시정하겠음 이라고 답했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매겨져 있음. 어떻게 시정한 것인지 자료 제출 바람.
1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원들의 경력과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
11. 고충민원, 직권감사, 민원배심 등 업무가 다른 부서들과 중복되는지 확인.
12. 질의에 대한 부정확한 답변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답변 시 신중을 기할 것(위원장 채용 관련 절차 발언 수정 관련).
13. 공공사업 감시평가 올해 중점감시 120개 사업 목록과 사업별 추진현황.
14. 2023년도 중점감시(120개) 사업 목록 및 목록이 아직 없을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파악하고 있는 시 중점사업·역점사업 현황 및 내용.
15. 업무보고 상 '공공사업감시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 구체적 사업목표, 진행상황, 예상효과 등 자세한 내용.

자치경찰위원회 : 4건

1. 자치경찰교육 현황 자료.
2.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자료.
3.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관련 자료.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육자료, 공통 프로그램, 강의자료, 홍보물 등 제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4건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 바람.

2. 그 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실적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보고 바람.
3. 봉사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한 자료도 제출할 것.
4. 2018~2019년 홍보물 제작 관련 외부업체 의뢰 내역.

서울장학재단 : 4건

1. 장학사업 만족도 조사 항목 자료.
2.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장학생 선정기준
3. 장학사업별 지원인원/선발인원/경쟁률
4. 2022년 지원 예정인 장학사업 현황.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3건

1. 동네배움터 사업 예산 12억(시비)에 대해 자치구별 지원 예산 현황, 참여자 수 현황(자치구별) 자료 제출.
2. 진흥원이 제공하는 야간교육(야간대학, 야간학습 관련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야간학습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심으로 제출).
3. 동네 배움터 운영사업 관련 성과관리 방안 연구 및 결과에 따른 중장기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관련 두 개 연구자료.

3. 기획경제위원회

----- 114건

기획조정실 : 16건

1.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송 승소 중 미회수된 내역
2. 최근 3년간 서울기술연구원 수탁사업 현황
3. 투자출연기관 성과급 급수별 소요예산
4. 최근 5년간 위원회 현황 및 개최결과(제척/기피/회피 사유 포함)
5.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건수(개최일시 포함)

6. 2020년, 2021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수당 지급, 총액 700만 원 이상 건수, 세부지급내역 및 검토보고서 일체
7. 2019~2021년 모든 위원회(본회의, 분과회의, 서면회의 등) 출석률 제적 50% 미만으로 개최된 회의 상세내역(회의시간, 내용, 수당 지급 내역, 참석 인원 등)
8. 최근 3년간 공공기여 내역
9. 투출기관 경영효율화 재무건전성 제고 관련 상세자료
10. 2022년도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 서울시 보증채무, 직접채무 관련 자료
12.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 학술용역변경 지침, 과업변경 지시 관련 자료
1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평가, 위원선정경과 및 추진보고서
14. 2019년~2022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 임명절차 및 위촉장
15.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임명절차 관련 임명·위촉의 근거
16. 서울시 소관 민간위탁, 대행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 민간위탁, 대행 사무 관련 시설현황, 소유주체 구분
 -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작물, 기계 및 기구현황과 공유재산 대장 등록여부
 - 위와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공제가입 현황(가입주체, 가입금액, 보험료 현황)

경제정책실(시립과학관 포함) : 12건

1. 2018~2022년 뉴딜일자리, 안심일자리 정식으로 채용된 명단
2. 서울형 강소기업 채용자 명단

3. 뷰티복합문화공간 B the B 관련 상세자료
 -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DDP 임차내역 포함)
4. 캠퍼스타운 종합형, 단위형 5기 심사 결과
5. G밸리 창업복지센터 및 창업큐브 관련
 - 창업복지센터 건물 시공 관련 참여한 모든 건설사 명단
 - 2022~2023년 창업큐브 예산, 사업계획서, 실적, 대행협약서
6. 2023년 게임산업 예산서
7. G밸리 창업큐브 IR컨설팅 및 데모데이 사업 현황
8. 뉴딜일자리/안심일자리 비교표
 - 소요예산, 관련 조례 및 법적 근거 등 정리
9. 메이드인서울과 공동브랜드 소그 사업개요(연혁포함) 및 중단사유
10. 2021년 이후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련 자료
 - 취약계층 정규직 전환 현황
 - 지원자들의 연령대 분포
 - 인턴십 매칭된 인원
 - 취업자들의 연령대 분포
11.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련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1816번 공문 일체, 붙임자료 포함
 - 21230번 공문 일체, 붙임자료 포함
 - 21278번 붙임자료 세개
 - 21565번 붙임자료 두개
 - 22011번 붙임자료 한개
 - 22년 파트너스하우스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확인서
 - GTX6공구 발파공사에 따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연도별 사후조사

보고서('22.2.23 SBA 메일관련)

12. 서울시네마테크 관련 비상업적 고전 독립영화 위주로 추진하려다가 제안을 받아들여, 4D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을 반영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21건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함)

1.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내역
2. 2022년 11월 현재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설립 현황
(성동, 동대문, 도봉, 서초, 동작, 송파)
 - 업체, 조합원수, 출자금액, 지원내역
3. 2022년도 추석 이벤트행사 관련 예산집행 내역
 - 각 자치구별, 사용 영수증 포함
4. 전통시장 에코백 지원내역
5. 화재공제보험 시장별, 업종별 가입률 자료
6. 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 특별채용 관련 적격자 심사 위원회 회의록, 주관부서 사전검토 및 승인 관련 자료
7. 인증·예비사회적기업들의 실적개선 관련 자료
8.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급현황
9. 상가임대차센터 상담인력, 상담실적
10.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문화예술분야, 가맹유통 상담수당 산출기준
11. 악성민원인에 따른 콜센터 상담사 조퇴 시 조치사항
12.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
 - 고객지원센터 내역

- 지원센터 이용고객 상황
 - 예산지원 현황
 - 사후평가 및 분석사항
13.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자료
 - 판매대행사 선정 과정, 신한컨소시엄 입찰제안서, 협약서 등 계약서류
 - 협약 관련 법률자문 결과
 - 컨소시엄사 역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정보 이관 현황
 - 서울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할인 보전금 등 현황, 선불충전금 현황
 14.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서울시의 역할 및 정부 보조금 관련 역할 검토자료
 15. 강서시장 경매제-시장도매인 영업장소 분리 소송 관련 진행상황 및 결과
 16.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미래 먹거리 종합전시관 건립 관련 타당성 조사
 17. 2021년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 예산 집행 내역
 18. 2020년 12월 제2차 감정노동자 보호 종합계획
 19. 18년 이후 전태일 기념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주요재정사업평가 관련 시정요구 목록
 20. 18년 이후 재정사업 평가계획서 및 결과
 21.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서울시립대학교 : 10건

1. 2010년~현재까지 박사학위 졸업생 현황
2.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 세입현황(2021~2022년)
3.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현황 및 건물 이용인원 현황

4. 최근 5년간 고시합격한 학생 현황
5. 시립대 대학도서관 23년도 평가(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관련) 대비 지표현황
6. 반값등록금 성과관련 연구용역 자료
7. KPI 성과관리주요지표 '21년도 달성값 보다 '22년도 목표값 낮게 설정된 사유
8. 2022년 부설연구소 연구과제 간접비 합산자료
9. 세입현황자료에서 전년도 이월금 2021년 결산이 끝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이유
10. 2019년 교육공무원 TO 4개가 부여되며 인문한국사업으로 HK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이 아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서울농수산물공사 : 4건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포함)

1. 전여농 사무실 임대료 감면 당시 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2. 향후 금융시장 전망과 현대화사업 금리 적용(고정·변동)에 관한 분석 및 보고내용
3. 스마트마켓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 자료
4. 강서시장 중도매인 수가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 및 대책

서울연구원 : 10건

1. 서울연구원 혁신방안 진행 상황
2. 유사연구과제 수행방지 대책
3. 지난 10년간 서울연구원 '작은연구사업' 성과가 서울시정에 반영된 내용

4. 포괄임금제 관련 진행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
5. 최근 10년간 연구과제 목록 리스트(계약형태 포함, 수의계약 등)
자체, 수탁 여부, 연구비 등
6. 전자도서관어플 활용 현황(활용목적과 용도)
7. '서울시 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관련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과 주고받은 공문
8. 최근 3년 간 각종 위원회,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인사, 평가위원회 등) 회의록
9. 연구원 각종 위원회 현황
10.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있음. 서울연
구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연구원
전체의 의견인지 표시 바람

서울산업진흥원 : 16건

1. 글로벌 투자유치단 위촉자 명단 및 내용
2.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내용
3. 뷰티트레이드쇼 B2B 매칭 주요 사례(성공사례, 부진사례 구별하여)
4. 서울컵 진행 상황 및 개최 결과
5. G밸리 창업큐브 7월 입주 시작 이후 지난 4개월 간 지원 프로그램 현황
6. 기관 내 SNS 채널별 예산집행 및 외주 현황(비용 포함)
 - 온오프라인 홍보현황, 향후계획
7. 창업기업 단계별 지원
8. 2019~2021년 소기업 특화용품 유통지원 사업지원 관련 사업
비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9. 최근 3개년 서울산업진흥원 기관 물품 구매내역

10. 뿌리산업진흥을 위한 지원 실적 및 성과
11. 이크릭스 펀드 조성계획 및 투자실적
12. 진흥원 인사규정
13. 21~22년 인사기준 승진대상후보자 및 심사결과
14. 2022년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와 주고 받은 서울파트너스 하우스 제목 있는 수·발신 공문 일체
15. 최근 3개년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내역(금액 포함)
16. 최근 3개년 서울산업진흥원 소속 패소 건(4건)

서울신용보증재단 : 9건

1.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2. 서울형 마이크로크래딧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 결과
3. 보증브로커 종합 대응계획
4.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 개인정보 보호체계 관련 현황 자료
6. 새출발기금 대응 결과 관련 자료
7.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대응절차
8. 구상권 완제 업체 전산 미처리 개선방안
9.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산업 결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 16건

1. 북부기술교육원 항공기정비과 관련 장비 운영현황
2. 남부기술교육원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할 때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많이 배출했는데, 이후 수탁법인 바뀌면서 대회

성과가 없는데 그 사유

3. 남부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 군포시와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진행 현황
4. 전반적으로 장비가 낡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사용 연한 지난 물품에 대한 교체 방법
 - 커피 그라인드가 고장났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5. 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6. 나이가 많아 입학을 못했다는 민원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교육원의 대책
7. 2021년 교육생 연령대 관련 자료
8. 동부기술교육원 정규직 채용시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자료
9.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정규직 채용과정 관련 자료
10. 최근 3년간 인건비 및 수당 지급 현황
11. 최근 통합운영위원회 논의 자료
12. '21~'22년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문 및 지시사항
 - 수발신자, 주요 지시내용 요약 등
13.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22.9.30.)
14. 자격증 취득 관련 현황
 - 자격증 취득 가능한 학과, 교육훈련 받아 기능사 1차 필기시험 면제받은 인원, 최종 자격증 취득 현황 등
15.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제반 혜택
16. 중·남부기술교육원 직인 교체 이후 공문 일체

4. 환경수자원위원회

----- 110건

기후환경본부 : 21건

1. 사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시민제보 사항(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관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2. 자문회의에 위원회 수당 지급 가능한 근거 규정(녹색서울시민위원회)
3. 신기술태양광 등 추진사업 내역
4. 환경분쟁조정 건수 및 결과(최근 10년)
5. 서남집단에너지 건설 최초 방침서와 계획변경 방침서 일체, 현재 계획 방침서 (결재라인 포함)
6. 태양광 폐업관련
7. 태양광 폐업업체 설치대수
8. 태양광 설치가정에 폐업 안내 횃수 및 문건
9. 폐업업체가 보급한 태양광의 안전점검 현황
10. 태양광 전체 업체 관련
11. 안전점검 이행 결과 자료, 점검목록 포함(12만개, 5년간)
12. 사후관리 강화 조사 연구(업체별 점수, 불만사항 접수내역)
13. 자치구별 환경공무원 수
14.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올해 중간평가 자료, 작년 평가 자료, 심사위원 (위원명 가림처리) 채점표(원본대조필) 제출
15. (사)항공기소음, (사)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법인등기부등본
16. 공항소음민간위탁 수탁기관 추가 예산편성 경위 및 사업계획서, 시의원 수당

지급 근거자료, 공향소음센터 시민만족도 조사 96백만원 포함 경위

17. 다회용 컵 이용료 할인 지원 현황
18. 반납기 구매 내역, 잠실야구장 다회용 컵 사용 참여 업체 내역
19. 다회용 컵 보조금 상세집행내역, 반납기 구매일 및 설치 날짜
20. 2021년 다회용컵 시범사업 3개월간의 성과보고서 및 보증금이월 내역, 집행내역서
21. 다회용 반납기 기계설치 상세 내역(계약날짜, 집행내역서 구입개수 및 설치개수 비교)

푸른도시여가국 : 8건

1. 안전감사담당관 미감사 부서에 대한 별도 자체 점검사항 자료
2. 친환경 병해충 방제 및 모니터링 계획(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
3. 옥상녹화 유지관리 모니터링 조사 자료 제출
4. 옥상녹화에 대한 연구자료 제출
5. 2019년 서울정원박람회 예산 세부집행내역서
6. 2020~2022년 푸른도시서울상 컨테스트 과업 내역서, 홍보광고비 세부 내역
7.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 보고서
8.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메인무대 및 객석존 임대 용역 과업내역서, 계약내역서

서울대공원 : 2건

1. 서울대공원 체험형 키즈파크 조성 관련 사용수익 허가 공고내역 및 체결계약서
2.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추진 근거와 방침

상수도사업본부 : 18건

1. 정수센터별 배전반 현황
2. 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현황
3. 정수센터별 노후시설 정비 예산(2021~2023년)
4. 정수장 순환정비 자문단 현황
5. 서울물연구원 연구장비의 외산장비 구매 비율 및 구매 사유
6. 2021년도 노후밸브 추경예산 사용 현황
7. 최근 3년간 정수센터 슬러지케익 예산집행 결과
8. 약품탱크 유출사고 관련 내용 및 향후 약품 탱크 교체 계획
9. 최근 3년간 정수센터 슬러지케익 처리현황, 처리방법, 처리비용
10. 발암물질 음수대 보도 관련 실태조사 내역 등
11. 폐입상활성탄 매각량, 매각단가, 매각비용
12. 부정당업체 관련 입찰계약 구비서류 일체
13.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PQ)
14. 세계 선진도시 음용률 현황
15. 지하수 사용 수전 현황
16. 수질검사원 교육 예산 편성과목 적정성 및 세부 집행내역
17.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수력 및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18. 원격검침 통신망 관련 소요 예산, 자가망 결정 과정 및 프로세스

한강사업본부 : 3건

1. 난지 캠핑장 운영 용역 보고서
2. 화장실 입지 선정 및 위치 정보 서비스 추진 관련 빅데이터 용역 결과

3. 한강사업본부 조형물 리스트와 사진자료

□ 서울에너지공사 : 58건

1. 공사 발전소 및 제어실 운영현황, 근무자 복무현황(발전소 운영현황(가동시간), 제어실 복무 및 수당 지급현황)
2. 2021년 코로나 관련 감사실시 결과, 실명 공개요청
3.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신청일, 접종일 작성요청
4. 별내 에너지 열연계 사업 추진 현황(경위, 민원현황, 인허가)
5. 열요금 인상현황, 근거, 한남 열요금 비교, 열요금 상한제도
6. 2018~2022년 연간 수열 및 연료 구입비용, 수열 감소사유
7. 노후 열수송관 증장기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별도파일)
8. 미활용열 이용확대 관련 2022년 7월까지 실적 및 목표 자료
9. 임원 성과급 지급 관련 경영성과계약 평가 방식(별도파일)
10. SPC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획 및 예상 수익 등
11. 롯데마트태양광 발전사업 손익계산서 제출
12. 공사 방문 기념품 관련(지급대상 및 품목, 기념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기념품 제작업체 입찰방법, 제작업체 정보)
13. 서남하수열, 노원연료전지 열공급 중단에 따른 수발신 공문 일체 관련 내부 보고서(별도파일)
14. 수의계약 자료(2020년~2022년)
(3년간 수의계약 엑셀자료, 수의계약 사유, 중복 및 누락여부)
15. 공사 공공형 일자리 관련(공공형 일자리 해당없음.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현황, 예산집행현황으로 제출)

16. 최근 3년간 갑질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유형 및 주요 내용)
17. 건설기술지원단 운영방침, 채용공고 서류 일체
18.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토론회 개요 및 토론회 원고
19. 부지확보 추진 지연사유, 최초 사업 추진시 부지확보 여부
20. 신규 사업 추진 중 사업중지 사유(경주시, (공모) 롯데마트, 신안군 마산도, 차량기지 연료전지)
21. 차량기지 연료전지 사업 추진경위 및 현황
22. 서남 사업 관련 기본설계 진행경과, 현재 진행사항
23. 기본설계 준공 이후 실시설계, 건설공사 등 일정
24. DL과 수의계약 관련 진행사항
25. 편입 예정부지 관련 진행경과
26. 법률 위반사항 내역(세부내용, 중복위반 여부, 처분 및 조치현황)
27.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린엔젤스' 계약실적
28. 기부금, 지역문화 예술사업 관련(기부금액, 기부단체, 음악회)
29. 여주 태양광 사업 관련(비용 집행내역, 업체명, 금액 등)
30. 서울지역 외 태양광 사업별 비용 집행내역(회의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31. 코로나19 검사키트, 소독약, 마스크 등 구매내역(품질보증서 등 증빙)
32. ODA 사업 관련 해외출장 자료 제출(2022년 출장 취소사유)
33. 2020년부터 사장, 임원 관용차량 이용내역 제출(사용목적, 목적지, 거리 등)
34. 2017년부터 외부강의, 자문회의 등 내역 제출(회의명, 비용 등 포함)
35. 2020년부터 외부교육(교육명, 비용 등 포함) 현황 제출
36. 대학원 학비지원 대상근거 제출(업무연관성, 재직연수, 잔여 근무연수 등)
37. 한빛디엔에스, 그린엔젤스와 태양광 관련 사업 계약내역(2016년부터)

38. 최근 5년간 열원 생산량 자료 제출(생산실적, 판매실적(월 단위 작성))
39.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명세서 제출(정부승인내역)
40. 서남 열병합 2단계 사업 관련(공사비 등 사업비 변동 내역 제출)
41. 왕숙 사업 관련 비용 집행내역 제출(건명, 금액 표기)
42. 2020년부터 포상제도 운영자료(계획, 실적포함)
43. 포상내역 명단
44. 그간 사업 진행경과(최초 50MW부터 285MW 변경까지)
45. 목동 시설폐쇄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의 관계성
46. 당초 건설위치 변경 관련 자료
47. 주민협의회 구성 추진경과, 당초 대비 공급지역 확대 경위
48. 시 에너지자립도 문구, CHP없이 PLB만 건설가능 여부
49. 서남 열병합 우선협상대상자와 작성한 회의록 등 협의과정 관련 자료 일체
50. 2017년부터 태양광 사업별로 물품, 용역, 공사 등 발주한 내역 및 계약업체명, 계약금액
51. 태양광 실증단지 준공 전후로 수리, 보수 또는 철거한 내역과 보수비용 제출 (바닥 태양광, 벽면 태양광 등)
52. 최근 5년간 법률위반 사항 및 과태료 납부 자료관련, 감사 및 관련 직원 징계여부
53. 최근 5년간 열생산 대비 판매실적 자료, 월별 차이 표기(%)
 - ※ 도시가스 사용량, 열판매량 등 온실가스 명세서와 비교
54. 서부, 동부 및 마곡지사 보일러 운전 매뉴얼, 유지보수 매뉴얼
 - ※ 공급지역 온도 하락 시 열생산 및 공급 매뉴얼 별도 제출
55. 상임감사 관용차량 이용내역(차량운행일지)
56. 음악회, 지역 문화예술사업 자료 관련 임원진과 연관성 여부
57. 제2기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선정근거, 내부평가 자료

※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선정근거, 교육계획

58. 2022년 대학원 위탁교육 수행 학비지원 선발공고문, 기준, 결과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5건

대변인 : 5건

1. 민원 창구의 각 역할과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상태.
2. 서울 해외 홍보를 위한 외신 활용 전략 및 방안.
3. 외신 취재 지원 및 보도에 관한 성과 확대 방안.
4. 외신 취재 만족도 지표.
5. 일본어, 중국어 담당 국제 홍보 전문 요원의 명단, 직급, 담당업무에 대한 자료 일체.

홍보기획관 : 3건

1. 찾아가는 서울시청 차량 구입비, 유지비 및 세부 운행일지 일체.
2. 2020년 ~ 2022년 응답소 육설 및 폭언 58건에 대한 자료 일체.
3. 120다산콜재단 재단 이전 및 재단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일체.

문화본부 : 9건

1. 문화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2.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2년 해외 공연 및 수입 자료.
3.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참고 자료.
4. 노들섬 19~22 프로그램 이용 현황 공간별로(이용자 수 현황 등), 시설개선비, 주차장 이용 현황, 용역 현황.
5. 최근 5개년도(18년~22년) 한성백재박물관 관람객 현황 자료(이종배 의원)

6. 서울시립교향악단 '22년 해외 순회공연 6번 중 악기 부분별 필요인원 및 대체 인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7. 단원을 제외하고 객원 단원을 공연에 투입한 경위.
8. 왕궁수문장 요원 1인의 장비 단가 자료 제출요청.
9. 최근 3개년도(20년~22년) 덕수궁, 남산, 송례문 수문장의식 관련 자료.

관광체육국 : 9건

1. 2022년 조직진단 연구 용약 사업전략 및 조직운영 관련 결과물.
2. 관리 시설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기존 3년치에서) 5년치로 추가 요청.
3.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자료 일체(인원 수, 지급 횟수, 액수 등).
4.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대상 과학센터 실시 프로그램 관련 자료 일체.
5. [체육회] 회장직에 제공되는 차량 내역 전부(정리본 아닌 사본).
6. [체육회] (사무처장용) 법인카드 사용 3년치 내역.
7. [체육회] 선거 비리 관련 최근 3개년도 교육일지 등 자료 일체.
8. 중국인 관광 전담 여행사 목록.
9. 관광정보지식시스템구축 비용 중 컨설팅 및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비 외 9천만원(인건비 추정)에 대한 산정 내역.

서울역사박물관 : 8건

1. 서울역사박물관 시행 스탬프 투어 운영실적.
2. 최근 3개년('20~'22) 차량운행일지.
3. 서울의 집성촌 연구 결과 자료.
4. 기관의 소방·방재 대책.
5. 기관의 재택근무현황(5명 샘플만), 지침, 규정, 재택업무 수행 결과보고서.
6. 현장방문에서 지적했던 사항 조치 결과.
7. 에도시대 스미다강의 도시풍경 전시 만족도 조사 결과.
8. 해외관광객 유치 방안.

서울시립미술관 : 4건

1. 서울시립미술관 시행 스탬프 투어 운영실적.
2. 기관의 소방·방재 대책.
3. 자치구 운영 미술관 현황, 자치구 미술관 소장 작품 현황.
4. 외래관광객 유치 방안.

세종문화회관 : 11건

1. 1층 세종라운지베이커리 낙찰(가장 최근 낙찰) 금액.
2. 올해 각 단 별 지회공연발전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3.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직원 지각 시간 상위 30건 내역과 지각 횟수 상위 30명 내역.
4.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역대 시설관리소장 명단.
5. 예술로동행 사업 집행 세부 내역(현재 기준)
6. 온라인 대관 신청 시스템 도입 시기와 도입 비용.
7. 회계감사보고서 상 수익금 마련 수입 30억 가량 감소된 사유 관련 세부.
8. 통신료 3,600만원 차이분에 대한 자료.
9. 기부금, 후원금 사용 세부 내역(요구 자료에서 누락) 및 협약서 사용방침서, 처리결과보고서(수익금처리 및 사업비 집행 항목 구분하여)
10. 2022년 직원 교육 이수 관련 데이터.
11.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 수강 여부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추진 프로그램 제안 1~2가지.

서울시립교향악단 : 13건

1. 서울시향 노조 개수, 명칭, 소속된 인원, 규모.
2. 서울시향 노조 가입 명단.
3. 최근 3년 객원 연주자 계약서, 계약금액, 정보 일체.
4.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향 모든 공연 자료 보완 후 재제출.

5. 일상감사 관련 자료 일체, 결과지.
6. 세부적인 증감 예산 사업비 내역(우리동네 관현악 악장 섭외비 세부내역 포함)
7. '찾아가는 시향' 확대 추진 방안.
8. 추후 단원 평가 방식.
9. 서울시향 단원 정년제도.
10. 2018~현재까지 연도별 음반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수정제출.
 - '콜라주' 음반 발매 지출 수입 예산
11. 유럽 투어 관련 자료
 - 총 14억원 예산 재원에 대한 지출 및 수입내역(김규남 의원, 이효원 의원)
 - 공연장별 객석 규모, 유료 매표 현황, 초대 현황.
12. 유럽 순회 공연 중 연주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 명단 및 사유.
13.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

서울문화재단 : 4건

1. 서울시내 지역밀착형 소극장 목록 및 위치 지도 자료.
2. 창작공간별 직제표와 공간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자료.
3. '17~'18년도 연희문화창작촌 해외작가 입주관련(입주자, 입주기간, 제출 에세이) 자료.
4. 예술청공동운영단 평가위원회 자료.

관광재단 : 4건

1. 체험관광 육성 활성화 지원 관련 개최 내역.
2.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자료 일체(인원 수, 지급 횟수, 액수 등)
3. '서울 관광 자원 활성화 제안' 관련 민원 내용.
4. '서울 유튜브 관광 콘텐츠 지원' 관련 민원 내용.

미디어재단티비에스 : 6건

1. 편성위원회 회의록. 3개년 개인정보, 영업비밀 제외 편성위원회 현황 라디오 TV, 보도편성위원회 현황.
2. 2020년 ~ 2022년 TBS 출연자 작가 등 출연료 지급사항 일체.
3. 시청자위원회, 심의위원회 논의된 내용(회의록) 재단 이후 전체 내역.
4. 재난 단계에 따른 재난방송 송출 규정.
5. 2020년 ~ 현재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분기별 매입처별 명세내역. PDF 파일 따로 제출.
6. 광고 및 협찬 등 자료 일체.

120다산콜재단 : 9건

1. 동아리 현황 및 활동 내역, 동아리실 현황, 직원 수 대비 동아리 활동 인원.
2. 상담원 남녀 성비, 연령대 비율 현황.
3. 재단 전환 이후, 채용 지원 내역 및 실제 채용된 인원 자료.
4.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높아 재택근무를 활성화했다는 비교대상 민간 업체.
5. 상시순환재택근무제 시행 한 달간(10월) 사무실 근무 및 재택근무 내역.
6. 자기계발 휴직을 독려했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 일체.
7. 재단 전환 이전 시민 만족도 조사 자료.
8. 이태원 참사 당시 18시~23시 다산콜센터 신고 세부내역.
9. 2022년 8건 악성 민원 피해 녹취록.

6. 보건복지위원회

----- 103건

여성가족정책실 : 10건

1.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연장 보육수요 및 근무 현황 자료요구
2. 금천구 국공립 어린이집 등기누락 관련 책임자 및 구청에 대한 조치 자료,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등기여부 점검 자료 요구

3.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지급 관련 자료 요구
4. 지역아동센터 용역 관련 예산 편성 단가, 실제 용역 지급 단가 등 자료 요구
5.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중 세금 내는 외국인의 비율(%) 자료 요구
6.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제작 배포 부수 및 배부처, 교육·행사 및 컨설팅 세부내역 자료 요구
7.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재단 교육 관련 역할 구분 자료 요구
8. 독박육아자조모임 특별활동비 신청안내문, 신청서, 지급 관련 서류일체와 영유아 부모 자조모임 300개 자치구별 현황 자료 요구
9. 제2기 우면업인턴십 중도 포기 사유 자료 요구
10. 2022년 전액시비 사업 중 위탁사업 목록 및 위탁사업 예산총액과 전액시비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요구

여성가족재단 : 4건

1. 스페이스살림 하자보수 추진 경과 자료 요구
2. 2021년, 2022년 정책 연구 추진 현황, 과거 정책 연구 지연으로 인한 프로세스 개선 관련 자료 요구
3. 서울여성플라자 안전 조치 전과 후 상태 자료 요구
4. 스페이스살림 하자보수 내역 자료요구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6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영보자애원)

<여성능력개발원>

1. 운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균등배분하기로 서울시

와 협의한 자료 요구

2. 인센티브 지급제도 개선에 관하여 서울시와 논의한 사항 자료 요구

<동부여성발전센터>

3. 최근 3년 수익계약현황 및 비교견적 일체 자료 요구

4. 언론에 보도된 채용비리가 확대 왜곡된 내용이라는 근거 자료 요구

5. 강사비 지급내역 자료 요구

6. 모법인이 맡은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해 위탁 시작부터 1년 이내 직원 이직현황 (명단, 사유) 및 사직원 자료요구

<서부여성발전센터>

7. 서부여성발전센터 구세군법인 최초위탁 이후 1년간 이직현황 및 이직사유, 사직서 자료요구

8. 모법인이 맡은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해 위탁 시작부터 1년 이내 직원 이직현황 (명단, 사유) 및 사직원 자료요구

<남부여성발전센터>

9. 모법인이 맡은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해 위탁 시작부터 1년 이내 직원 이직현황 (명단, 사유) 및 사직원 자료요구

<중부여성발전센터>

10. 모법인이 맡은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해 위탁 시작부터 1년 이내 직원 이직현황 (명단, 사유) 및 사직원 자료요구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11.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 마련 필요

12. 노무사 외부 강의 횟수 및 강의로 자료요구

13. 2022년 호봉기준표 및 센터 구성원 호봉표 자료요구

14. 센터장 호봉책정 근거 및 월 평균 급여 자료 요구

<아동자립지원사업단>

15. 보호 중인 아동 심리정서지원사업 예산서(인건비 포함) 자료 요구

<영보자애원>

16. 최근 3년 주요 임원의 출장비 지급내역서, 2022년 6월 15일, 16일 기관장 출장결과보고서 및 출장비 지급명세서, 2022년 9월 20일 오전, 오후 각각 출장결과보고서, 2022년 1월 20일, 2월 11일, 4월 12일, 6월 23일 선진한 의원 수진 대상자와 그 진료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2년 1월 5일, 2월 7일 발편한세상 이용인과 그 이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2년 1월 26일, 1월 29일, 2월 17일 나비네일 이용인과 그 이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지정책실 : 10건

1.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유찰 관련 자료요구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하상복지재단 회계부정 관련 전체 자료 요구
3. 하상복지재단 위탁 관련 자료 요구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부적절한 용역 발주, 법인 관계자를 센터직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지도·점검한 자료 요구
5.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차량 매각 금액 자료 요구
6. 사회서비스원 2020년 예비비로 인건비 사용 후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절차 거쳤는지 관련 자료 요구
7.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적발자에 대한 납부 통지 건수, 납부 독촉 건수, 체납 처분 절차 진행 건수, 결손처분 건수 내역 자료 요구
8. 위탁법인의 법인전입금, 연간 부담금 내역 자료 요구

- 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납부 액수를 기준으로 납부율 계산한 자료 요구
- 10. 1인가구의 경우, 국기초보다 덜 받게 되는 갭(8만원)이 발생했는데, 관련자료 요구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10건

<서울시복지재단>

- 1. 희망두배청년통장 위기청년 사례관리 실적(자치구별 최근 3년간) 자료요구
- 2. 복지정책 연구개발 관련 예산내역(최근 3년간) 자료 요구
- 3. 지식공유활동가 활동 관련 상세자료 요구
- 4. 연구비, 회의비 관련 구체적인 내역 자료 요구
- 5.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지원 서비스(복지법률 상담, 자문, 공익소송, 공익활동 등) 관련 자료(원본대조필) 요구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6.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성희롱 사건으로 직영 어린이집 원장 징계) 관련 구청에서 발송한 공문
- 7. 직장내 괴롭힘 정식 조사가 있을 경우, 바로 직위 해제할 수 있는 인사규정 개정안 관련 금년 5월 이사회 회의록 및 변호사 자문 목록
- 8. 이사 회의 수당 지급 관련 상세자료 요구
- 9.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 평가 관련 평가표 자료 요구
- 10. SNS 광고 운영 용역 대금 등 행사·홍보비 상세 사용 내역 자료 요구

◆ 복지 관련 시설 : 15건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복지 관련 시설 전체>

1. 수감기관 후원물품 관련자료
 - 2021~2022 시설별 후원물품 수입 및 지출내역
 - 시설별 후원물품 운영관리 규정 및 지침
 - 후원물품 접수 및 지급절차

<보조기기 관련>

2. '21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 요구
 -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반영된 보조기기 구매 자료 제출
 - 임대료 조정 등 개선 방안에 대한 결과 보고
 - 보조기기 홈페이지 개편 시기에 대한 결과 보고
3. '21년 보조기기센터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관련하여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를 통해 결과 공유 요청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4. 이월금 사용처 세부내역 자료요구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5. 최근 3년간 강서구청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후원금 관련자료 포함)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권센터)>

6.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조사내역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7.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은 시가 보험에 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조치 자료(보험증권)

<시립뇌성마비복지관>

8. 이용자 고충처리 운영지침 11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항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회 보고 후 기획전략팀장에게 이첩한다고 하는데 조직도를 보면 기획전략팀이 없음

9.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요구

- 관장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10. 시민감사 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요구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협약서 미제출 지적사항 조치되었는지? 언어치료실 밀폐에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데 방지 조치 되었는지? 공간 구성 계획 변경 권고에 따라 조정했는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 기본권 내용을 포함시켜 개발했는지?

11. 2021년 사업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 자료 요구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2. 2021년 시민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 여부 관련 자료 요구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13.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요구

-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은 시가 보험에 가입 의무토록 되어 있음.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이 안돼어 있었던 부분 조치 되었는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14. 시민감사 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요구

- ‘보조금관리법 위반자’ 등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채용 결격사유를 규정에 명확히 하고, 채용 고시에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조치 했는가?
- 주차장 출입구 인접도로에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는데, 안전조치 했는가?

15. 2021 시민감사 옴부즈만 ‘2021년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감시·평가 조치 요구 결과 제출

시민건강국 : 12건

1. 헬스케어 관련 복지부 협의내역 자료 요구
2. 2021~2022년 본예산, 추경에 반영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과목 및 내역, 산출근거자료 요구
3. 서울형 헬스케어 2차 시범사업 방침서, 스마트밴드 입찰 참가업체 명단, 업체가 제출한 구비서류 일체 자료 요구
4. 서울형 헬스케어 1차 참여자수 중에 만족도조사 응답수, 조사결과 자료 요구
5. 서울형 헬스케어 2차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방침서 자료 요구
6. 서울형 헬스케어 건강관리도구 구매 적격심사 결과 자료 요구
7. 서북병원 장례식장 용역 내용,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서 자료 요구
8.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반납금 과다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 요구
9.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시민건강 정보 업데이트 요청
10. 시비 100% 사업 내역 및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자료 요구
11. 보건지소에 설치된 장비 내역 자료 요구
12. 24개 보건소 골밀도 측정기 검사건수(2017~2019년) 자료 요구

보건환경연구원 : 8건

1.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 결과 (2022.10.18.~10.19.)
2. 내구연한 초과장비 수량을 분야별 식품의약품, 질병연구, 환경연구, 동물위생으로 구분 제출
3. 장비관리대장 제출
4. 미사용, 고장 장비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재활용, 불용 매각 등)
5.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종사자 상해·사망보험 가입내역 자료 요구
6. 종사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 및 보장에 관한 내부규정 자료 요구
7. 최근 5년 검사소 내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자료 요구
8. 최근 5년 외부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역과 결과보고서 자료 요구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5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1. 서울의료원 감정노동 보호위원회 안에 직원고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요구

<어린이병원>

2. 어린이병원 최근 3년간, 평균 진료과목별 외래입원 대기일수 자료 요구

<고양정신병원>

3. 2023년 재활프로그램 연간계획표 자료 요구
4. 옥상 방수 관련 안전진단 지적사항, 옥상 항공촬영사진
5. 2022년 3월 9일, 6월 1일 입원환자 외출대장 자료 요구
6. 입퇴원 환자 기록 관련 자료 요구
 - 진료과별 입원환자 입원일수 평균일, 최소일, 최대일 (2020~2022. 9.30.까지)

- 1년 이상 입원 중인 환자 명단, 진단명, 최근 1년 퇴원판정위원회 회의록 일체 (2022년 10월말 기준)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퇴원 요청에 관한 처리 내역(정신건강 심사위원회 관련 서류)
7. 정신사회복지사 이직 현황 자료 요구(2020년~2022년 10월말 기준)
8. 정신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 자료 요구

<보라매병원>

9. 2022년도 지출예산 '관리운영비' 중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 자료 요구
10. 의료윤리위원회 구성 자료 요구
11.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영역별) 자료 요구
12. 2022년 3월 9일, 6월 1일 선거일 입원 환자의 투표권에 관한 원내 안내문, 사전선거를 포함한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요청과 승인에 대한 내부 운영 지침, 투표 당일 입원환자 외출대장(정신건강의학과 포함)
13. 2022년도 예산 복리후생비 162억 증가분 및 무형자산 취득 18.8억 관련 상세 내용 자료 요구
14. 시간 외 수당 관리 및 지급 절차 개선 내용 자료 요구
15. 사회복지사 급여 테이블 및 최근 3년간 이직 건수 자료 요구

건강 관련 시설 : 3건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정신건강통합센터>

1.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이력서 자료 요구
(개인정보 삭제 후)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2. 기억지킴이앱 1단계, 2단계 개발 용역계약의 최종 납부 파일 일체, 용역 계약사인 브라우니솔루션앤컴퍼니 최근 3년 매출액과 사원 수를 포함한 기업 정보 자료 요구
- 3. 기억지킴이앱 서버 스펙, 서버 이용 계약서 자료 요구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70건
---------------------	-----------

안전총괄실 · 도로사업소 : 14건

- 1.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과하여 지출된 내역 중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세부내역 제출.
- 2. 최근 3년간 YJ코퍼레이션, ENW, 테크윈시스템 등 3개 업체와의 마스크 체결 내역 (제품명, 금액, 수량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 3. 한강교량 CCTV 현황
- 4. 가양대교 시범용 CCTV 및 감지기 설치 현황
- 5. 재난과 관련하여 언론에 방송을 요청했던 사항
- 6. TBS에 재난 관련 방송을 요청했던 내역
- 7. TBS에서 이태원 사고를 인지한 시간, TBS의 재난 관련 방송 실시간 내역
- 8. 재난상황 4단계 발령 등으로 TBS 방송이 재난방송으로 전환된 시간
- 9. 녹색 버스중앙차로 사업 추진 재검토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고할 것.
- 10.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청담대교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결과보고를 제출할 것.
- 11. 서울시에 설치된 투수 보도블럭의 제품 현황(재질, 단가 등) 제출
- 12.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구매한 방역물품에 대한 현황 제출 (제품명, 구매수량, 회사명, 계약내용 등)

13. 서울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방역물품 관리현황 및 유통기한이 만료 예정인 방역물품 사용계획 제출

14. 서울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제출

□ 소방재난본부 : 8건

1. 고층건물(롯데월드타워) 소방훈련 현황
2.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상 오류로 보고되는 사항
3. 한강교량 CCTV 화소 등 전반적 현황
4. 제연설비 설치대상 민·관 합동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
5. '이태원사고' 관련 참여 소방공무원 대상 긴급심리 지원 운영 실적
6.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체계 세부 기준
7. 안전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사업
8. 전기차 화재 진압방법(3가지) 장·단점

□ 물순환안전국 : 14건

1. 물재생센터 하수처리량,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
2. 대심도 빗물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공고 관련 자료.
3.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4. 자치구별 하수관로 준설공사 설계량 산정 방식.
5. 2013년 당시 대치역 침수대책 결정과 관련하여 조사 용역 결과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명단.
6. 내부청렴도 개선(향상) 대책.
7. 강남역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민원 대응 방안.
8.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기본계획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종료 후 관련된 자료 일체.
9.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운영 분석 보고서.

10. 대심도사업TF팀 전문가 그룹 구성안.
11. 맨홀추락 방지시설 제품선정 절차 및 현황, 자치구별 맨홀추락 방지 시설 설치 현황.
12. 중량물재생센터 노후 악취방지시설 교체와 관련하여 제품 현황, 악취저감 효과 등에 대한 검토 자료.
13.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예측시스템 용역 관련 자료(착수, 중간, 최종 보고서 포함).
14. 침수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보고서 형태로 제출)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2건

1. 물재생센터 하수처리량,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
2.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17건

1.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관련 각 점검 현황 및 출장 내역 제출.
2.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현황 제출.
3.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업무 실적 제출.
4. 공무원 건설공사 현장 직접 상주 시범운영 개요 및 현황 제출.
5.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중 '탄천동로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구간 세부자료 제출.
6.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도급사와 하도급사와의 계약서 제출.
7.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주)효명이씨에스의 특허를 비엔지이엔씨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8.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관련 공법심사 심의위원 명단 제출.

9.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감사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 제출.
10.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감사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결과 제출.
11.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폰톤의 현장사용 승인 관련 자료 제출.
12. 신림-봉천 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 16건 내역 제출.
13. '평창동 미술복합공간 건립공사'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설치 정산 내역 제출.
14. 최근 3년간 대형공사장 감리사의 근무실태 위법 적발 및 조치 현황 제출.
15. 건설공사장 감리사 근무실태 강화방안 제출.
16.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는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이 발생한바 공공조형물 설치가 이루어졌던 배경 및 진행과정 제출.
17.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및 현황 제출.

□ 기술심사담당관 : 4건

1. 22년도 공기적정성 심의내역
2. 300억 이상 대형 공사장 현황
3. 건설신기술심의 내역 및 위원현황
4. 설계변경 횟수 및 변경금액 상위 10건에 대한 사유 및 내역

□ 서울기술연구원 : 11건

1. 대리기사 비용 청구내역
2. 관용차량 운행일지
3. '22.4.1.~10.30. 카드사용내역
4. 광역단위 노후 건축물 기술개발 관련 채용계획 등 내부결재 문서

5. 혁신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6. 2022년 채용 관련 심사위원 명단
7. 연도별 기술연구원 실적
8. 연도별 용역 수행내역
9. '19.6월 이후 정관변경사항 내역
10. 성범죄 관련 인사규정 개정 내역
11. 핫라인 접수 세부내용 및 사건조치 후 경과내용

8. 주택공간위원회

----- 104건

주택정책실 : 19건

1. 최근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와 금액, 회계장부
2. 조합직접설립 관련 발송 공문
3. 공공지원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기준
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현황
5.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주차 차량현황
6. 도시건축전시관 파트너스시스템 관련 문제점
7.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관리자 현황
8.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현황
9. 청년주택 공실현황
10. 뉴타운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전체 현황(자치구별 대안사업 여부 포함)
11.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관련 구역별 보조금 사용결과 및 집행현황 중
장위9, 제기5 세부내용

12.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황 및 실적
13. 최근 3년 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자치구 매칭비율 및 최근3년간 구조례 미개정으로 인한 예산 미편성 자료
14. 다가구 매입임대 연도별 공급자료
15. 매입임대주택 관련 '12년 이후 서울시 정산금과 5년간 정산계획 및 '19년 이후 정산계획
16. 모아타운 64곳 자치구별 현황(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등 구분된 현황)
17. 사회주택 관련 리츠2호 국토부와의 협의내용
18. 역세권 청년주택 세어형 공실 관련 현황자료(공공임대, 민간임대 구분)
19. 각 구청에서 서울시에 상정된 각종 심의 안건(구역지정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 접수 일자, 계류 중이면 그 사유, 지연일수 등을 작성하여 제출

미래공간기획관 : 14건

1. '건축정책위원회 소속 위원이 서울시 용역을 수행한 현황' 제출 자료 (p.594, p.1,092)가 다름, 자료 보완 후 재제출할 것
 - p.1,092 자료에 4건(김OO 2건, 홍OO 2건)이 누락됨
2. 용산국제업무지구 UAM(도심항공교통) 계획 관련 협의자료
3. 서울광장숲 조성 추진계획 시장방침
4. 최근 3년간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예산현액, 세부 집행내역, 불용액, 불용 사유
5. 최근 3년간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해촉 명단 및 사유
6. 마을지도 구체적 내용 및 자료
7.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자료 보완 제출
8. '22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 집행자료(연내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포함)

9. 중랑차고지 고도화방안 검토자료 일체
10. 기부채납 시설 총 277건 현황자료 제출
11. 정릉 공영차고지 추진 전반에 대한 자료
12. 전통시장 건축혁신 컨설팅 관련 총괄건축가 자문 주요 요지, 참여자 명단
13. 전통시장 추진방안 보고자료
14.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실과의 협의내용 및 결과

디지털정책관 : 12건

1.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부서별 적정, 예산조정 등 심사결과
2. 스마트시티 특구 탈락 차순위 자치구 사업이 당초 방침서대로 시민체감 스마트 서비스 대상 사업으로 우선 검토되지 않은 사유
3. 2021년 구로구에 스마트폴 116개소 집중 설치한 사유
4. WeGO 사무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외부강의 내역, WeGO 성과평가 현황, 취임 이후 사무총장 실적
5.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방침서 및 이태원 참사 현장 CCTV영상
6. CCTV 설치운영 관련 목적별 설치현황자료에서 투자기관에 대한 세부현황 및 용산구 CCTV관제센터 운영매뉴얼, 근무일지, 일일보고자료, 또 자치구 CCTV관제센터 경찰관 업무 및 근무형태, 관련규정 및 '22년 CCTV 자치구별 예산 지출 현황
7. 서울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 전문인력 충원방안
8. 복지시설 공공와이파이의 설치 편차가 심한 이유
9. 정보통신공사업 업체별 행정처분 건수, 매년 반복되거나 체납되는 업체 현황
10. CCTV 설치운영 관련 목적별 설치현황자료에서 투자기관에 대한 세부

현황 재요청하며, CCTV 보조금 대비 설치 대수가 다른 이유 및 보조금 분배기준 등을 설명해줄 것

11.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관련 사업 내용 및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12. WeGO 사무총장 평가위원 명단, 사무총장 외부강의 신고 및 수당 수령 여부, 2021년 총장 취임 이후~12월 말까지 업추비 내역, 3년간 WeGO 입퇴사 내역

□ 서울주택도시공사 : 52건

1. 중랑 패션봉제 등 스마트앵커시설 조성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대한 개선 요청
2. 영구임대주택은 타 임대유형 대비 입주까지 대기가 상당히 소요되는 편임.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3. 과거 전임 사장 시절의 임원 중 현 사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 임원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코드를 맞추어가며 업무를 추진할 필요
4.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 올해 실적이 저조함.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와 적극 소통하여 매입임대 정책도 협력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람.
5. 올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약 8천호 인데, 그 중 건설임대는 21호 뿐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SH가 추진하는 고품질 임대주택에 입주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 영구임대주택을 새롭게 건설하고 공급할 계획 없는지 검토 필요
6. 매입임대주택 미정산 금액에 대해 서울시는 263억씩 5년 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차액금 상환에 대한 상호협의 필요
7. 장기미임대 공가 중 매입임대, 도시형생활주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나 방치되고 있음. 공가 발생 시 별도 입주자 모집공고 없이 대기자가 입주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8. 가든파이브에 입점한 업체 8,370개에 대한 현황 자료 파악이 부족함. 관리동별, 층별 등 현황자료 관리 철저히 할 것
9. SH공사 홈페이지에 사업추진 현황이나 결과가 누락된 정보들이 다수 있음. 열린경영,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있음.
10. 육상부 코치와 선수 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기 바람.
11. 최근 3년간 소송 건수가 999건이며, 소송비가 55억원임. 불필요한 소송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소규모 매입임대주택 관련 자율관리대상이 80%에 달하고 있어 관리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범위탁 자치구로 송파, 은평, 동대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하기 바람, 직접관리를 위한 인력규모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13. SH공사 고문과 관련하여, 고문이 임기가 짧게는 3~6개월부터 1~2년까지 임기가 제각각인데, 이에 대해 개선 조치가 필요함
14. 고덕강일 원가공개와 관련하여 수익률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기 바람
15. 혼합단지 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함. 분양층 입주자대표의 갑질과 전횡이 사실일 경우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6. 마천지구 내 미활용 학교용지에 주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 해당 사실 확인하여 추후 보고할 것
17.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인접토지 관련 보행자우선도로의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권익위에서 변경 권고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 할 것을 은평구에 의견 표명한 바 있음. 향후 이에 대해 조치해 주기 바람.

18. 역세권청년주택의 선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9. 임대주택 월패드(홈네트웍) 해킹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게이 트웨이가 설치된 장비 현황을 파악할 것
20. 이웃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이동하는 경우 같은 단지로 이동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1. 세텍, 은평혁신파크, 용산정비창 등에 반값아파트 공급 등 추진 일정과 계획, 계속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22. 매입임대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미추진 여부에 대한 SH공사의 확실한 의견 표명 필요
23. 자금 유동화, 회계기준 변경, 보유세 제도 개선 등 SH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노력 외에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요구
24. 올해 공사채를 5천억 발행하였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지방공기업은 자체자금으로 상환하도록 한다는 발표가 있었음. 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인지 검토를 요구함
25.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관련 코레일과 서울시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울시에서 부지조성과 인프라구축에 5조원 투입 예정이라는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재원조달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보고할 것
26. 서울의료원, 세텍(SETEC), 은평혁신파크, 용산정비창, 성동구치소 반값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
27. 공공재개발 장위8구역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
28. 2012~2022년 현재까지 전현직 임원현황, 직책, 성명, 직급, 연봉, 퇴사일자, 입사일자 포함자료 제출
29. 현직 처장, 본부장의 성명, 직급, 연봉, 임기, 입사일자 등 자료제출
30. 태양광사업 입주민 자진철거 현황 자료제출
31. 2012년부터 연도별 임대주택 매입비 및 서울시 매입임대 정산금액 일체

와 정산내역, 2019년 이후 받을 정산금액 및 정산계획 자료제출

32. 성비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및 배치현황 자료제출
33. 모아타운 38개소 선정완료 대상지 현황 자료제출
34. 매입임대주택 설계사사무소 중 다움건축사사무소의 최** 건축사의 청신호 건축가 여부 자료제출
35. 영구임대주택 등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설계획 자료제출
36.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설치계획 자료제출
37. 고문현황(이름 임기 업무분장 급여 등) 자료제출
38. 가든파이버 관리업체 관련, 3개 대표이사의 이름·기간·출신 등 현황 및 정기관리단 집회상세내역 자료제출
39. 은평센터 신축공사 제외한 최근 5년간 아래 회사의 SH공사 발주공사의 계약내역 자료제출
 - (주)다짐, 대성이엔씨(주), (주)대호하이티에스
40. 임대주택 공가현황 자료제출(보완제출)
41. 최근 5년간 공가 보유세 현황 자료제출
42. 가든파이버관리업체 관련 집회 상세내역 2018~2020년 자료제출
43. 매입임대 장기공실 현황 자료제출
44.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경감을 위해 SH가 추진한 사항 자료제출
45. 임대주택 월패드(홈네트웍) 관련 월패드 해킹 피해사례 및 전수조사 여부, 게이트웨이가 설치된 장비현황 파악 여부, 설치 및 미설치 비교하여 자료제출
46. 마곡산업단지 외부위원 자문 보고서 자료제출
47. 주거이동 사유가 이웃갈등이면서 같은 단지로 이동한 세대의 사유서 자료제출

- 48. 주거이동 사유가 고령 질병이면서 같은 단지로 이동한 세대의 주거이동 현황을 층수 표기하여 자료제출
- 49. 용산정비창 기본협약서, 투자지분율이 나온 실시협약서(설계계약서 포함), 30여 차례 실무협의 회의록 자료제출
- 50.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대책 자료제출
- 51. 국민임대에서 장기전세로 전환분 관련, 사장방침으로 국민임대로 재전환 하였는데 관련근거 자료제출
 - 국민임대로 재전환시 서울시와 협의(또는 합의)한 사항 포함
- 52. 임대아파트 내 공실상가현황 자료제출

서울디지털재단 : 7건

- 1. 디지털재단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등 제출
- 2. 계약직 채용 관련 규정 제출
- 3. 구매 및 불용 포함 재단 노트북 보유 현황
- 4. 1,2급 채용 과정 관련 자료
- 5. '22년도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
- 6. 전년대비 사업수입 감액 사유
- 7. 비정규직(파견직) 채용 및 운영 근거

9.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71건

도시계획국 : 24건

- 1. 수변지역 유희시설 관련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면 서울시의회에 공유하고 기타

필요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청취할 것

2. 지목이 '대' 이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최초 지정 기준과 비오톱 해제 기준 또는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바람
3. 목동1~3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20% 건설 조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는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되었던 다른 지역의 재건축 또는 지구단위계획 시의 조건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4.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 내년 1월경 별도 중간보고 해주기 바람
5.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용역 관련 주요결과 및 가이드라인 자치구 시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6. 용산 전자상가에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보고 바람
7.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지난 5년간 위원 명단, 출결상황, 지급수당 내역, 지난 3년간 상정된 안건 처리내역
8. 높이관리기준 시뮬레이션 검토 용역 내용
9.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중점관리사업 추진현황
10. 상업지역 배분계획 대비 반영이 저조한 지역현황 및 사유
1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성동구 송정동 방향 환기소 위치
12. 16년 6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용역 추진 중, 경부선 철도 지하화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점검 필요
13. 최근 2년 용산전자상가 위주의 상가 지분쪼개기 번지수와 내용
14. 최근 1년간 서울시 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완화) 현황 파악 필요
15. 전세가격상담센터 추진실적
16. 역세권활성화사업 사업별 세부추진현황 상세
17.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이후 보완된 사항
18. 서울플랜 추진위에서 논의·결정된 내용과 오시장 이후 보고된 내용

19. 경부간선 지하화 용역 중간보고 자료
20. 경부간선 지하화 용역 중간보고 자료
21. 용역 개선방안 20년 9월 및 21년 4월 용역방침서 제출
22. 2021년~2022년 준공된 기술용역 보고서 파일과 책자
23. 지난 10년간 준공된 용역 중 비공개 사유가 해소된 후 공개된 사례
24. 서울시 전체 철도 관련 용역 대상지 및 주요 계획사항을 전도에 표기하고, 각 사업별 차별성과 연계성 정리하여 보고 바람

균형발전본부 : 15건

1. 광화문광장 운영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적정 기준
2. 남산 예장자락 공원 방문객 및 시설 이용현황, 곤돌라사업 2차 추진 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 자세한 사유
3. 도시재생사업지 별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앵커시설 설치 현황, 마중물 사업비 집행 내역 자료
4. 남산 케이블카 최초 사용승인 근거, 관련 문서, 케이블카 연장 시 기준 근거 자료, 케이블카 운영 시 독점운영 근거 및 인허가 자료
5. 남산예장자락 조성사업 관련 자료 일체
6.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물
7.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배분 변동 현황
8. 잠실 돔구장 도입 추진 경위, MICE 단지내 전시컨벤션 콘텐츠 구성 및 운영계획
9. 전통시장형 도시재생사업 중 용답시장 관련 자료
10. 혁신파크 설립계획 발표 관련 기자설명회 연기 사유 등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자료
11. 광화문광장 허가제와 관련한 법률자문 답변 내역, 광화문광장 허가제 이후 신청

및 반려 현황

12.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거리 기본계획용역 자료
13. 서울 녹지생태도심 관련 시장 발표자료, 보도자료 및 현재까지의 추진 내역,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운영 현황
14.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운영 세부내역
15. 도시재생 재구조화 보도자료(2021.6.18) 이후 1년간 재구조화 추진 현황

□ 디자인정책관 : 12건

1. 아현고가 철거 후 조형물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보고 바람
2. 균형발전본부에서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앞에 수변공원을 조성 중인데, 디자인정책관에서 가져와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균형발전본부와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3. 디자인 서울 2.0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기 바람
4. 약자동행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차이점을 보고해 주기 바람
5. LED 간판 개선사업 관련 2019 ~2021년 자치구별 대상점포 및 제작업체 현황 자료제출
6. 소외낙후개선사업과 특성경관조성사업, 각 사업 성과 자료제출
7.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결과 자료제출
8. 2018년부터 현재까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대비 시제품 현황, 스타트업 선정업체의 사업내용, 상용화 결과물 자료제출
9. 디자인서울 2.0 현재까지 추진경과, 추진 방향성 자료제출
10. 좋은 간판 공모전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자료제출
11.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위탁에서 디자인재단 고유사무 전환사유 관련 자료 제출

12. 스마트보안등 기능 관련해서 '스마트' 라고 이름 붙인 근거, 기능 자료 제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4건

1. 약자동행지수 학술용역 과업지시서, 착수보고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
2. 약자동행 관련 해외 사례조사 보충자료
3.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 중 기존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했던 카테고리 속하지 않는 사업 리스트
4. 약자 소통 현장방문 계획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

미래청년기획단 : 8건

1. 청년대중교통 사업비 1차, 2차 참여자 모집현황, 6개 카드사 업무협약서
2. 각종 위원회 상세현황
3.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단체 및 사업내용
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12개 사업항목 관련 자료
5. 천호지하차도 용역 타당성 자료
6. 미래서울전략회의 목적, 운영계획
7. 웰컴박스 관련 법률 검토자료
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비 지출 현황

서울디자인재단 : 8건

1. 디자인행정관 업무분장도
2. DDP디자인스토어 청년 디자이너 개발상품 판매현황, DDP 멤버십 회원 유치 현황, DDP 시설개보수 업체명 등 현황

3. 서울디자인재단 각종 위원회 운영 근거
4. 2018년부터 현재까지 DDP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5.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기업 임원 현황
6.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입주기업(25개사) 회사소개서, 판매품목, 매출 등 자료
7. 2023년 예산 구성 현황
8. 서울라이트 민관협업체 참여기관 명단 및 운영현황

10. 교통위원회

144건

□ 도시교통실 : 56건

1. 스마트 쉘터를 계속 확장보급을 할 계획이 있는지?(예산등 자료)
2. 한정면허 지원 근거 조례 자료(누가 언제 발의, 내용)
3. 도시교통실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자료제출
 - 이름, 강의명, 강의료 포함
 - 업무시간 내 출강한 경우, 강의료 반납에 관한 서울시 규정 및 반납상황, 반납액 포함
4.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 접수 절차, 신고 이후 처리 결과 (법령 위반일 경우 몇 조 위반인지 표기), 향후 대응방안
5. 까치산역 1역사 1동선 공사현황
6.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카메라 관련 예산, 회사별로 카메라 기능/해상도, 1084대의 최근 3년간 단속실적/얼마나 부과했는지/이용실적
7. 재생자전거로 인한 수익 / 자전거 한 대당 재생 수익단가 / 재생자전거 판매 수익단가
8. 준공영제 재정지원 시 노조에게 재정지원 해주는 항목 및 최근 5년간 연도별 버스노조 장학금 지원 예산 및 집행 결과, 지원 방식, 지급 대상(개인정보 마스킹)

9.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액 부족분 대출액 / 매년 부족금액 대비 이자
10.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 사용권한 부여 현황(신청자, 신청내용, 승인현황, 미 승인 사유, 사용 권한 판단 주체, 기준,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범위)
11. 올빼미버스 노선 선정 시 분석한 빅데이터(최초 도입시, 올해 4월, 12월(예정) 시기별 빅데이터 분석자료 및 결과)
12. 법인/개인택시 운영현황(개인택시는 부제별), 심야시간 시간대별 운행 대수 (요금 발표 전후 비교)
13. 택시회사별 하반기 신규 기사 취업/퇴직 월별 현황
14. '20.9월 서울시-공유PM업체 MOU 체결 후 업체 보험가입 현황 관련 자료
15. 외부강의 출장비 지급한 18건 증빙자료 *A의원 요구
 - 출장 및 연가 미처리(조회불가 포함)한 출강자 세부 증빙자료
 - '여비' 미수령 증빙자료를 말함
16. 암사동 고덕로1길, 아리수로 자전거도로 설계 및 준공 승인 부서 및 관련 자료 제출 바람
17. 심야버스 확대시 기존 노선 혼잡도 분석 자료
18. 올빼미버스 전체 노선, 신설노선, 노선당 이용객수, 차량 수, 배차간격
19. 연도별(월별) 버스노선 승객 증감추이 분석 자료
20. 바닥신호등 관련 자료
 - 자치구별 바닥신호등 계약업체 및 설치 연도
 - 바닥신호등 예산현황(연도별, 자치구별, 시비/국비/구비 구분, 본예산/추경/의원발의 구분)
 - 계약현황-계약방식, 낙찰업체업종, 낙찰업체특허현황
 - 유지보수현황(하자보수 끝난 건), 계약 선정방법, 계약금액)
 - 바닥신호등 고장건수, 화재 포함 안전 현황
21. 위례신사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수요조사시 질문항목, 조사대상, 결과, B/C값

22. 2011년 이후 증차된 마을버스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17억원이 든다는 버스정책과장의 산출근거
23. 서부선의 정류장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의 확인
24.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지원금액('19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25.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외 지원금액('19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26.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매출 총계('19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27.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초계약서, 계약서 갱신 내역
28. 표준운송원가 각 목별 원가산정 산출식 및 금액
29.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별 단축버스 현황
30. 외부강의 출장비 지급한 18건 증빙자료 *B의원 요구
 - 출장 및 연가 미처리(조회불가 포함)한 출강자 세부 증빙자료
 - '여비' 미수령의 증빙자료를 말함
31.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교통공사 본부장 채용시 채점표
32. 국정감사 시 공기질 개선 지적과 관련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3. 최근 5년간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계획 대비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 연도별 예산 편성 및 미편성 사유, 지연설치 사유
34. 최근 5년간 열차 객실내 공기개선시설 설치 예산 편성 및 미편성 사유, 계획 대비 설치현황, 향후계획, 지연설치 사유
35. 최근 5년간 승강장, 터널, 객실 내 미세먼지 측정결과 최대/최소값
36. 지하철 공기청정기 내구연한, 관리운영비, 필터 교체 현황
37. 통합관제센터 9호선 부분 같이 부담기로 했다가 서울시 재정지원하기로 변경한 경우
38. 설계변경 후 1~8호선 통합관제센터 발주방안 보고했는데 반려한 사유

39. 시내버스 사모펀드 관련 국토부 지침
40. 도시철도 건설 시 역사의 지정과 관련된 수요조사 및 산정과 관련된 자료 보고
41. 별내선 수요 예측 자료
42. 2020.1.1.부터 2022.11.1.까지 서울시장이 도시교통실에 지시/요청한 건수, 내용
43. 현재까지 공공자전거 요금 감면 현황
44.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매각 회사 현황
45. 택시 보호격벽 연간 설치 대수 등 현황
46. 올빼미버스 전체 대수, 운행 대수
47. 최근 3년간 교통실 산하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48. 연세로 관련 서대문구)서울시 요청 자료 원본
49.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행 시 감사원 지적(수송원가 재산정 관련) 내용
50. 보행자 우선도로, 공동주차장 자치구에 공문 보내서 선정하는데 절차, 선정기준 결과
51. 공항버스 지원 현황 및 근거
52. 공항버스 재난지원금 25억에 대한 산출내역
53. 공항버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업체에서 받은 기초자료(재무제표 등)
54. 민간 위탁 주차장 현황 제출 및 보고
55. 장애인콜택시 평가항목 변경 관련 보고
56. 메트로 9호선 대체투자비 정상 집행내역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9건

1. 동북선 관련, 동북선에 대한 재무제표, 임원 배당 월급 명세내역, 투자자들 배당내역 자료
2. 동북선 관련, 103정거장 출입구 추가설치 가능여부 검토결과를 문서로 직접

제출 요청

3. 동북선 노원철도기지 지장물철거요청과 관련된 공문
4. 현재 진행 중인 도기본 소송에 관한 현황(비용, 소장 등의 자료 포함)
5. 피감기관의 업무분장표
6. 진접선차량기지 건설사업 공정별 향후계획 보고 바람
7. 진접선 공사는 별도의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므로 안전 대책과 매뉴얼
8. 민원 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
9. 동북선 관련, 동북선 사업 자금 대출 관련 선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대출을 먼저 받은 이유와 건설 관련 업체가 사모펀드 주주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 서울교통공사 : 44건

1. 서울교통공사 자산 총 정리(간단명료하게 한 장으로 작성, 부채, 이자, 국가지원 등 포함)
2. 열차지연 환불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벌 내용 확인
3. 지하철 연착과 관련된 통계(건수, 지연증명서 발급건수 및 환불액)
4. 위원회 명, 위원수, 개최수, 인원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출
5.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21, '22년 재무재표
6. 교통공사의 자산 및 재무상태 표로 제출
7. 유실물센터에서 공사지정 사회적 기업으로 무상기증되는 유실물 현황
8. 유실물센터에서 무상기증하는 유실물 목록 및 자산가치 산정
9. 엔지니어링 내에 이분화되어 있는 급여현황(서비스직원과 타직원 간의 임금 및 수당비교)
10. 교통공사 차량의 광고수입 및 수익배분상황
11. 미세먼지저감사업 검증절차 로우데이터

12. '18~'21년 팀장급이상 초과근무수당 집행 현황
13. 비명 감지시스템 운영현황(종료 사유)
14. 2021년 결직 위반으로 적발된 황**과장의 부동산 온/오프라인 강의 실시내역, 강의자료, 포스터 등 홍보자료 모두 수집해 제출 바람
15. 역사혼잡도 관련 연구용역보고서(2017년~2022년)
16. 자회사 승강설비 개통 후 하자기간 처리방법
17. 자회사 승강설비 고장 현황(당일 조치, 3일 이내, 7일 이내, 7일 이상 구분)
18. 공사통합효과관련 비용절감 자료 일체
19. 지하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감사 등 결과보고서
20. 퇴직자 재취업관련 자료
 - 권익위 청년컨설팅 결과보고서
 - 교통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고용내역 일체
 - 퇴직자 접촉시스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 2012년~2022년 정년퇴직자 재취업현황
 - 자회사 재취업관련 내부규정
21. 무궁화호 탈선 진상조사, 조사보고서 등 제출
22.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관련 반환건수 및 금액
23. 탈선사고 보고문서 및 조치사항
24. 2호선 신조차량 관련 종합적 효과분석자료 일체
25. 사내근로복지기금 3년간 예산, 결산서, 회계검사 보고서
26. 공사채 유찰 현황(관련 공문, 유찰 관련 공문)
27. 주거대출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과정 문서 일체
28. 공기청정기 설치현황(보성전자, LG 등 제조사·업체 구분)
29. 양방향집진기 설치현황(역사별 설치금액, 설치예정 포함)
30. 본선 환기실 설치내역(설치예정 포함)

31. 각 역별 필터 교체 상세 현황
32. 공문 및 붙임문서(인사처-7358, 인사처-7443)
33. 최근 5년간 인재개발원 임직원 임금 현황
34. 통합관제구축 관련 해외 출장 경비 등 지출내역
35. 최근 5년간 인재개발원 인력변동현황 및 업무 분장, 강의 현황, 인력적정성 여부
36. 통합관제구축 관련 해외 출장 경비 등 지출 내역
37. 2017년~2022년도 각 부서별 감사 접수일자, 감사명, 진행결과 일체(접수 안하고 감사해서 자체 처리한 것까지 모두 포함)
38. 도봉차량기지 주취자 난동 사건 관련자 징계 및 재심청구 현황
39. 노조 간부 징계현황
40. 지하철 공습경보 대피소 지정 역사 현황
41. 군자차량기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신축개요, 역대 사장, 기술본부장, 처장, 팀장 결재 공문서, 회의록, 도면 포함 자료 일체
42. 공기질 개선 장치 부착 필터 재고(필터종류, 월필터소요량, 교환/세척용 구분, 교환주기 등)
43. 설계가 변경된 사업내용과 금액변경 관련 이유
44. 경영본부 업무용 차량 보험 관련 공고문 일체

□ 서울시설공단 : 35건

1. 최근 5년간 이사장 특명 사항 자료
2. 최근 성비위 관련 감사 자료(경과 및 결과)
3. 폭우시 자동차전용도로 통제 매뉴얼 및 시스템상 발생한 문제점 관련 자료
4. 공단 정관
5. 최근 3년간 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명단, 급여, 수당

6. 고척스카이돔 '책보고' 통해 200억 원의 예산을 4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
7. 최근 2년 시간대별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
8. 따릉이 집중관리대여소 운영 관련 빅데이터 분석자료
9. 따릉이 이용서버 및 자료 저장 관련
10. 외부강의·겸직 시 수입 상한액 제한 및 관련 기준 지침 수립 후 보고 바람
11. 외부강의 출장비 미수령자와 수령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중 수령자의 증빙자료 제출할 것
12. 부당해고·부당징계 건 노동위원회 2건에 대한 판결문, 심문회의 결과보고 및 조치결과
13. 따릉이 QR 단말기 부품 및 배터리교체 입찰 등 조달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보고
14.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운영시간
15.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유지보수 내역
16. 어린이대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비율
17. 장애인콜택시 모바일웹 대체텍스트 정보 미제공 관련 향후 개선계획 추후 보고
18. 전 상임감사에게 지급된 성과급 현황(임기중)
19. '해임' '파면'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성과급 지급 현황(최근 5년간)
20. 징계대상자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
21. 최근 상임이사 임원모집 공고, 서류합격자 명단, 서류합격자 명단 중 범죄경력 및 징계 현황
22. 직장 내 스토킹 방지 관련 방침 수립 후 제출
23. 여성가족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공단 매뉴얼 및 지침
24. 최근 3년 간 외부감사 신분상/재정상 조치 현황
25. 행복큐 수의계약 현황(연도별, 계약금액, 품목, 수량 등)

26. 신규 채용시 예비 합격자 수, 예비합격자 유효 기간 채용별/직종별 동일 여부
27. 최근 5년간 가족수당, 경조사비 부당 지급 현황
28. 지갑 없는 주차장 인력운영 현황(전/후 비교, 각 주차장별 구분)
29. 대공원 순찰 방역 로봇 관련 업체명, 금액, 보증기간, 문제점
30. 대공원 후문매점 지속적 유찰 관련 현황 추후 보고
31. 고척돔 청소 로봇 관련 업체명, 금액, 보증기간, 문제점
32. 지하도상가 광고 업체 현황(업체명, 계약방식, 금액, 계약기간, 광고 위치)
33. 경영본부 업무용 차량 보험 관련 공고문 일체
34. 정보통합유지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자료 일체(공고문 등)
35. 매년 콜택시 차량선정 기준 변경 사유(심의위원 명단, 위촉 과정, 심의일자, 심의위원 선정 평가방법)

11. 교육위원회

----- 151건

서울시교육청 : 130건

1.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예비학교 선정 기준과 향후 로드맵, 대학 교육 네트워크 관련 2017년에 교육청이 발표한 보고서 자료
2. 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운영 학교 중 하나가 “건국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건국대학교에는 현재 위와 같은 대학원이 부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할 것
3. 종교 교육을 시행하는 종립학교 중 대체 과목 등이 부재한 9개교에 대해 후속 조치 방안
4. 징계에 따른 초·중·고교 교장 및 교감의 강등·전보 현황
5. 우선순위사업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자료
6. 그린스마트스쿨 선정 및 사업 추진 관련 집단 민원 자료 일체

7. 갑질 신고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대면조사 과정, 절차 등의 일체 자료
8. 2021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시 합격자 외 6명에 대한 심사 서류, 약력을 포함한 심사위원 명단 등 채용 서류 일체
9. 정보공개 관련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 및 공개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및 제재 내용, 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자료
10.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교육행정지원시스템 감사지적사례 자료집
11. 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12.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추진 계획, 자문 의견 수렴 내역
13.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심의 토론회 등 전체 속기록 및 결과 요약정리 자료
14.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벌 수위, 기준에 관련된 자료
15. 국제교육문화교류지원 사업 등 국제교류 협력사업 운영현황
16.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에 대한 자료
17.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남용에 대한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
18. 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 규정 및 사례 현황
19. 최근 3년간 교직원 복무 관련 공익제보센터의 접수 내역 및 조치 결과
20.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안전 점검 실시 현황
21. 2023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22. 학교협동조합 및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계획서 등
23. 서울형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
24. 서울시 학생수, 교원수 현황 관련 자료
25. 학교 BTL 사업자 현황과 시설 개보수 내역
26. 학교 협동조합 교원 겸직 현황 및 상근/비상근 여부, 급여 지급 여부
27. 학교 운동부 현황 자료
28.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29. 현 대변인 임용 이후 정책안전기획관이 대변인과 협업한 내용에 관한 자료
30. 대변인-정책안전기획관 간 협의로 실시 예정인 여론조사(교육회복 및

기초학력 관련) 문항 및 결과

31. 정책안전기획관은 최근 3년간 시행된 학생 대상 안전교육 개선 실적 및 기획관 부임 이후 안전교육 개선 관련 조치사항
32. 교육청 차원의 재난 대응 관련 업무 매뉴얼
33.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간담회 또는 연구발표회 관련 자료
34.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취업률 및 진학률 제고 목적으로 시행된 학과 개편 등의 현황 자료
35. 최근 3년간 강당 및 체육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배정 예산내역
36.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고 설치된 드라이비트가 존재하는 학교 현황
37. '서울형 작은학교'의 성과와 주요 사례(교동초, 제동초)
38. '교실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용역'의 추진 현황 및 결과
39.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 복합화 시설 구축을 추진 중인 4개교에 대한 현황 자료
40. '더불어'가 사용되는 사업 현황
41. 국적별 다문화학생 현황, 다문화학생 민관협의체 운영 현황
42. 나이스시스템을 이용한 외부 강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 자료
43. 외부강의 신고서 및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사항 보고
44. 겸직허가를 받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준수 여부(실제 겸직 내용과 허가 내용이 같은지,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준수하는지 등)
45. 교원 등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겸직 허가 관리 체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
46. 금년 중 학교 프린트 설치 현황(개방형과 폐쇄형을 구분) 및 향후 설치 계획, 개방형 3D 프린터를 밀폐형으로 개선한 사례 및 학교 현황, 3D 프린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등
47. 지난 5년간 연수자에게 시행한 교장 자격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
48.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별 징계양정기준
49.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원 징계 현황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기타'라고 기재된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본질의 시 질의했던 징계 사례에

대한 상세내용

50. 최근 3년간 특정 업무(급여, 세입 등)에서 저경력자의 퇴사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했던 인사원칙, 대응방안
51. 기관별 관용차 운전원 배치 현황, 임금 산정 관련 규정, 호봉 산정 시 경력 인정 기준 등
52.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53. 다같이학교 프로그램의 외부 위탁업체 공개입찰에 관한 자료(절차, 선정방식 및 결과, 평가위원 명단 등)
54. 교장협의회 관련 행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출장비 과다 지급 사례에 대한 조치 결과
55. 관내 초등학교 근처의 신호등, 횡단보도, 인도 설치현황
56.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 증가 현황과 올해 1학기 재시험 횟수 증가 원인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
57. 학교 신설 요건 및 중앙투자심사 개요(심사사항 등)
58.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자료로 제출
59. 학교 용벽에 대한 안전 점검표 및 안전 점검 결과
60. 방과후강사 1차(예비) 심사계획 및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61.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 현황(소속 위원명 및 직위, 위촉 기간, 위촉 기준 등을 포함)
62. 최근 3년간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횟수와 실적 등 감사내역, 지급받은 수당내역
63.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또는 재임용 현황 자료(추천 여부 및 추천단체, 임용일,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등)
64. 교육공무직원의 교비 횡령과 관련한 징계심의 의결서
65. 휴대폰 통신 요금 지원 및 단말기 지원금 지급 관련 근거 규정
66. 노후 책걸상 교체 등의 목적으로 사립초 및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한 예산 현황
67. 최근 3년간 국외연수여비가 지출된 소속 공무원의 국외연수 현황(참석인원, 교육 성과 등)

68. 최근 3년간 교육감의 과태료 납부 내역
69. 명예퇴직 후 1주 이내에 동일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 교원 현황
(해당 채용 공고일, 지원자 수, 퇴직 신청일 및 실제 퇴직일 등)
70. 교육청의 최근 3년 치 부서별 A4용지 구매 내역
71. 최근 3개월간 총 300만원 이상 겸임 수당을 수령한 교원, 석·박사 연구 참여율 대비 수당 수령 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
72.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73. 서울교육연구년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정산 방법 및 공무 국외여행 관련 현황 자료
74. 교육청이 제작한 통일교육 관련 학생용 교재 등 자료 일체
75. 생존수영 VR 교구와 장비 구매 세부 내역
76. 수업 중 교원의 정치편향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중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9건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과 조치 결과
77. 채식 급식 운영현황 및 사업 방침서
78.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거 교육의 교재 책자를 포함 하여 관련 자료 일체
79. 학교 화변기 교체를 주제로 진행된 설문조사 내역
80. 운동부 인조잔디 T/F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결과
81. 유튜브 홍보 영상에 출연한 유명인에 대한 출연료 집행 예산
82. 서울시교육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련 예산 및 운영 현황 자료
83. 서울교육소식의 우수보도자료 선정 기준
84. 최근 3년간 교원 대상 안전교육연수 진행 현황
85. 2022년 연수원 시설 대관 내역
86.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 프로필, 2022년 교권 보호위원회 운영실적
87. 수서 신혼희망타운 내 학교(울현초)의 과밀학급 문제로 진행된 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및 향후 조치 계획
88. 이태원 참사를 사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문

현장 등 교육감의 동선에 관한 자료

89.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출할 것(위원 구성 및 명단, 위촉 방법, 연도별 운영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수당 지급 근거 등)
90.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받은 청렴서약서 일체
91. 서울교육아이디어기획단 운영현황(운영 계획서, 학술용역연구 계약서 원본, 연구자 인적 사항 및 표절률 검사 조항 삭제에 대한 표절률 등)
92. 최근 3년간 시행된 마을 거버넌스 관련 기관 및 단체, 인력 등의 선정 방법과 과정 등에 관한 사항
93. 학교 안전교육 7대 분야를 기준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 현황
94. 학교평등예산제 예산 집행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및 평가지표
9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록 및 회의 운영실적
96. 서울희망교실 사업의 학생 선발 기준, 프로그램 운영현황, 실태 점검 사항에 대한 자료
97. 자치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34조 등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사례
98. 2021~2022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평가지표
99. 2022년 종합감사 진행 현황
100. 혁신학교 선정 기준 및 유형별 운영현황, 성과 지표, 혁신자치학교 운영 관련 성과분석연구 최종 보고서
101.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와 기관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차이점과 기관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의 운영실적
102.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과정에 참여한 교원들의 성과평가 자료
103. 부모행복교실 참여율 및 유아 부모교육 관련 지원 현황
104.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영심의위원회,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경력 포함한 위원 명단, 위촉 기준, 활동 내역,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105. 교원의 조기, 일시 복직에 따른 기간제 교원 해고 건수, 이로 인해 받

생한 분쟁 및 민원 현황

106. 교원의 조기, 일시 복직에 따른 기간제 교원 계약 해지 시 서울시교육청의 권익 보호 절차와 제도 개선 방안
10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단체 선정 기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 명단 및 지원 규모, 2021년도 사업 성과 분석 결과 등
108.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사업 관련 프로그램 및 단체 등의 선정 방법과 기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및 성과 평가 방안, 최근 5년간 선정 현황
109. 교육지원청별 학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운영 현황
110. 도서관 다문화가정 지원, 독서문화지원, 고전인문아카데미 사업, 기관별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에 대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내역
111. 사회적기업 및 ESG경영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 선정기업 현황
112. 2022년 과밀학급 현황 자료
113. 유휴교실 활용 가이드라인 관련 용역 진행 현황
114. 최근 3년간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화 감수성,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고 교원연수 자료 및 실적
115. 최근 5년간 지역별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초중등 협력학교 현황(학생 수, 지원학생 수 등)
116. 공영형 사립학교 선정위원회 회의록, 지정통보서 사본 및 현재까지 예산 지원 현황, 조건 미이행 시 불이익 관련 자료
117. 2023년 장애인 교원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관련 자료
118. 교육청 근무 직원 중 교육감 선거캠프 활동 이력이 있는 직원 현황
119. 징계 양정 기준 및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120. 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관련 속기록 등 일체와 공동위원장 운영 현황
121. 광고료 지급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
122. 종합감사계획 제출
123. 디бет 사업을 주제로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
124.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한 마스크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근거, 사업 진행 개요 등

125. 향후 관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신규 건립 계획
126. 학교석면관리컨설팅 사업 관련 학교별 업체 선정 현황(안전성 평가등급 포함) 및 예산 집행 내역
127.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28. 교육금고 계약서, 자금 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 금고 지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
129. 교육금고 심사 시 은행별로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 제안 내용을 제출
130. 인조잔디 T/F 구성 현황 및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중단 등의 정책 결정 개요

직속기관 : 19건

1. 최근 3년간 뉴쌤(newSSEM) 플랫폼 사용 현황
2. 학교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관리체계 현황
3. 교명 변경 시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조치 사항, 교명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학교 현황
4.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운영 현황
5. 교수학습지원센터 인력 및 재정, 운영현황
6. 최근 3년간 교직원 대상 성장 프로그램 관련 계획서, 실적, 예산 등 현황 자료
7. 2015년 이후에 설립된 연수원 현황과 현재까지 연수원 건립에 소요된 비용
8. 최근 5년간 근무시간 중 출강 여부 등 교직원의 연수원 출강 현황
9. 최근 3년간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교과목 운영 현황을 교원 공통과목과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10. 학부모 상담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11.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친환경농산물의 전처리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 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12.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컨설팅업체 선정 현황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 목록출
13. 친환경유통센터 가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4.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에 따른 재해 발생 시 책임자 구분에 관한 사항
15. 각급 학교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 및 비용 현황
16. 올해 진행된 살수용 세척차량을 이용한 공립학교 유리창(방충망) 먼지제거사업 관련 자체 사업 결과 보고자료
17.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진행한 정화조 및 맨홀 뚜껑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정화조 및 맨홀 관리 관련 사립학교에 배포된 안내 사항
18. 폭우 피해 학교 현황
19. 학교시설보수지원센터 지원 불가 분야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문항 및 결과

학교안전공제회 : 2건

1. 현재까지 전개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2. 최근 3년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

8 특 기 사 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 6건

□ 시의회사무처 : 2건

-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제한적인 감사기간과 감사권한 등으로 인해 사안의 실체를 모두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음 2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임.

① 서울시의회30년사 발간 사업의 관리 감독 의무 해태, 예산재배정 과정의 불법 등 부적정한 예산 사용 의혹의 건

- 서울시의회30년사 발간 사업 관련, 심각한 내용 표절과 과도한 집필료 지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함. 특히 의회사무처는 예산 4억원의 서울시의회30년사 발간 사업에 대해 착수 및 중간보고, 내용에 대한 검수 등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음. 또한 2021년과 2022년 총 2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서울역사편찬원으로 예산 재배정하면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누락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예산의 재배정)를 위반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등 해당 사업을 고의로 방치한 의혹이 있는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의회30년사 발간 관련 사업 관리 및 예산집행에서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 관계서류 :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22.11.15.) 해당 속기록
(박환희 위원장, 허 훈 의원 질의답변 내용)

②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방역수칙 및 복무지침 위반 재조사의 건

- 시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대학 출강, 시의원 자녀 결혼식 하위 직원 동원 등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의 근태관리 및 복무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에 방역수칙 및 복무지침을 위반하고 타 도에서 골프를 친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방역수칙과 복무지침 위반한 직원을 개방형에 임용하는 등 공평무사해야 할 사무처 인사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남.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중 골프를 친 직원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2020년 조사가 사실(2020년 9월 21일 12시 15분부터 17시 45분까지 강원도 횡성군 내 골프장 방문(한국면세뉴스, 2020.9.28. “횡성군청, 은평구 252번 확진자 관내 골프장 방문 알려”)과 달리 202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 장수군 골프장 방문 건으로 한정 축소 조사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 관계서류 :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22.11.15.) 해당 속기록 (허 훈 의원 질의답변 내용)

□ 안전총괄실 : 1건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 시 허위견적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부적정 수익계약의 건
 - 코로나19 발생 직후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는 마스크 구매를 하면서 허위견적서에 의한 구매를 하거나 특정업체와 수익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 서울기술연구원 : 1건

-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적정 사용 의혹의 건
 -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기술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1건

-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주요 공종 문제점에 대한 재조사의 건
 -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중 남·북단 성능 개선공사의 'PC 바닥판 제작·설치공사' 공종을 시행하면서 하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시행한 의혹에 더불어 재하도급업체가 폐업(세무서 직권) 중임에도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으며, 잦은 공법 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는바,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뿐만 아니라 '성산대교 성능 개선공사' 전반에 대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

□ 서울특별시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 1건

- 4개 물재생센터에 만연한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정제품 선정 및 계약의 부적정 사례 건
 - 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를 선정함에 있어 2007년에 만들어진 특허를 2009년에 선정기준으로 삼은 뒤 현재까지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보다 발전된 기술이 있음에도 경쟁을 유도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발주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동종 기술간 불공정 경쟁 문제, 계약의 부적정성 문제, 계약단가의 적정성 여부 등 특정기술 선정과 관련하여 의혹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청구함.